

통일교육 활성화 세미나

통일교육 종합평가와 향후 발전과제

정산경

○ 일시 : 1998년 10월 30일 (금) 09 : 30 ~ 18 : 00

○ 장소 : 통일교육원 교육관 3층 세미나실

통 일 교 육 원

《 목 차 》

□ 제1주제 : 통일교육원 교육프로그램 종합평가 및 발전방향 모색

○ 「단기과정」 종합평가 및 발전 방향 1
(이우영 민족통일연구원 연구위원)

○ 「통일대비과정」 종합 평가 및 발전 방향 16
(한만길 한국교육개발원 통일교육연구팀장)

□ 제2주제 : 남북한 사회통합의 실현을 위한 통일 교육 방안

○ 문화통합을 지향하는 통일 교육내용의 개선방향 연구 ... 29
(오기성 북한연구소 연구위원)

○ 남북한 사회통합의 실현을 위한 주민교육의 기본방향 ... 62
(조치현 남북회담사무국 상근위원)

일 정 표

< 제1주제 >

▶ 09:30~12:30 통일교육원 교육프로그램 종합평가 및 발전방안 모색

사회 : 양재성 (통일교육원 교수)

발표 : 이우영 (민족통일연구원 연구위원)

한만길 (한국교육개발원 통일교육연구팀장)

토론 : 어명하 (민족통일연구원 초청연구위원)

권영경 (통일교육원 교수)

고정식 (배재대 교수)

전숙희 (한국평생교육기구교육복지연구원장)

엄기정 ('98 통일행정요원반 교육이수자)

질의응답 및 종합평가

▶ 12:30~13:30 오찬

< 제2주제 >

▶ 14:00~17:00 남북한 사회통합 실현을 위한 통일교육방안

사회 : 김동수 (통일교육원 교수)

발표 : 오기성 (북한연구소 연구위원, 교육학 박사)

조치현 (남북회담사무국 상근위원)

토론 : 고성호 (통일교육원 교수)

김영수 (서강대 교수)

황병덕 (민족통일연구원 연구위원)

김문태 (성균관대, 박사)

송민석 ('98 통일교육요원반 교육이수자)

질의응답 및 종합평가

▶ 17:00~18:00 만찬

**통일교육원 교육프로그램 종합평가 및
발전방안 모색**

「단기과정」 종합평가 및 발전 방향

이 우 영 (민족통일연구원 연구위원)

〈 목 차 〉

- I. 문제제기
- II. 교과과정의 평가
- III. 통일교육원 교육 활성화를 위한 제언
- IV. 맺음말

I. 문제제기

최근에 통일교육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첫째, 구호적인 차원에서가 아니라 실질적인 차원에서 통일을 생각하기 시작하였으며, 둘째, 독일 통일의 후유증에서 통일대비의 필요성을 실감하였으며, 셋째, 기존의 통일교육이 실효성이 없었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통일교육이 필요한 이유를 찾아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금까지 통일에 대한 준비가 소홀하였으나 현재의 상황변화는 통일에 대한 준비를 대단히 시급한 과제로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동구권의 몰락이나 독일의 통일에서 보듯이 겉으로 공고하게 보이는 북한체제도 돌발적인 사태로 붕괴할 수도 있다. 이 경우 남한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통일이 불가피한 상황이 생겨날 수 있다. 통일의 준비가 부족한 채 급격하게 통일이 된다면 정치·경제·사회적으로 커다란 혼란을 발생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와는 달리 점진적으로 통일을 이룩할 경우에도 통일에 대한 준비는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단계적으로 통일을 추구할 경우 첫 번째 단계인 화해협력시대에는 남북한간의 교류가 활성화될 것이다. 이 경우 교류의 주체가 되는 국민이나 단체 그리고 정부가 북한에 대한 지식이나, 통일에 대한 비전이 명확하여야 다음 단계로의 발전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둘째, 통일의 주체는 일반 국민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과거 권위주의 정권시절에는 통일정책의 수립부터 진행에 이르기까지 소수 지배집단에 의하여 이루어졌으나 앞으로는 통일방안이나 정책 그리고 통일이후의 체제유형도 국민들의 동의하에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일반 국민들이 북한이나 통일에 대하여 정확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

✓ 셋째, 교류단계에서 남북한 주민간에 갈등이 야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장기간에 걸친 분단상황으로 남북한 주민간의 이질성은 대단히 심화되었다. 따라서 교류단계에서 남북한 주민들은 일상적인 차원에서 오해가 생겨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남북한간의 교류가 의도하지 않은 결과, 즉 적대감이나 이질감의 증폭으로 귀결될 여지도 없지 않다.

넷째, 통일이후의 여러가지 갈등을 감소시키기 위해서이다. 분단국의 통일이후에는 경제적·정치적·사회적 문제가 폭발할 수 있다. 남북한의 경우에는 전쟁의 경험들을 고려할 때 여타의 분단국들보다 더욱 많은 갈등이 야기될 수 있을 것이다. 제도나 법을 정비하고 경제적으로 일정한 수준의 삶을 보장하는 것이 갈등을 약화시킬 수 있는 근본적인 방안이 될 것이나 그러한 처방은 많은 시간과 자금이 소요된다. 그러나 국민적인 인내와 노력이 있다면 통일이후의 사회갈등이 약화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근본적인 해결에 필요한 시간과 자금도 절약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구체적인 통일형태나 통일이후의 상황까지 일반 국민들이 숙지하고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통일교육의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통일교육이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¹⁾ 또한 내용과 방법에 있어서도 적지 않은 문제점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²⁾ 기존 통일교육의 문제점 가운데 특히 주목할 만한

1) 민족통일연구원에서 실시한 전국민 대상 여론조사에 따르면 통일교육을 받아 본 적이 없다는 사람이 59.4%에 이른다. 최수영·이우영·조민·최진욱, 「1995년도 통일문제 국민여론조사 결과」, (서울:민족통일연구원, 1995) 참조.

2) 기존 통일교육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통일교육이 반공교육과 동일시되었다는 점이다. 예컨대 국민윤리 교과서의 서술방향을 보면 북한에 대하여 적대관계를 유지하고 적개심을 고취시키도록 하고 있다. 윤건영, "남북교류협력시대의 통일교육의 방향," 「북한·통일연구 논문집, 6」, (서울: 통일원 1992), p. 443. 둘째, 통일대비 교육과 도덕교육의 관계가 모호하였다고 할 수 있다. 민주시민으로 양성은 것이 통일과 연관되어 있지만, 각자의 위계적 관계는 명확하여야 한다. 원칙적으로 통일에 대한 교육은 건전한 시민교육을 바탕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건전한 민주시민으로서의 도덕 양양이 없이 반공교육만을 받는다면, 편협한 우익태러집단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셋째, 기존의 국민윤리교육은 정치권력의 변화와 접하게 연결되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남한이 지향하고 있는 민주적 체제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내면화하는 것은 어느 정도 불가피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체제의 정당화와 정권의 정당화는 같은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치적을 강조한다든지 파행적인 집권과정을 정당화하는 내용으로 수행되어온 경향이 없지 않았다. 셋째, 교육대상이 지나치게 학생위주로 구성되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학생집단이 시민교육의 일차적인 대상이 되는 것은 분명하나, 그들만이 교육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최근에 사회화이론에서도 일생에 걸친 사회화를 강조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학교를 졸업한 성인들을 위한 시민교육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넷째,

것이 성인을 대상으로 한 통일교육이 상대적으로 빈약하다는 것이다. 통일 문제를 둘러싼 내외환경이 급박하게 변화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학교에서 통일교육은 일정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정한 재교육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더욱이 현재 세대별로 보면 기성세대일수록 통일교육의 경험이 적다(표 1참조). 또한 50대이상의 장년세대들은 냉전 구도하에 살아왔기 때문에 북한에 대한 생각이 일방적인 경향이 많다. 이들은 탈냉전시대와 같은 환경변화에 익숙하지 않고, 북한에 대한 이미지도 고정되어 있다. 그러나 북한이 상대적으로 정체된 국가라고 할지라도 일정한 사회변화를 경험하고 있으며, 급변하는 국내외적인 환경은 한국의 통일 정책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변화를 기성세대에게 교육하여야 통일문제를 둘러싼 불필요한 세대갈등을 감소시킬 수 있다. 이와 같은 이유들 때문에도 성인들을 대상으로 한 통일교육은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된다.

<표 1> 연령별 통일교육 경험

		20대	30대	40대	50세 이상
통 일 교 육 경 험	없다	52.5	56.5	61.8	73.0
	1~2회	29.0	26.4	21.9	11.5
	3~4회	10.6	8.5	9.6	4.9
	5회이상	7.8	8.7	6.8	10.7

* 최수영·이우영·김성찬·김병로, 「1994년도 통일문제국민여론조사 결과」,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4), pp. 55~81.

현재 성인들을 위한 통일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는 곳은 통일교육원 밖에 없다고 보아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1972년 통일원 소속의 통일연수 소로부터 시작한 통일교육원은 다양한 전문가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통일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 글은 통일교육의 활성화라는 차원에서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통일교육원의 교육프로그램을 평가하고 개선방향을 모색하

국내외적 환경변화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 사회주의권의 몰락으로 인하여 자본주의의 우세함은 증명되었다. 또한 남북간에 집중되는 경제적 격차도 남한체제의 우월함을 보여주고 있다. 냉전시대나 세계전쟁시대에 효율적인 교육내용은 더 이상 설득력이 없다고 할 수 있다. 국제적 환경뿐만 아니라 남북한의 내부사정도 변하였다. 환경변화에 부합하지 못한 통일대비 교육은 실효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섯째, 기존의 시민교육의 내용이 전반적으로 추상적이고 거시적인 차원에서 머물러 있다고 할 수 있다. 통일과 연관된 교육도 현실적합성과 구체성이 있어야 설득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개인들의 실천과도 연결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현재 통일교육원은 통일대비요원을 대상으로 2주 내지 3주에 걸친 장기교육과 전문과정, 일반과정, 특별과정 등 1~5일에 걸친 단기교육과정이 있다. 이 글은 주로 단기교육과정을 중심으로 볼 것이다.

II. 교과과정의 평가

<표 2> 통일교육원 교과내용

구 분	교 과 내 용
통 일 문 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일정책 기초방향 ○ 남북한 통일방안 비교 ○ 주변정세와 통일환경 ○ 남북대화와 교류협력 ○ 남북한 관계 주요현안 등
북 한 실 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의 북한동향 ○ 북한의 대남전략 ○ 분야별 북한실태 ○ 북한이탈주민 및 방북경험자와의 대화 등 시청각자료 상영
통 일 대 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일대비 기본방향 ○ 분야별 통합과제 ○ 사회주의국가 체제전환 사례본 ○ 북한이탈주민 남한사회적응 실태 ○ 독일 통일의 교훈과 우리의 통일 대비 등
체험·참여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판문점 등 통일안보현장 시찰 ○ 주제별 토의·과제연구 대담토론 등

현재 통일교육원 남북 화해·협력과 평화적 통일 실현을 위한 바람직한 통일관 정립, 북한실상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올바른 대북인식 확립, 통일문제에 대한 국민적 합의 조성과 올바른 대북인식 확립이라는 교육 목표하에 통일교육을 수행하고 있다. 교과과정은 크게 사회 및 학교에서의 통일교육 담당요원과 정부부처 대북업무 담당공무원을 중점 대상으로 한 '전문과정', 민간의 직능·사회단체간부와 각 부처 공직자 등을 대상으로 정확한 북한실상 이해와 건전한 통일관 정립을 목표로하는 '일반과정', 그리고 북한방문

기업인·종교인·경수로 건설인력들에 대한 사전 안내교육을 포함하여, 대학생 및 「평통」자문위원 등을 대상으로한 '특별과정'으로 나누어져 있다. 현재 실시되고 있는 교육내용은 '통일문제', '북한실태', '통일대비'의 세 가지 분야로 나누어져 있다(표 2참조).

<표 3> 교과과정별 교육내용

과 정	교 과 내 용
사회교육반 (통일교육전문위원)	○ 남북관계현황과 대북정책 추진방향 ○ 분단국 사례와 우리의 통일 ○ 주변정세와 통일전망 ○ 탈북주민과의 대화
대학생반 (북한·윤리학전공학생)	○ 통일환경 ○ 최근북한정세 ○ 북한경제현황 ○ 탈북주민과의 대화 ○ 통일정책 ○ 분입도의 ○ 종합토의
사회교육반 (향군안보강사)	○ 통일환경 ○ 북한정세 ○ 북한의 대남전략 ○ 북한경제현황 ○ 탈북주민과의 대화 ○ 통일정책 ○ 종합토의
학교교육반 (중등교사)	○ 통일환경 ○ 북한정세 ○ 북한경제현황 ○ 북한의 교육실태 ○ 통일정책 ○ 통일교육의 기본방향 ○ 탈북주민과의 대화 ○ 분입도의 ○ 종합토의
공직자반 (통일원공무원)	○ 남북한통일정책비교 ○ 남북현안문제 ○ 북한경제현황 ○ 통일환경 ○ 북한체제의 특성 ○ 통일대비교육현황 ○ 탈북주민과의 대화 ○ 독일통일의 교훈과 문제점 ○ 남북교류협력 ○ 나진·신봉지역 개발현황과 전망 ○ 대북경수로 사업추진현황 대담토의
남북교류협력반	○ 통일정책과 남북현안문제 ○ 북한주민의 가치관과 의식구조 ○ 경수로사업 추진현황 ○ 북한의 경제 ○ 남북교류협력법·제도해설 ○ 북한의 대남전략 ○ 최근북한동향 ○ 남북경협청취 및 의정서 해설 ○ 방북시 행동요령

구체적인 교육내용은 교육생이나 교과과정에 따라 다르게 편성되어 진다. 예를 들어 사회교육(통일교육전문위원)반은 남북관계현황이나 분단국 통일 사례, 주변정세 등 통일문제가 중점이 되고 있는 반면, 대학생(북한·윤리학전공학생)반은 최근북한정세와 같이 북한 실태가 상대적으로 강조된다(표 3 참조). 교육내용이 다르게 편성되어 있는 것은 교육과정의 특성과 피교육생의 특성을 비교적 잘 고려하여 편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교육내용의 편성이 잘 되어있다는 것은 교육과정에 상관없이 피교육생의 교육평가가 비교적 긍정적으로 나온 것으로도 증명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표 4, 5, 6 참조).

피교육생들은 강의 자체에 대해서도 높은 평가를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교육자체나 교육내용의 효과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다면 교육원 교육프로그램은 전반적으로 효과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전반적인 평가가 긍정적임에도 불구하고 교육과정이나 피교육생의 특성에 따라서 평가의 정도는 다소간 차이가 있다는 것은 유의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보안경찰직과 신입사무관 그리고 대학생반이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평가가 적다. 보안경찰직 공무원의 경우는 직종의 전문성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였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으며, 신입사무관이나 대학생의 경우 상대적으로 젊은 세대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현재 통일교육원의 교육이 젊은 세대에게 상대적으로 호응이 적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표 4> 피교육의 강의 평가 (10점 만점)

구 분	강의내용의 적절성	강의기법의 적절성	교수의 강의능력
통일교육전문위원	8.3	8.1	8.3
사회교육담당자	7.8	7.3	8.0
민방위소양강사	8.0	8.0	8.0
대 학 교 수	7.5	7.5	7.9
중 등 교 사	7.9	7.2	7.7
관리직공무원	8.3	7.6	8.1
수습사무관	7.5	5.9	6.9
교육행정직공무원	8.0	7.3	7.9
보안경찰직공무원	7.7	7.3	8.0
공안공무원	9.0	9.0	9.0
정 훈 장 교	8.4	7.7	8.2
통일공무원	7.5	7.2	7.4
사회교육기관장	8.4	7.7	8.2
대학생(북한·윤리학 전공)	7.9	7.6	8.2
계 (평균)	8.0	7.5	8.0

<표 5> 교육의 유익하였나 여부에 대한 질문

교육 대상	매우 유익하다	다소 유익하다	그저 그렇다	무응답
통일교육전문위원 연찬반	46명(61.3%)	21명(28.0%)	8명(10.7%)	-
공직자반(보안경찰직)	19명(45.2%)	18명(42.9%)	5명(11.9%)	-
교장·교감반	50명(61.7%)	27명(33.3%)	4명(4.9%)	-
통일교육전문위원 신규반	53명(66.2%)	26명(32.5%)	1명(1.3%)	-
공직자반(관리직 공무원)	39명(62.9%)	21명(33.9%)	1명(1.6%)	1명(1.6%)
공직자반(신임사무관)	27명(32.5%)	48명(57.8%)	6명(7.2%)	2명(2.5%)
공직자반 (정부관련기관간부)	35명(76.1%)	10명(21.7%)	-	1명(2.2%)
대학생반	52명(57.8%)	33명(36.7%)	1명(1.1%)	4명(4.4%)

<표 6> 교육내용에 대한 평가

교육 대상	많은 도움	다소 도움	그저 그렇다	무응답
통일교육전문위원 연찬반	49명(65.3%)	21명(28.0%)	5명(6.7%)	-
공직자반(보안경찰직)	23명(54.8%)	15명(35.7%)	4명(9.5%)	-
교장·교감반	47명(58.0%)	32명(39.5%)	2명(2.5%)	-
통일교육전문위원 신규반	53명(66.2%)	24명(30.0%)	1명(1.3%)	2명(2.5%)
공직자반(관리직 공무원)	45명(72.6%)	15명(24.2%)	1명(1.6%)	1명(1.6%)
공직자반(신임사무관)	29명(34.9%)	49명(59.0%)	3명(3.6%)	2명(2.5%)
공직자반(정부관련기관간부)	34명(73.9%)	11명(23.9%)	1명(2.2%)	-
대학생반	66명(73.3%)	33명(25.6%)	1명(1.1%)	-

과목별로는 교육과정과 교육집단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표 7, 8 참조). 과정에 따라 교과내용도 차이가 있으므로 동일한 기준에서 비교하는 것은 차이가 있음은 분명하다. 비교적 통일환경은 피교육생이나 교과과정에 상관없이 높이 평가를 받았으나 신입사무원이나 대학생들은 상대적으로 탈북주민과의 대화를 높이 평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반면에 통일 교육전문위원이나 교장교감반등에서는 상대적으로 정부의 통일정책을 중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개별과목에 대한 평가가 피교육생의 성격에 좌우된다고 할 수 있으나, 이에 못지 않게 강사의 영향력을 배제할 수 없다. 특정 과목이 강사가 다를 경우 유익하고 높은 수준의 강의에서 부적절하고 수준이 낮은 강의로 바뀌는 경우도 있다는 것에서 이러한 추론이 가능하다.

전반적으로 교과내용이나 과목 구성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고는 하나 다음의 몇 가지 점에서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첫째, 교육내용에 있어서 피교육생의 특성을 보다 적극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젊은 세대들은 토론위주의 교육이나 시청각 교육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으며, 교육방법에 대한 불만도 적지 않다. 따라서 동일한 교과목이라고 할 지라도 피교육생이 직업이나 사회적 성분에 따라 다른 교안을 만들거나 교육 방법을 다르게 사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더불어 현재도 피교육생의 성격에 따라 교과내용이 다르게 편성되고 있으나, 이와 같은 차이를 보다 확대필요가 있다.

둘째, 현재의 교육내용 구성이나 교육내용이 전반적으로 거시적(巨視的)이고 구조적(構造的)인 차원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 통일문제에 대한 안목을 키운다든지 통일철학을 세우는데 이러한 교과 및 교육내용 구성이 도움이 될 수는 있겠으나, 논의 자체가 추상적으로 흐르는 까닭에 현실과의 적합성이 떨어지고 피교육생의 관심저하를 유도할 수 있다. 피교육생의 건의사항에서 이러한 문제가 적지 않게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피교육생의 성향에 부합하는 전문적인 강좌를 개설하는 동시에 강의 내용과 초점을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차원으로 맞추는 시도가 필요하다. 주제를 보다 세분화한 강의의 개발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표 7> 가장 유익하였던 과목 (1)

교육대상	과목명	인원 (%)
통일교육 전문위원 연찬반	특강	30명 (40%)
	정부의 대북정책	22명 (29.3%)
	최근북한정세	4명 (5.3%)
	종합토론	4명 (5.3%)
	탈북주민과의 대화	2명 (2%)
	무응답	13명 (17.3%)
공직자반 (보안경찰직)	종합토의	12명 (28.5%)
	통일환경	11명 (26.1%)
	북한의 대남전략	4명 (9.5%)
	북한정세 정부의 대북정책	3명 (7.1%), 3명 (7.1%)
	무응답	9명 (21.4%)
교장·교감반	통일환경	16명 (19.8%)
	정부의 대북정책	10명 (12.3%)
	종합토의	9명 (11.1%)
	최근북한정세	7명 (8.6%)
	탈북주민과의 대화	3명 (3.7%)
	북한의 대남전략	1명 (1.2%)
	무응답	35명 (43.2%)
대학생반	탈북주민과의 대화	43명 (47.8%)
	통일환경	15명 (16.7%)
	종합토론	11명 (12.2%)
	최근북한정세	4명 (4.45%)
	정부의 통일정책	2명 (2.2%)
	무응답	15명 (16.7%)

<표 8> 가장 유익하였던 과목 (2)

교육대상	과목명	인원(명)
통일교육 전문위원 신규반	통일환경	19명 (23.8%)
	특강	10명 (12.5%)
	정부의 대북정책	7명 (8.8%)
	탈북주민과의 대화	6명 (7.5%)
	독일통일의 교훈과 문제점	4명 (5.0%), 4명 (5.0%),
	북한경제현황우리의 경제	4명 (5.0%)
	남북교류협력현황 최근북한정세	3명 (3.8%), 3명 (3.8%)
	효율적 홍보기법	2명 (2.5%)
	대담토론	2명 (2.5%)
	무응답	16명 (20.0%)
공직자반 (관리직공무원)	종합토의	26명 (41.9%)
	통일환경	14명 (22.6%)
	우리의 경제	8명 (12.9%)
	정부의 대북정책	5명 (8.0%)
	탈북주민과의 대화	3명 (4.8%)
	최근북한정세	1명 (1.6%)
	무응답	5명 (8.1%)
공직자반 (신입사무관)	탈북주민과의 대화	31명 (38.3%)
	방북경험자와의 대화	22명 (27.2%)
	종합토의	10명 (12.3%)
	남북현안문제	4명 (4.9%)
	최근북한정세·정부의 대북정책	3명 (3.7%), 3명 (3.7%)
	무응답	8명 (9.9%)
공직자반 (정부관련 기관간부)	통일환경	15명 (32.6%)
	최근북한정세	7명 (15.2%)
	방북 경험자와의 대화	5명 (10.9%)
	정부의 대북정책	3명 (6.5%)
	탈북주민과의 대화	1명 (2.2%), 1명 (2.2%)
	종합토의	
	무응답	14명 (30.4%)

셋째, 전체 교과과정에서 정치문제와 관련된 과목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정치적인 문제가 중요하기는 하지만 최근 북한이나 통일문제에 대해서도 경제적인 문제나 사회문화적인 문제로 관심이 전이되는 경향이 없지 않다. 이와 같은 사회적 욕구에 부응할 수 있는 교과목의 개발이 필요하며 이를 적극적으로 교육에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Ⅲ. 통일교육원 교육 활성화를 위한 제언

1. 통일교육원의 위상 정립

사회교육이라는 차원에서 통일교육을 역할을 수행하였던 것이 예비군이나 민방위 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³⁾ 그러나 기존의 예비군이나 민방위 교육은 기본적으로 군교육의 연장선에 있는 까닭에 안보위주의 교육이 될 밖에 없으며, 이러한 교육은 새로운 환경에 적합한 통일교육이 되기가 어렵다. 현실에 적합한 교육내용을 정립하고 새로운 형식의 사회교육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통일대비 사회교육은 다양한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 단체와 같은 국가부분과 각종 사회단체가 통일을 대비한 사회교육의 주체가 될 수 있을 것이며, 언론매체의 통일교육, 각종 출판사업, 컴퓨터 통신, 통일관련 소프트웨어의 제작 등 다양한 방식으로 통일교육이 추구될 수 있다. 이와 같이 주체가 다원화되고 다양한 방식의 통일대비 사회교육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전반적인 통일교육의 내용과 방향을 주도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그렇지 못할 경우 주체에 따라 통일교육이 상충되어 통일교육이 통일을 대비하는데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지보다는 통일에 대한 소모적인 논란을 야기할 수도 있다.

통일교육원은 통일대비 사회교육을 직접 담당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이다. 학교교육을 마친 일반인들이 통일에 대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통일교육원이 변화하는 통일환경과 정부의 공식적인 통일방안과 통일정책을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교육 홍보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3) 통일교육의 경험은 남녀별로 차이가 크다(남성 56.2%, 여성 26.2%). 민족통일연구원, 「1994년도 통 제국민여론조사 결과」, p. 80. 이와 같이 남성의 통일교육 경험이 많은 것은 군경험과 예비군 및 민방위 교육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필자의 면접조사과정에서도 이러한 대답을 얻을 수가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직접 교육 못지 않게 통일을 대비한 전반적인 교육의 기본 방향과 통일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작업도 통일교육원이 할 수 있는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다양한 통일 대비 사회교육기관간의 역할 분담, 통일교육 담당자의 재교육도 교육원이 할 수 있는 중요한 작업이 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통일교육원은 통일대비 사회교육을 총괄하는 기관이 될 필요가 있다.

2. 교육 목표의 정립과 교육 방법의 다양화

교육원의 통일교육은 단순한 북한 소개나 정부정책의 홍보 차원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통일의 당위성을 확보하고 통일에 대한 국민적인 공감대를 확대하는 동시에 실질적으로 통일을 대비하는 일꾼들을 양성한다는 목표하에 통일교육을 주도하여야 한다. 이러한 차원에서 교육원 통일교육은 다음에 몇가지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첫째, 독일 경우처럼, 통일교육을 일반적인 시민교육의 맥락에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 통일이 단순한 남과 북의 정치경제적 통합이 아니라 더 나은 사회체제로의 전환이라고 본다면, 통일교육 역시 발전적인 사회체제를 향한 시민교육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마찬가지로 차원에서 통일교육은 남한이나 북한이 아닌 민족적 차원에서 추진되어야 한다.

둘째, 통일대비교육을 남한체제의 우월성을 증명하는데 목적을 두어서는 안될 것이다. 남한의 체제의 상대적 우월성은 이미 명확히 증명되었으며,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환경도 남한에게 절대로 우월하다.⁴⁾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의 현실을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 체제를 비판하기 위한 교육은 피교육자들에게 거부감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북한체제 비판 교육은 북한 사람들에 대한 맹목적인 우월감을 고취시킬 우려가 있다.

셋째, 변화하는 현실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남북한 관계나 국제환경이나 급격하게 변화하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비록 북한이 정체된 사회라고 하지만 내용적으로 본다면 북한도 끊임없이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또한 정부의 통일정책의 근본에는 커다란 변화가 없다고 하더라도 세부적인 전략은 변화하는 내외환경에 따라 시시각각 변하고 있다. 사회교육이 기본적으로 재교육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학교교육과 달리 변화하는 통일환경을 시의 적절하게 소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넷째, 통일교육을 직접 수행하는 것보다는 통일교육 전반을 관리하는데

4) 남한은 주변국가들과 모두 외교관계를 맺고 있으나 북한은 일본 및 미국과 수교협상조차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 각급 단위 통일교육의 역할, 목표 등을 결정하고 다양한 통일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작업은 통일교육원만이 할 수 있는 고유영역 중의 하나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학교교사를 포함하여 통일교육을 담당하는 교육자들에 대한 재교육에 특별히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교육원 통일교육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교육내용의 개편이 필요하다. (첫째, 미래지향적인 통일교육이 되어야 한다. 북한의 현실이나 남북한 교섭자와 같이 현재와 과거를 다루는 교육일지라도 통일이라는 미래를 지향하도록 교과내용이 이루어져야 한다. 예를 들자면 북한의 경제체제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북한체제의 구조적 모순이나 현재의 경제난을 교육하는 것 못지 않게 앞으로 북한경제가 어떻게 변할 것인가, 남한과의 경제협력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를 교육하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개별적인 교과과정이 추구하는 바가 명확하여야 하며, 동시에 각 과정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북한의 현실을 소개하는 강의와 귀순자 대답은 각각이 추구하는 내용은 다를 수는 있어도 전체적으로 북한에 대한 인식 제고라는 목표를 향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대상자별 교육내용의 차별화를 적극적으로 추구하여야 한다. 기존의 교육 프로그램은 대상자의 직업에 따라 교육내용과 방법을 달리 하였다. 그러나 같은 직업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세대간 의식차이는 클 수가 있다. 나이가 많은 집단에게는 강의가 효과적일 수 있으나 젊은 세대들은 시청각교육에 더욱 흥미를 느낄 수 있다. 또한 여성들은 북한의 일상사에 관심이 많을 수가 있으나 남성들은 북한의 권력갈등에 더욱 관심이 있을 수가 있다.

넷째, 피교육자의 능동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여야 한다. 단순한 강의보다는 토론과 대답이 이러한 목적에 부합한다. 또한 통일 후 사회문제를 예상하는 상황극을 꾸미도록 하거나, 젊은 세대들에게는 통일과 관련된 컴퓨터 프로그램을 시도하도록 유도할 수도 있을 것이다.

다섯째, 다양한 피교육생들의 성향을 고려할 때, 동일 대상이라고 할 지라도 수업의 선택권을 부여할 방법도 모색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북한의 실태' 과목의 경우 정치, 경제, 사회문화 등의 수업을 동시에 개설하여 취향이나 전문성에 맞게 피교육생이 수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여섯째, 교육원내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을 벗어나는 시도를 해볼 필요가 있다. 교육방송과 같은 대중매체를 활용하거나 각종 출판사업이 하나의 예가 될 수 있다. 또한 각종 학교나 직장의 일반 연수 등에 통일교육원의 교수진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일곱째, 통일교육원에 교육은 일방적으로 정보의 제공만을 목표로 하는 것에서 벗어나야 한다. 통일교육원의 교육은 피교육생들과의 의사소통을 통하여 국민적 여론을 수렴하는 장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의사소통 과정은 통일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의 훌륭한 여론수렴 창구가 된다. 따라서 이와 같은 의사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는 교과목의 개발, 수업방식의 전환이 필요하며, 결과를 취합하는 작업도 동시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여덟째, 새로운 교육대상자의 영역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현재 교원의 경우 윤리와 사회과 교사들을 중심으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동일한 교사가 반복적으로 교육을 받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그러나 통일대비 교육은 윤리나 사회과 뿐만 아니라 역사이나 어문과를 포함하여 전체 교원에게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IV. 맺음말

통일교육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 정부도 이와 같은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여 현재 통일교육지원법을 제정하고 입법화하고자 하고 있다. 그러나 통일교육이 중요하고 필요하다고 해서 무조건 통일교육의 양만 확대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또한 현실적으로 민주화된 국가가 통일교육을 무조건적으로 강제할 수도 없다. 중요한 것은 어떤 내용의 통일교육을 어떻게 잘 수행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왜냐하면 과거 정권에서 반공교육을 경험한 사람들은 여전히 통일교육을 체제홍보나 정권 홍보로 오해하는 경우도 없지 않다.

따라서 통일교육의 필요성과 의미를 일반 국민들이 납득하도록 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통일교육에서 국민들이 필요로 하고 요구하는 바를 교과과정에 포함하는 것도 통일교육에 대한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 욕구를 증진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정부에서는 통일교육하면 정부의 통일정책 교육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어떤 내용의 통일교육을 바라는가 하는 질문에 대하여 국민들은 통일이후의 상황, 북한의 실상, 통일국가의 경험, 북한주민과의 공동생활방법,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한의 통일정책의 순으로 응답하고 있다.⁵⁾

또한 통일이 민족적인 차원의 문제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교육원의 교과과정 설정부터 일반인의 참여폭을 확대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특히 통일정

5) 민족통일연구원, 「1994년도 통일문제 국민여론조사 결과」,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4), p. 83.

책의 수립이 국내정치상황에 좌우된다는 견해가 적지 않은 현실을 고려할 때, 정부와는 다른 견해를 갖고 있는 집단도 통일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 통일교육의 활성화에 도움이 된 것이다.⁶⁾ 통일에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것처럼 통일교육에도 국민적 동의가 전제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는다면 비록 좋은 내용의 통일교육이라고 할지라도 교육적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다.

통일교육의 활성화과정에서 통일교육원은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특히 단순히 교육을 직접 실시하는 기관이 아니라 다양한 통일교육을 조정하고 방향을 제시하고, 새로운 교육방법의 개발도 담당하는 등 보다 적극적으로 역할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6)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내정치상황에 따라 통일정책이 수립된다는 견해가 제일 많았고(23.6%), 다음으
국민들의 여론수렴, 북한에 대처하기 위해서 순으로 응답하였다. 최수영·이우영·김성철·김병로, 「1994년도
통일문제 국민여론조사 결과」, p. 146.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교육원 교과과정 개편과정에 정당을 비롯
한 다양한 사회집단을 포함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통일대비과정」 종합평가 및 발전 방향

한 만 길 (한국교육개발원 통일교육연구팀장)

〈 목 차 〉

- I. 문제의 제기
- II. 통일교육의 운영 방향
- III. 통일대비교육 프로그램 운영의 평가
- IV. 통일대비 교육프로그램의 개선 방안
- V. 결론

I. 문제의 제기

- 통일은 우리 민족 최대의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청소년 학생들은 통일에 대하여 무관심하거나 심지어 기피하는 현상이 증가하고 있어서 적극적인 통일교육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통일 기피증 또는 통일 무용론은 청소년 뿐만 아니라 일반 성인 지식인 사이에서도 점차 확산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 학교교육은 지식 중심의 입시 준비 교육에 매몰되어 있어서 교사들조차 통일 문제를 외면하거나 무관심하고 있으며, 학교교육에서도 통일교육을 등한시하고 있는 상황임
- 한편 햇볕정책을 통하여 대북관계를 개선해 나가면서 북한을 개방사회의 일원으로 포용한다는 현 정부의 정책에 기초해서 볼 때, 현재의 상황에서 북한체제와 사회에 대하여 어떠한 시각으로 바라 볼 것인지, 그리고 통일에 대하여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인지에 대한 확실한 인식이 부족한 형편임

- 또한 우리가 예상치 못하게 북한 체제의 변화가 초래되거나 통일상황이 갑자기 전개될 것에 대비해야 한다는 인식도 있으며, 이에 대한 각 분야의 준비도 있어야 할 것임
- 이상의 문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통일교육의 방향과 과제는 무엇인지 논의해야 할 것임

II. 통일교육의 운영 방향

1. 통일환경의 변화에 따른 통일교육의 방향

- 햇볕정책 즉 대북 포용정책의 추진에 따른 대북한 화해 및 통일교육의 방향을 정립해야 함
- 현 정부의 대북정책은 무력도발 불용, 흡수통일 배제, 교류협력을 통한 관계 개선임
 - 안보의식과 화해의식을 균형있게 증진시키는 노력이 필요함
- 화해의식과 안보의식을 균형있게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통일교육의 실천이 필요함
- 통일문제를 합리적으로 인식하고 비판할 수 있는 판단력을 함양하는 동시에 개방적이고 성숙한 자세로서 북한 주민을 포용할 수 있는 태도를 형성할 필요가 있음

2. 통일교육의 일반적 접근 방법

(1) 객관적 사실에 기초하여 통일의지를 심어 주는 교육

- 통일교육은 북한 및 통일 문제에 대한 객관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하여 현실을 정확히 판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실적인 접근이 필요

√ (2) 교육 대상자의 요구에 부응하는 교육

- 교육대상자의 연령, 직업, 직무에 기초하여 관련되는 사항을 중심으로 다루어야 함
- 교육대상자의 관심과 흥미를 고려하여 주제와 내용을 설정할 필요가 있음

(3) 연수생들의 관심을 고려한 생활문화 중심의 교육

- 북한 및 통일에 관한 교육은 학생과 성인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생활문화를 중심으로 구성
- 일반적으로 가정생활, 의식주 생활, 가족관계, 생활관습, 사회생활 등에 대하여 관심과 흥미를 가지고 있음.

(4) 연수생들이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교육활동 전개

- 학습자의 자기주도적 학습활동을 적극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교육프로그램을 구성함
 - 연수생들이 자신의 관심과 역할에 부합하는 과제를 선택하여 이를 수행하는 방식
 - 현장답사, 실천활동, 사례 보고 등의 다양한 활동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통일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형성하는 과정이 필요함

Ⅲ. 통일대비교육 프로그램 운영의 평가

1. 교육프로그램의 전반적인 성과

- 북한 실상 및 통일문제 전반에 대하여 새로운 정보와 지식을 습득하고, 이해의 폭을 넓혀 통일의지를 새롭게 다지는 계기가 된 유익한 교육이었음

- 전방 시찰 및 탈북 주민과의 대화 시간이 매우 인상적이었으며, 북한의 현실과 통일문제를 실감 있게 이해하는데 도움되었음

2. 교육프로그램의 명확한 목표 설정 문제

(1) 통일교육의 일반적 방향 설정이 미흡함

- 통일교육에 대한 의견조사에서 일반적으로 통일교육의 개념과 방향이 체계적으로 정립되어 있지 않다는 지적이 많음
- 통일교육에 대한 합의된 방향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음
 - 종래 냉전적 시각에서 접근하는 사례가 있음
- 안보의식을 중요하게 다루어야 하지만 북한에 대한 지나친 부정이라든지 반공의식을 주입하는 형식이 되어서는 않된다는 지적이 있음

(2) 통일대비 교육프로그램의 목표 설정 문제

- 현실적으로 직접 관련되는 분야는 북한 및 통일 관련 업무 종사자, 연수기관의 담당자, 초중등학교 교사에 한정되어 있음
 - 이들 관계자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의 목표 설정이 필요함
 - 업무와의 연계성 문제
- 통일대비 요원들의 역할과 임무는 무엇인지
 - 각 부처 수준에서 통일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인지
 - 일반적인 수준에서 북한과 통일 문제에 대한 관심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마련한 프로그램인지
- 행정요원과 교육요원의 교육프로그램 차별성이 보이지 않음
 - 행정요원은 일반 행정 분야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 교육요원은 교육분야에 관련되는 이해를 높이도록 해야 함

3. 교육프로그램의 명확한 목표 설정 문제

(1) 교육대상자에 따른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이 미비

- 행정요원과 교육요원에 대한 과목의 구분이 불명확함
- 과목이 획일적으로 설치되어 있어서 선택의 여지가 없음
- 통일대비 행정요원들은 각 행정 분야별로 서로 다른 임무를 수행할 것이며, 이에 관한 교육 프로그램을 편성할 필요가 있음
 - 각 행정 분야별 세부 주제를 구체적으로 다루는 것이 타당함
- 통일대비 교육요원들은 학교교육 또는 교육행정 분야에 종사하고 있으며, 통일 상황에서도 교육 분야에서 통일업무를 수행할 것으로 볼 때, 교육 분야에서 필요한 내용을 편성해야 할 것임

(2) 과목의 유사성과 중복이 지적됨

- 경제 분야의 과목 비중이 비교적 크기 때문에 내용 상의 중복이 지적되고 있음
- 통일정책 및 통일환경 관련 과목의 내용 중복

4. 교육방법의 문제

(1) 강의식 교육방법이 중심

- 강의식 수업방법이 주로 적용되면서 연수생들이 지루함을 느끼고 있음
- 강사의 강의 기법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음
- 다양한 교수 방법, 수업 기자재의 활용이 부족함

(2) 다양한 교수학습 자료의 미비

- 각 과목에 관련되는 교수학습 자료를 체계적으로 개발하여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
- 통일에 관한 시사 자료나 각종 시청각 자료들이 풍부하게 개발·보급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부족한 실정임

IV. 통일대비 교육프로그램의 개선 방안

1. 통일대비 교육프로그램의 목표 체계화

✓ (1) 통일교육의 일반적 목표 체계화

- 통일교육의 일반 목표에 대한 재확인
 - 분단현실 및 북한 인식
 - 통일을 위한 노력
 - 통일 사회의 전망과 대비
- 대북 포용정책에 기초하는 통일교육의 방향과 목표를 설정
 - 북한 사회와 통일환경에 대한 정확한 인식
 - 북한 주민에 대한 포용적인 자세 형성
 - 북한의 위협에 대처하는 확고한 안보의식 형성
 - 통일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 함양
- 통일 상황을 대비하는 기본적인 지식과 정보의 습득
 - 통일상황에서 나타날 북한 사회와 주민의 적응 양상 전망
 - 분야별 북한 실태 분석과 통일상황 전망
 - 분야별 남북한 통합대책과 관련 업무 분석
 - 통일상황에 대비하여 점검해야 할 분야별 과제 분석

(2) 과정별 교육목표의 구분

○ 통일대비 행정요원의 교육목표 설정

- 북한 체제 및 분야별 특성에 대한 이해
- 통일정책, 통일노력, 통일상황에 대한 이해
- 담당 부처의 통일관련 업무와 통일 대비 요원의 역할
- 통일상황에서 통일대비 행정요원의 역할과 임무

○ 통일대비 교육요원의 교육목표 설정

- 북한 체제 및 북한 교육에 대한 이해
- 통일정책, 통일노력, 통일상황에 대한 이해
- 통일상황에서 통일 대비 교육요원의 역할과 임무
- 현재 남한에서 학교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한 과제와 임무

2. 통일교육 내용의 적합성 증진

(1) 공통과목과 선택과목을 두어 융통성 있게 운영

- 공통과목과 선택과목을 분리하여 설치
- 행정요원과 교육요원의 공통과목 설치
- 교육대상자에 따른 과목 선택의 기회를 주어 개인적인 관심과 직무의 특성을 살릴 수 있도록 함
- 다양하고 세부적인 과목을 설치하고 선택의 폭을 넓히도록 함

(2) 과목 및 강사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함

- 유사 중복 과목의 통합 필요
 - 경제 분야, 통일정책 및 통일환경 분야

- 추가를 희망하는 과목의 특성을 보면
 - 북한실상 및 통일정책에 관하여 보다 밀도있는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과목으로서 고위직 인사의 특강, 정보 습득 방법 등
- 과목 설정의 타당성과 내용에 대한 평가 필요
- 강사의 내용 수준과 강의 기법에 대한 평가 필요

3. 교육방법의 획기적 개선

(1) 다양한 교수방법 적용

- 강의 중심의 교수 방법에서 탈피하여 다양한 교수 방법 적용
- 시청각 매체 활용, 시사 자료 활용
- 토론식 수업은 강사와 수강자 간의 일문일답식 수업, 집단 토의 수업, 문제에 대한 판단과 대안 찾기 수업, 찬반 토론 수업 등
- 가상현실 체험학습은 통일상황의 시나리오를 상징하고 모의 실험 형태로 체험하는 수업
 - 통일 이후의 상황을 설정하여 수업을 진행할 수 있음
- 현장체험 학습은 현장답사, 단체 활동 참여 등

(2) 다양한 학습 자료를 제공

- 각 과목과 분야와 관련되는 통계, 현황 등의 기초 자료를 제시하고 이를 분석, 평가, 대책을 강구하도록 함
- 통일에 관한 시사 자료나 각종 시청각 자료를 제시하고 이를 강의 자료로 활용

(3) 연수생들의 자율적 활동 기회 제공

- 자기주도적 학습활동의 기회 제공
- 연수생들의 관심과 필요에 따라 자율적인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연수생 개인의 직무와 관련하여 과제를 설정하고 이를 해결하는 방법
- 성인교육의 학습 형태는 기관 중심의 프로그램 운영 형태 뿐만 아니라 다양하고 개방적인 학습 활동을 전개할 수 있음
 - 현장학습, 개인 자율학습 등 다양한 형태

4. 교육프로그램 운영의 개선 방안

(1) 교육프로그램의 개방적 운영

- 통일교육원 자체의 교육과정을 편성한 후에 수강생들이 자발적인 선택에 의하여 운영될 수 있는 방식을 검토
- 외부 기관이나 단체의 통일교육 프로그램을 선정하여 참여하고 이를 인정하는 방식 검토

(2) 관련 기관에 연수과정의 일부를 위탁하는 방안

- 북한 및 통일 문제를 다루는 정부 산하 연구기관의 특성과 전문성을 활용하여 연수 과정의 일부를 위탁
 - 각 부처의 관련 분야에 대한 연구 성과를 소개하고 자료를 직접 숙독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임

○ 통일대비 교육요원 연수 과정은 북한 교육, 학교 통일교육에 관한 내용을 보강해야 함

- 북한 교육 및 교과서 실태 분석
- 학교 통일교육 실천 방안
- 통일교육 자료 제작 방법 등

V. 결 론

- 통일은 우리 민족 최대의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청소년 과 성인들 사이에서 통일에 대하여 무관심하거나 심지어 기피하는 현상이 증가하고 있어서 적극적인 통일교육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통일교육의 내용과 방법, 프로그램에 대한 지속적인 평가와 연구가 필요함
- 통일교육의 효과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통일교육 관련 기관과 관계자들의 실천적인 노력이 요구되고 있음

**남북한 사회통합 실현을 위한
통일교육방안**

문화통합을 지향하는 통일교육 내용의 개선방향 연구

오 기 성 (북한연구소 연구위원, 교육학 박사)

〈 목 차 〉

- I. 서 론
- II. 남북한 문화통합과 통일교육
- III. 남북한 문화구조의 이질성과 동질성
- IV. 문화통합을 지향하는 통일교육 내용의 개선방향
- V. 결 론

I. 서 론

통일은 여러 측면을 포괄하는 복합적인 과정으로 볼 수 있다. 그것은 정치와 경제, 그리고 사회체제간의 통일일 뿐 아니라 남북한 주민들간의 의식과 가치관의 통합을 포함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통일이라는 개념은 외형적인 제도적 측면과 내면적인 문화적 측면 모두를 포괄한다. 보통 통일이라면 제도적 측면에 주안점을 두고 남북한 단일정부를 수립하는 체제의 측면에서 정치적 통일을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제도와 문화는 상호 밀접한 관계를 지니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외면적 통일인 체제, 제도의 통일은 삶의 방식인 문화의 통합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진다.

—봉서독이 통일 이후 겪고 있는 여러 가지 후유증¹⁾, 그리고 합의에 의해 이루어졌던 예멘 통일후의 부작용은 한반도의 통일과 관련하여 다각적인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해 준다.²⁾ 남한의 경우도 제도적 차원에서 분

1) 동서독 통일 후의 후유증으로서 대표적으로 제기되는 것이 바로 독일 통일후 오시스(Ossis)와 베시스(Wessis) 문제이다 ; Mary Fulbrook, "Aspect of Society and Identity in the New Germany," *Daedalus*, Vol. 123, No. 1 (Winter, 1994), pp.214-218.

2) P.J.Opitz와 D.Herz는 동서독의 통합문제를 다루면서, 남북한 주민간의 이전화는 독일의 신헌에서 보듯이, 어려운 점이 많으면서도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점진적 과정으로 우선적으로 극복되어야 할 것이라고 본다. 반면 그들은 한반도가 (통일문제에 있어) 독일보다 더 쉽게 동포애라는 관념에 의지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 Peter J. Opitz and Dietmer Herz, "The Integration of East and West

단을 극복하려는 노력은 한계를 가진다. 첫째로, 아무리 세련된 제도가 마련된다고 해도 분단기간 동안 상이한 체제하에서 개인 및 사회를 지배해왔던 規範, 價値, 信念 등의 惰性은 쉽게 극복할 수 없다. 왜냐하면 남북한간의 이질성을 단순히 제도적으로만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다. 둘째로, 社會的 分化(differentiation)가 가속화되는 현대사회에서 사회통합이나 갈등문제를 제도적으로 해결하는 데는 명백한 한계가 있다. 이는 제도적 통일 이전에 문화적 교류 및 협력을 통한 양쪽 문화의 적응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통일교육 또한 통일의 이러한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기존의 통일교육은 주로 전자의 측면에 치중해 온 것으로 보인다. 이제는 후자의 측면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내면적 정신적 통합을 의미하는 통합개념에 기초하여 남북한 문화통합의 관점에서 통일교육의 방향을 탐색하고자 한다.³⁾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문화통합과 통일교육의 관계를 개략적으로 검토한 후 남북한 문화의 이질적 및 동질적 측면에 대한 분석을 통해 통일교육이 지향해야 할 주요 방향을 고찰하고자 한다.

II. 남북한 문화통합과 통일교육

1. 문화통합과 체제통합

진술한 바와 같이 한반도에서의 통일은 단순한 분단 이전의 상태로의 회복을 통한 봉합이 아니며, 정치 및 경제체제와 사회체제간의 통일일 뿐 아니라 남북한 주민들간의 의식과 가치관을 포함하는 문화통합이다. 여기서 정치적, 제도적 통일은 정치체제의 構造的 統一에 불과하며, 따라서 이질화된 두 체제에서 살아온 남북한 주민들간의 意識과 思考方式이 통합되고 다양한 社會的 齟齬가 치유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후자의 측면에 주목할 경우 우리가 문화통합의 이론적 차원을 정립할 수 있는 개념은 곧 사회학에서 제기되어 온 사회통합과 체제통합의 개념이다.⁴⁾

Germany in the Post-Unification Period," *Sino-Soviet Affairs*, Vol. XVIII, No. 4 (Winter, 1994 / 5), p.237.

3) 본 연구에서 주목하는 것은 통일대비교육이다. 즉 통일을 이루기까지 필요한 교육으로서 평화, 화해, 협력이라는 공존시대를 거쳐 통일을 이룰 때까지의 교육에 초점을 둔다.

4) David Lockwood, "Some Remarks on *The Social System*", N. J. Demereth and R. A. Peterson, (eds.), *System, Change and Conflict: A reader on contemporary sociological theory and the debate over functionalism* (The Free Press, 1967), pp. 281-294; 이은숙, 통일시대 민족통합의 정신적 구심점 및 사회통합의 하부구조 모색을 위한 기초 연구 (성남 : 세종연구소, 1996). pp.12-13 ;

록우드(David Lockwood)에 의해 처음 제기된 사회통합과 체계통합은 허버마스에 이르러 의사소통적 행위에 의해 이루어지는 생활세계(삶의 세계)의 통합과 非言語化한 操縱媒體'(delinguistified steering media)에 의해 이루어지는 체계통합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이는 칼훈(Craig Calhoun)에 이르러 더욱 정교화의 형태를 띠게 된다. 그는 간접적 사회관계라는 차원에서 '想像의 共同體'(imagined communities) 개념을 도입하고 있으며, 직접적 내지 대면적 상호작용의 관계 세계의 차원에서 혈족관계와 공동체관계 그리고 경제적 교환의 세계로 이루어진 직접적 관계망의 세계로 구분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학에서의 논의를 종합해 보면 體系統合 → 間接的 社會關係 → 道具的 合理的 行爲 또는 非言語化된 操縱媒體로의 연관관계와, 社會統合 → 對面的 關係 → 意思疏通的인 合理的 行爲 또는 省察的 理解指向의 행위로 정리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통합유형에 대한 논의를 남북한 문화통합에 적용시켜 보면, 기존의 정치학 또는 국제정치학에서 논의되어온 통일 또는 통합에 관한 논의는 문화적인 측면을 완전히 배제하고 있지는 않지만, 주로 체계통합의 범주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본다. 반면 사회통합에 관한 논의는 제도적 측면을 전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보다는 주로 內面的, 意識的 統合에 중점을 둔다는 측면에서 체계통합과는 다른 측면을 보여준다. 따라서 문화통합은 사회통합의 하위 범주로 설정될 수 있다.

동서독 통합을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체계통합의 측면은 국가의 지배기능, 물질적 재생산과 혁신을 포함하는 부분체계로서 경제체계, 정치체계와 법체계의 통합을 말하는 것이다.⁵⁾ 통독과정에서 이러한 부분은 이미 서독의 기준에 의해 청산되거나 과거 기본조약 이후 교류와 교역을 통하여 정리가 되어있는 상태였다. 남북한의 경우 아직도 基本條約에 상응하는 조약이 체결되었으나 무용지물이 됨으로써 체계적 측면에 대한 정리가 남아있다.

반면 통일과정에서 남북한의 사회통합을 추구한다는 것은 남북한 사이에 이미 존재하거나 또는 통일과정에서 발생하게 될 異質化, 分離, 差別, 不平等 狀態를 국가나 사회의 적극적 노력을 통해 극복함을 뜻한다. 동시에 사회통합은 통일에 이르는 과정에서 거쳐야 할 하나의 단계일 뿐만 아니라 제도적 통일 이후, 통일된 사회 내에서 남북한 주민이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정착시켜 가는 과정을 뜻하는 것으로 사용되기도 한다.⁶⁾ 이러한 관

Craig Calhoun, "Indirect Relationships and Imagined Communities : Large-Scale Social Integration and the Transformation of Everyday Life", Pierre Bourdieu and J. C. Passeron, *Reproduction in Education, Society and Culture* (London : Sage, 1977), pp.99-100 ; Margaret S. Archer, *Culture and Agency* (Rev. ed.) (Cambridge : Cambridge Univ., Press, 1996), p.288, pp.291-292 ; Ian Craib, *Modern Social Theory ; From Parsons to Habermas* (N. Y. : St. Martin Press, 1992), pp.53-54.

5) 최정호외, 분단국의 통일과 문화예술 및 문화예술인의 통합에 관한 연구-특인류 중심으로- (서울 : 한국문화예술진흥원 문화발전연구소, 1991), p.154.

집에서 볼 때, 남북한 사회통합은 남북한 주민들이 단일 생활권 내에서 생활하면서 동류의식을 형성하고 상호간의 사회적 거리감을 없애며, 통일된 국가의 제도나 법 앞에 모두 평등한 입장에 서서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됨으로써 민족의 天團을 이룩해내는 상태를 뜻한다.

사회통합의 하위 부분으로서 문화통합의 측면은 가치관, 사회적 상징, 예술적·미학적 표현 및 일상생활문화의 통합을 말한다. 문화적 측면은 그 변화과정에 있어서 시간을 필요로 한다. 다른 생활영역에 있어서는 통일과정에서 어느 정도 시급함을 필요로 하지만 문화에 있어서 만은 성급함이 허용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문화생활이 지속되어 온 생활세계는 일시에 통합되거나 일시에 붕괴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특히 하버마스에 의하면 생활세계는 의사소통적으로 행위가 언제나 이루어지는 영역이다.⁶⁾ 남북한 통합에 있어서 이 생활세계는 곧 문화로서 民族同質性 回復의 첫걸음이고 통일 후의 새로운 사회화의 중심이다.

앞으로 우리 사회는 상이한 체계하에서 이질적인 이념(또는 가치관)과 생활방식을 지닌 동포들끼리 '더불어' 사는 생활세계하의 삶의 공간이 되어야 한다. 물론 정치제도적 통합 후에 사회적·문화적 통합을 기할 수도 있겠다. 이것은 반세기 동안의 對立的 異質性 때문에 정치제도적 통합 자체를 희생시킬지도 모르는 사회·문화적 분열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그렇게 되면 현재의 분단상태 보다 더 열악한 상황이 상당기간 지속될 지도 모르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을 보여주는 統合事例를 우리는 독일과 예멘에서 볼 수 있다. 또한 이와 어느 정도 차이는 있지만 최근 홍콩반환 후 나타나는 중국과 홍콩지역 주민간의 문화적 갈등에 주목할 수 있으며, 비록 통일은 이루지 않고 있으나 지속적인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는 중국과 대만간의 문화교류와 갈등⁸⁾은 남북한 문화통합과 관련하여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사점을 주고 있다. 특히 제도적인 통일을 이룬 국가이든 제도적인 통일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빈번하게 밀접한 교류를 이루고 있는 국가든지 간에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현상은 양 지역 주민들간의 사고방식과 생활방식, 그리고 가치관의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들은 결국 통일은 문화통합이 기반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6) 최 현, "남북한 사회통합의 과제와 전망," 21세기 논단 (1992, 겨울호), pp.80-81.

7) 하버마스의 생활세계 개념은 의사소통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행위의 배경이 되며 이해의 과정을 도와 주는 언어의 맥락이다; Jurgen Habermas, *The Theory of Communicative Action*, Vol. II; *Life World and System*, trans. by McCarthy (Boston: Beacon Press, 1987), p.153-156 참조.

8) Andrew J. Nathan, "Promoting Politico-Cultural Integration: Lessons for Korea from the Chinese Experience", Paper for the International Seminar of "Korean Unification and the Role of the Media" sponsored by the Hankuk Foundation and Nuhwa Broadcasting Company (Nov. 26, 1997), 문화방송권, 정보화시대의 남북한 문화통합 (서울: 문화방송, 1998), pp.200-201.

예컨대 동서독 통일 후 나타나는 동서독인간의 문화적 갈등은 극우주의(신나치즘)와 민족주의 문제, 그리고 동독인들의 자본주의적 경쟁 사회와 소비사회에 대한 적응문제, 사회주의 이데올로기의 소멸로 인한 정신적 공허감과 無方向性, 문화적 주체성의 상실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⁹⁾

이러한 측면은 남북한의 경우에도 나타날 수 있다. 예컨대 대다수 북한주민들에게는 남북한의 합의적인 평화통일이 이루어진 뒤에도 남한의 시장경제적인 자본주의 풍조가 결코 긍정적인 모습으로 부각되기보다는 '변태적이며 서양화된 비극'으로 비칠 수 있으며, 이는 독일 통일 이후 구동독인에게 나타나고 있는 '복고주의적인 사회심리현상이 독일에서보다 더 심하게 나타날 수도 있다.¹⁰⁾ 실제로 탈북자들 대부분이 북한의 현제에 대한 거부감을 표출하면서도 "제도는 본래 좋은데"라는 여론을 남기고 있는 것은 흥미로운 사실이다.¹¹⁾ 북한은 사상적으로 제도적으로는 아주 좋으나 현실이 따라주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인식하는 사람들이 많다. 따라서 통일 이후에 특히 북한주민들이 남한주민들에 대한 누적된 적개심을 갖게 되거나, 상대적인 빈곤감 내지는 염세적 자기학대 풍조의 형성은 사회·문화적 통합을 저해하는 현상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시장경제적인 체질에 길들여져 있는 남한주민들의 경우에도 민족의 숙원인 조국통일을 위해 감수해야 한다는 고통분담의 의지는 지나친 세금의 부담으로 처음의 의지는 쇠퇴하고, 경직성을 지닌 북한사람들에 대한 경멸풍조가 나타날 수 있다.

2. 문화통합과 통일교육

일반적으로 서로 다른 두개 문화의 통합과정, 특히 독일의 문화통합과정을 설명하는 분석의 틀은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하나는 (一方)支配모델(Dominanzmodell)이며, 다른 하나는 相互依存모델(Interdependenzmodell)이다.¹²⁾ 남북한 문화통합의 관점에서 볼 때 지배모델은 어느 일방의 붕괴 또는 몰락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통합의 과정 자체에서 야기되는 갈등을 제대로 수습하지 못할 경우 엄청난 혼란을 감당하지 않을 수 없다. 반면 상호의존 모델은 두개의 서로 다른 문화의 상호관련성과 영향관계에 기초한 통합을 뜻한다. 이는 통합되는 문화가 서로 비슷한 기반에서 출발하여 그 양식과

9) 이상면, "통합과정에서의 문화적 충격과 사회·문화적 문제들", 문화방송편, 남북한의 사회·문화·정치·경제적 통합과 방송(서울: 문화방송, 1997), p.201; 전경수, 서병철, 통일사회의 재편과정(서울: 서울대출판부, 1995), pp.52-63.

10) 이정준, "통일 이후 남북한 방송통합-새로운 남북통합 방송제도의 모색", 문화방송편, 분단국통합과 방송(서울: 문화방송, 1997), p.273.

11) 차성근의 증언; 서재권, 북한 사회의 계급간층 연구(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6), pp.151-152에서 재인용.

12) Karl Otto Hondrich, "Das Recht des Erfolgreichen", Tagesspiegel, Vol.9, No.22 (1991), p.21.

가치와 이념이 각각 유사한 양상을 드러낼 경우 효과적이다.

이러한 두가지 모델을 볼 때 남북한 어느 쪽도 지배모델을 선호하지 않는다. 더구나 체제와 이념에 의해 대립이 두드러질 경우 상호의존적 통합 모델을 추구한다는 것은 쉽지 않다. 그러므로 남북한의 문화적 동질 기반을 바탕으로 앞의 두 가지 문화통합의 모델에서 그 장점을 취하여 보다 포괄적인 새로운 문화통합의 기틀을 만들지 않으면 안된다.

최근 국내에서는 북한이 사회주의 정치체제를 건설함으로써 남북한간의 극심한 이질화를 초래하였다고 보는 견해가 있지만, 이질화는 북과 남 사회의 공통적이고 동일한 형상이다. 그 변화가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라는 제도와 구조적 차이에 기인하건 또는 근대화라는 원인에 따른 결과이건, 사실상 남과 북은 서로 상대방이 이질화했다고 생각하는 만큼 자신도 이질화하였다.¹³⁾ 즉 남과 북이 변질의 측정을 남한의 현대를 기준(갓대)으로 삼는 까닭에 모든 변질은 북한의 현상으로 보인다. 분단 이전의 상대인 과거의 공통기준점에서 보면 북이 남에게 이질화한 만큼, 북에게는 남이 이질화한 것으로 비칠 것이다. 소위 이질화의 상대성이다. 예컨대 남한은 비교적 자유로운 입장에서 전통문화를 지속시켜 왔으나, 공업화의 과정에서 전통문화의 크나 큰 변질과정을 경험하였다. 반면 북한은 사회주의적 내용을 민족적 형식에 담은 내면적인 전통문화의 변형을 의도적으로 진행하여 왔다.¹⁴⁾ 남한이 형식적인 것으로 전통문화를 변형시켜 왔다면, 북한은 내부에서 외형으로 전통문화를 변질시켜 온 것이다.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이데올로기의 대립은 이들이 신봉하는 개인들의 '인식의 틀'이 다르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¹⁵⁾ 보다 정확히 말하면 이들의 사회적 위치, 즉 사회구조나 제도내에서 그들의 존재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그들이 자신들의 존재에 구속되어 사회문제를 인식하였기 때문에 갈등이 야기된 것이다. 그러나 인식의 틀이 상이해도 그리하여 상충되더라도, 만일 그들의 인식이 특정한 인식의 틀에서 얻어진 산물이라는 것을 자각할 수 있을 때는 각자 자기의 인식만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고집하지는 못한다. 따라서 갈등을 통합적인 문제해결 양식으로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먼저 葛藤當事者들이 범하는 인식의 오류를 제거해야 한다.

사회적 갈등에서 갈등상대의 인식의 틀이 인식된 연후에 그 인식의 틀에서 자기를 되돌아 볼 때 자기의 인식의 틀이 인식되는 것이다. 이때 소위 役割取得(role-taking)이 중요한 기제가 된다.¹⁶⁾ 이는 슈츠가 '視覺의 交互

13) 이영희, "남북한 정치사회상의 이질감과 극복", 남북한 이질감과 그 극복 전망, 효성여대 현대 사상연구소 주최 1993년 통일문제 교수 학술 세미나 (1993. 9. 23), pp.5-6.

14) 이광규, 새로운 민족관의 수립을 위하여 (서울: 서울대출판부, 1995), p.141.

15) 이수원, 신진호, "남북한의 이데올로기 갈등과 사회발전", 남북의 장벽을 넘어서-통일과 심리적 화합, 한국심리학회 주최 1993년도 통일문제 학술 심포지움 발표논문 (1993. 6. 11-12), pp.101-108 참조.

性'이라고 칭한 것이다. 타인의 입장에 자신을 위치시키거나 또는 상대방의 관점을 취하는데 사용된다.¹⁷⁾ 이러한 역할취득을 통해, 자신의 갈등상대의 인식의 틀인 사회적 정체가 인식의 대상이 되어 이를 반성적으로 인식할 수 있게 되면, 갈등관계에 있는 모든 사회집단의 목표에는 순기능만 있는 것이 아니며 역기능도 함께 공존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게 된다. 즉 절대적으로 선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또한 이같은 인식을 토대로 사회구조나 제도를 개혁해 나가게 된다. 갈등관계에 있는 양 제도의 순기능들은 최대한 살리면서 동시에 역기능들은 최소로 만드는 그러한 새로운 제도를 모색하게 된다. 갈등관계에 있는 주 집단이나 사회범주, 즉 정과 반을 함께 부정함으로써 새로운 합을 낳는 것이다.

주지하듯이 학교교육현장에서 통일교육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이전에도 국가안보교육, 국민정신교육, 민주시민교육, 반공교육, 승공교육, 통일안보교육, 이념교육, 知共教育 등의 다양한 명칭하에 통일교육을 실시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남북분단 이후에 남한체제하에서 실시되어 온 이러한 통일교육은 통일을 대비하고 통일을 촉진시킬 수 있는 차원에서 실시된 것이 아니라, 남한의 이념과 체제 및 정권을 합리화시키기 위한 메커니즘으로 이용되어 온 측면이 적지 않았다. 따라서 이러한 통일교육은 민족의 이질화된 생활공간을 재통합시키기 위한 차원에서라기보다는 오히려 남북한간의 이질화 및 적대감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 면이 있다.

통일교육에 관하여 교사들이 제기하는 문제를 보면,¹⁸⁾ 과거에 통일교육의 내용은 자본주의에 대한 편파적인 미화, 사회주의에 대한 일방적인 부정, 그리고 북한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교육내용이 구성되어 있다는 점이다. 즉 자본주의 관련 내용에서는 주로 장점만을 기술하고 있으며, 자본주의의 문제점은 거의 다루지 않는다는 것이다. 반면에 사회주의는 주로 부정적인 특성만을 중심으로 기술하고 있고 사회주의에 대한 내용이 지나치게 큰 비중을 차지하며 이데올로기 교육에 치중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북한 체제의 현실과 변화'에서도 북한의 최근의 변화와 긍정적인 측면도 소개해야 할 것인데, 이러한 내용이 미흡하다는 것이다. 특히 북한 현실에 관하여 민족동질성 회복의 시각에서 접근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질성이 크게 부각하고 있다는 것이다.

16) Joel M. Charon, (ed.), *Symbolic Interactionism : an Introduction, an Interpretation, and Integration*, 4th, (Englewood Cliffs : Prentice-Hall, 1992), pp.109-116.

17) J. H. Turner, "Analytical Theorizing", Anthony Giddens and J. H. Turner (ed.), *Social Theory Today* (Stanford, CA : Stanford Univ. Press, 1987), p.178.

18) 한만길, "민족분제와 통일교육의 방향", 민족론, 제6집 (1992), pp.491-492.

따라서 우선 남북간의 이데올로기적 대립을 지양하는 방향에서 교육내용을 설정하는 관점으로 수정되어야 한다. 남한의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이념과 현실이 북한의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보다 일방적으로 우세하다는 식의 편파적인 시각은 탈피해야 한다. 남한체제의 장점이 있는가 하면 단점도 있음을 인정해야 하고, 교육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또한 북한체제의 단점이 있는가 하면 나름대로 장점을 갖고 있음을 인정하고 이를 교육해야 한다. 오늘날 소련을 비롯한 사회주의 국가가 몰락하고 있지만 그러한 현상은 체제자체의 문제와 모순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사회주의 체제의 몰락이 곧바로 자본주의 국가의 일방적인 승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접근이 이루어진 연후에 통일교육에서는 남북한의 통일정책이나 통일방안에 대한 상세한 안내와 함께 그에 대한 상호비교나 절충방안까지 제시해 줌으로써 통일의 가능성에 대한 신념을 고양시키고 동시에 구체적인 통일과정에 대한 아이디어를 습득하게 해야 할 것이다. 그럼으로써 풍요와 복지의 원천이며 인간생활의 물질적 보장의 기초가 되는 성장 및 효율지향적인 자유시장경제 원리와 안정과 평등지향적인 사회주의 원리간의 조화에 바탕을 두고 통일국가에 지향하는 복지사회의 이념이 통일교육의 차원에서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요컨대 통일국가의 복지사회의 이념에 대한 교육은 자유시장경제원리와 평등지향적인 사회주의 원리를 적절하게 변증법적으로 종합시키는 차원에서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¹⁹⁾

결국 문화통합을 위해서는 먼저 양문화를 보아온 우리의 인식의 틀을 각각·수정하고, 동질성을 기반으로 한 '우리'의식을 증대시키는 동시에 이질화를 극복하며, 양문화의 장단점을 변증법적으로 통합할 수 있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여겨지며, 아울러 이러한 측면이 통일교육에 반영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19) 강민석, "민족공동체유리체계의 정립을 위한 통일교육의 접근방향", 공주대 교육연구, 제9집 (1993), p.142.

Ⅲ. 남북한 문화구조의 이질성과 동질성²⁰⁾

1. 南北韓 文化²¹⁾構造²²⁾의 異質的 側面

남북한의 문화적 이질성은 지난 50여 년간 상용하기 어려운 두 사회체제의 존립과 근대화에 따른 사회구조 변동 및 문화 변용의 귀결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인민민주주의와 사회주의가 상용성이 전혀없다는 사실이 문화적 이질화의 한 조건이라는 것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따라서 양 체제가 지향해 온 인지적 경험문화의 상징적 차원에서 나타나는 현격한 차이로 인해 하위문화의 이질화가 심화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1) 인지적 경험문화

- 20) 본 장의 내용은 연구자의 박사학위논문에서 일부분을 축약한 것임 ; 오기성, "문화의 구조분석에 의한 남북한 문화통합 연구" (서울대학교원 박사학위논문, 1998), pp.66-241 참조.
- 21) 본 연구는 문화를 단순히 예술로 환원시키는 혼란에서 벗어나 "지식, 신앙, 예술, 법률, 도덕, 풍속 등 사회의 일원으로서의 인간이 획득한 능력과 습관의 총체"라는 다일리의 인류학적인 정의나 또는 "다인의 행위에 영향을 주거나 상호작용하는 둘 또는 그 이상의 개인들의 의식적 내지 무의식적 활동에 의해 창조되거나 수정되는 모든 총체"라는 소로킨의 정의를 고려하면서 접근한다. 따라서 남북한 문화라고 할 때 그 범주는 의식주와 같은 생활문화와 도덕규범, 문화향수 신태, 그리고 체제의 이념적 영향도 고려하는 개념이다 ; E. Tyler, *Primitive Culture*, (Gloucester, MA : Smith, 1924) ; Richard A. Peterson, "Revisited the Culture Concept", *Annual Review of Society*, Vol.5, (1979), p.137 ; Pitirim Sorokin, *Social and Cultural Dynamics* (N. Y. : New Brunswick and Oxford L Transaction Books, 1985), p.2.
- 22) 문화의 구조적 분화양식과 기능, 그리고 내용에 따른 문화유형 분류는 류순의 문화에 대한 구조적 개념을 토대로 김경동교수의 인지적 경험문화, 심미적 표현과 감상의 문화, 평가적 규범의 문화, 도덕성의 가치문화, 규범문화, 생활문화로의 분류와 이장현과 임재욱의 가치적 문화, 행동적 문화, 용구적 문화로의 분류를 연구자가 인용하였다. 그것은 認知的 經驗文化, 審美的 文化, 規範文化로 분류된다. 또한 각각은 두 차원으로 재분류된다. 인지적 경험문화의 경우 象徵的 次元에서는 미술, 신앙, 철학, 세계관이 포함되며, 外現的 次元에서는 과학, 기술, 물질문화로 나타난다. 반면 심미적 문화의 상징적 차원은 예술적 지향을 주로 의미하며, 외현적 차원은 예술의 형식으로서 문학과 음악, 미술, 무용, 연극, 영화 등을 포함하며, 동시에 이에 대한 국민의 문화생활 향수 경향도 포함한다. 규범문화의 경우 상징적 차원은 주로 옳고 그름, 바람직한 등에 대한 도덕적 가치지향과 공식적 규범을 의미하며, 외현적 차원은 비공식적 가치에 기반한 지향하는 일상적 태도를 말한다 ; J. B. Tompson, *Ideology and Modern Culture* (Cambridge : Polity Press, 1990), p.148 ; Jeffrey C. Alexander and Philip Smith, "The Discovery of American Civil Society : A New Proposal for Cultural Studies", *Theory and Agency*, Vol.22, No.2 (1993), p.156 ; J. V. Baldrige, *Sociology* (M. Y. : Wiley, 1975), p.81 ; 김경동, 현대의 사회학 (서울 : 박영사, 1997), pp.41-47 등 참조 ; 이를 남북한 문화의 하위구조에 적용시키 보면 다음 그림과 같이 예시될 수 있다.

인지적 경험문화	상징적 차원	이념과 문화관, 언어, 종교
	외현적 차원	의식주생활문화와 산업화에 관련된 문화
심미적 문화	상징적 차원	분화 및 예술의 주요 가치지향
	외현적 차원	문학, 미술 및 공연예술의 형태, 문화향수 신태
규범문화	상징적 차원	공식적 가치와 관련된 도덕규범과 이상적 인간상
	외현적 차원	비공식적 가치를 지향하는 일상적 태도

우선 인지적 경험문화의 상징적 차원에서 볼 때, 남한은 개인주의와 다원주의를 지향하는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 민족주의를 이념으로 설정하였다. 이에 따라 문화영역에서 ‘政治的 選擇性的 原理’(the principle of political selectivity)²³⁾가 비교적 약하게 작용하고 되도록 문화현상을 자생적이고 자율적인 것으로 보려는 경향이 강하다. 반면 북한은 집단주의와 획일성을 특징으로 주체사상과 사회정치적 생명체론, 그리고 조선민족제일주의에 기초한 “우리 식 사회주의”의 토대 위에 수령과 노동당이 문화적 목표를 설정하고,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과 도구를 선택하여 집행해 왔다. 여기에 강력한 정책기구를 필요로 한다. 남한에서 자율적으로 형성된 제도와 기구들이 북한에서는 중앙권력, 특히 1인 중앙집권의 경향을 강하게 나타냄으로써 정치적 선택성의 원리가 강하게 작용하게 된다.

이러한 양 체제의 이질성은 문화의 전 영역에 영향을 미친다. 우선 남북한의 언어관은 크게 다원주의적 사고와 일원적 사고, 내지는 이성관에 바탕을 둔 서구의 사고와 혁명성을 강하게 지니고 있는 공산주의적 사고에서 이질성을 보인다. 무엇보다도 어휘분야, 특히 정치적 용어의 차이는 심하다. 이외에 남한에서는 산업화, 개방화와 함께 수많은 외래어가 유입되었고, 북한에서는 어휘에 이념이 내포되어 의미가 왜곡되기도 하였다.

(2) 심미적 문화

심미적 문화의 주요 가치지향에 있어 이질성은 사회적 특성과 심미적 문화를 뒷받침하는 제도적 차이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먼저 문학예술을 뒷받침하는 제도적 차이와 관련하여 그 이질적 측면을 보면, 첫째, 남한에서는 다양한 문화가 존재하는 반면, 북한은 획일화된 문화만이 허용되고 있다는 점이 근본적인 차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창작의 주체와 관련하여 남한에서는 국민 누구나 자유롭게 창작할 수 있으나, 북한의 문화 예술 창작은 특정집단의 전문가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경향이 강하다. 셋째, 국가가 문화 예술에 개입하는 수준에 차이가 있다. 남한에서도 문화관광부가 문화 예술활동에 관여하고, 공연윤리위원회와 같은 조직을 통하여 일정한 제약울 가하지만, 북한에서는 정부와 당이 직접 문화 예술활동을 통제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문화예술과 사회와의 관련성에서도, 우선 남한에서는 예술이 사회의 영향을 받고, 사회가 또한 예술에 영향을 주는 상호관계가 성립된다고 할 수

23) 정치적 선택성의 원리는 김경동교수가 주창한 이론으로서, 어떤 사회의 문화는 그 사회의 힘의 배분 원리에 따라서, 어떤 사회는 민주적 참여를 최대한 허용하는 방식으로 김정하여 변화의 우선 순위와 수단을 설정할 것이고, 또 다른 사회는 일인 또는 소수의 전체적 지도자에 의한 과도적 김정유형으로 세 하게 될 것이다. 이 양극의 가운데는 갖가지 민주적인 조력원리로부터 권위주의적인 것에 이르는 유형들의 선택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 김경동, 한국사회 변동론 (서울 : 나남, 1994), pp.87-89.

있으나, 북한에서는 예술이 사회에 종속되는 정도가 강하다. 둘째, 남한에서는 매스미디어의 발달에 따라 외부 사조의 유입이 빠르고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북한의 문화는 폐쇄적인 체제의 특성상 외부 사조의 변화에 둔감하다고 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북한의 예술은 남한보다 상대적으로 전통적인 요소들을 유지하는 정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셋째, 남한에서는 문화활동이 여가활동의 일종으로 인식되지만 북한에서는 여가생활이면서 동시에 정치적 활동이 되고 있다.

심미적 문화의 외현적 차원에서 볼 때, 남한의 문학은 다양성과 상대적 자율성 보장을 큰 특징으로 한다. 그러므로 문학은 시대적 상황에 따라 문제점을 제시하거나 현실변혁의 필요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또한 서구 문학의 새로운 사조를 수용하여 문학적 형식과 내용면에서 지속적으로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 반면 북한은 문학의 다양성과 상대적 자율성을 보장하지 않으며, 당정책, 문예정책과 문예이론, 문학작품이 서로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 특히 창작방법에서 북한문학은 사상적 알맹이라는 '종자'를 생명력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것은 당정책의 요구에 맞는 것이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창작방향에서도 사회정치적 생명체론에 따른 수령의 형상화가 절대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미술의 경우 남한은 다원주의적 기조 아래 서구 미술의 사조를 수용하면서도 전통을 어떻게 현대화할 수 있을까하는 문제를 일차적인 과제로 여기면서 그것에 관한 모색을 꾸준히 시도해 왔다. 반면 북한의 미술은 "민족적 형식에 사회주의적 내용을 담는다"는 주체사실주의 방법이 강조되고 있다. 특히 미술은 당성과 노동계급성, 인민성을 강조하며, 여기서 당성은 사회주의 미술의 본질적 특성으로 간주되고 있다. 무엇보다도 조선화가 강조되고 있으며, '우리 식' 유희기법이 중요시되고 있다. 또한 실제 작품형태에서 나타나는 것은 주로 혁명적 낙관주의를 지향하고 있다.

영화부문에서 볼 때, 남한은 다양한 형식과 내용을 지닌 영화가 발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주목되는 것은 한국고유의 전통문화를 부활시키려는 경향과 보다 새로운 현대사회의 제재를 다루면서 실험적인 영화미학을 시도하고 있는 경향이다. 반면 북한 영화는 그 일차적인 기능이 인민대중의 교양에 있음을 강조함으로써 주제에 있어 정치적 의의를 상당히 중요시한다. 이에 따라 촬영에서는 사상적 내용에 중점을 주어야 하는 것이 강조되며, 영화에 출현하는 배우의 1차적 조건으로서 혁명적 세계관이 제기되고 있다. 아울러 자유로운 표현으로서 영화가 아니라 대안의 사업체계를 따라 당위원회의 집체적 지도가 강조되고 있다.

무용은 남한의 경우 30년대 이후 민족문화의 복원과 회복, 활성화 운동이 일어났고, 그로 인하여 민족 고유의 무용들을 보존, 계승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순수 창작무용에 있어서도 발레무용, 현대무용, 한국무용 등 각양 각색의 무용들이 나뉘대로 개성을 가지고 발전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순수한 민족무용을 개조하여 집단무용으로 획일화시키는 경향이 강하다. 예술적인 무용도 남한 춤과는 달리 나뉘대로 과학적인 근거를 통해 서양의 발레처럼 기본동작을 활용하여 작품을 창작하고 있다.

음악의 경우, 북한은 주체성의 이념을 신봉하면서 악기를 개량하고 민족음악어법을 발전시켰으며 혁명과업에 필요한 음악을 만들었다. 반면 남한은 자유민주주의를 신봉하고 서구의 음악어법을 수용했으며 자유스러운 음악미를 추구하고 있다. 따라서 민족적 형식에서 남한은 전통적 민족음악이 강하게 보존되어 있는 반면, 북한은 전통적 민족음악보다 이를 현대적으로 발전시킨 특이한 민족음악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연극을 보면, 남한은 광복 직후부터 1960년대까지는 인제 및 봉건 잔재 청산, 분단문제(좌우익 사상의 대립)가, 1970년대에서 1980년대까지는 분단문제와 더불어 전쟁, 이데올로기, 독재권력의 인권침해가 극작가들의 최대 관심사였다. 또 1980년대 중반부터는 '5공정권이 빛은 각종 정치사회악과 환경문제, 붕괴된 도덕성'이, 그리고 1990년대 이후에는 산업사회의 윤리의 문제가 새롭게 쟁점화되고 있다. 반면 북한은 경직된 정치체제로 인해서 식민지 유산인 新派樂劇을 사회주의 리얼리즘에 접목시킨 혁명가극과 연극을 기본적인 형식으로 갖게 되었다고 하겠다.

(3) 규범문화²⁴⁾

규범문화의 상징적 차원 또한 이질적 측면을 보여준다. 예컨대 한국에서는 전통적인 덕목 중에서 미래사회에서 계승 발전시켜야 할 것으로 敬天愛人과 弘益人間, 五常과 無爲, 그리고 自然의 道德的 命令을 따르는 順天節物 등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傳統的 德目과 함께 앞으로 民主社會에서 요청되는 덕목으로 人權尊重, 公正性, 遵法精神과 責任感 그리고 正直性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규범문화를 기반으로 미래의 한국을 이끌어 갈 바람직한 한국인 상으로서 주체적인 인간, 창조적 인간, 도덕적인 인간을 설정하고 있다. 이러한 덕목과 인간상은 서구의 근대화과정에서 나타나는 합리성의 증대, 전통적인 도덕성의 붕괴와 새로운 가치기준인 관용성의 증대, 그리고 집단주의로부터 개인주의로의 전환 등에 영향을 받고 있다고 하겠다.

한편 북한의 규범문화는 주로 集團主義 次元에서 共同體的 紐帶意識, 社會主義的 大家庭이라는 家父長的 權威主義, 相扶相助의 慣習, 禁慾主義와

24) 남쪽한 규범문화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연구자의 학위논문, pp.280-200을 참조할 것.

忍耐의 精神, 排他主義로 요약된다. 또한 이러한 도덕적 덕목을 지닌 이상적 인간의 모델로서 수령의 진사이며 제자, 진짜배기 인군·충신·혁명가로 권장되고 있다. 이러한 규범문화와 이상적 인간상은 북한주민의 가치체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

2. 남북한 문화구조의 동질적 측면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인지적 경험문화의 상징적 차원에서 남한의 자유민주주의 문화와 북한식 사회주의 문화간에는 상당한 이질적인 측면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이 반드시 문화적 이질화의 필요충분조건은 아니다. 문화적 이질화의 주 요인은 오히려 두 체제간의 대립과 교류의 단절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또한 내용 면에서도 문화적 이질성을 체제적 이질성에서만 찾을 경우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

이러한 사실은 독일사례가 분명히 실증해주었으며, 남북한의 경우도 결코 예외가 될 수 없다. 무엇보다 남북한의 정치, 사회, 경제의 각 부분에서 체제의 지도원리 내지 이데올로기에 영향을 받는 문화의 상징적 차원과 실제로 나타나는 실천적 문화, 즉 주로 문화의 외현적 차원사이에는 분명히 거리가 있기 때문이다. 현상적인 측면만 보더라도 남북한 체제의 이념과 사회현실상에 불일치가 확연히 존재하고 있으며, 나아가 주민 개개인들에게 있어 그러한 지도원리와 이념의 내면화정도는 일률적으로 측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문화연구는 체제가 지향하는 이념에 영향을 받는 측면과 영향을 받지 않는 측면, 그리고 진통적으로 지속되어 온 측면을 항상 고려해야 한다. 그리고 이것은 남북한 문화의 동질성 발굴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남북한간의 동질성이 존재하게 되는 주요 요인은 몇 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로, 반세기에 걸친 역사를 공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찾아진다. 즉 분단 이전의 남북한은 동일한 생활세계를 구성해 왔고, 이러한 과정에서 형성된 문화적 현실이 분단 이후 이념과 체제에 의한 채색에도 불구하고 잔존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문학예술 뿐만 아니라 일상적 가치지향에서도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둘째로, 근대화에서 나타나는 동질성이다. 남북한의 근대화는 상대적으로 차이가 난다. 그러나 비교적 사회구조의 측면에서나 인구구성, 그리고 가치관의 변화에서 서로 동질성의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 즉 수령론적 사회변화에 따른 동질성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동질적 요소에는 바람직한 측면도 있지만, 바람직하지 못한 측면도 존재하고 있다.

셋째로, 문화의 보편성과 관련된 동질성이다. 모든 문화는 체제나 이념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공통성을 지니는 경향을 띤다. 즉 사회주의 문화에서 독특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본주의 사회에서 나타나는 문화적 추세가 나타날 수 있다. 특히 남북한의 경우 문학예술 분야에서 이러한 경향을 찾을 수 있다. 즉 과거의 인식과는 달리 북한에는 비이념적인 문학예술 분야가 분명히 존재하며, 이것은 남북한 공히 동질성 확보를 위해 공유가능한 부분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1) 인지적 경험문화

인지적 경험문화의 상징적 차원에서 동질적인 측면은 우선 남북한 모두 언어도구관의 관점을 수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언어를 인간관계에서 의사전달의 매개체로서, 사상을 전달하는 수단으로 평가하고 있다. 또한 민족과 언어의 관계에서 언어가 민족형성의 가장 중요한 요인이며 민족의식의 형성과도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어휘정리에 있어서도 동질적인 측면을 보이고 있다. 남북한간에는 어휘정리의 주관이 누구인가에 따라 성과면에서는 다소의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고유어와 生活語를 중심으로 어휘를 정리해 나가야 한다는 기본 취지에서는 일치하고 있다.

반면 인지적 경험문화의 외현적 차원인 의식주문화는 각 문화의 필요성에 따라, 또는 각 사회의 산업화 정도에 따라 상이하게 인식될 수 있다. 예컨대 남한의 의식주 문화가 근대화에 따라 서양식으로 많이 변화된 측면이 많다면, 북한은 상대적으로 낮은 정도의 근대화와 폐쇄적 사회하에서 현대적 미감을 중요시하면서도 민족적인 전통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남북한 의식주 문화의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많은 동질성을 발견할 수 있다. 특히 삶의 기본이라는 의, 식, 주생활을 볼 때 그 가운데 가장 강하게 민족 고유의 전통이 남아있고 서구 사회와 다른 특징을 보이는 것은 식생활분야라고 볼 수 있다. 아파트와 양옥같은 서구 개념의 주택에 살면서, 그리고 서구 사회의 산물인 옷을 주로 입으면서도 빵보다는 밥과 김치를 주로 먹는 음식문화의 전통이 유지되고 있다.

(2) 심미적 문화의 외현적 차원

남북한 심미적 문화의 외현적 차원에서 부분적 동질성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주의해야 할 것은 외현적 차원에서 동질성은 그 이질성보다 상대적으로 비중이 작다는 것이다. 이것은 북한의 문학예술이 주로 사회정치적 생명체론에 따라 수령을 형상화하는 문학예술에 주요 강조점을 두는 것에 연유한다. 그러나 분단과 통일을 주제로 한 시문학이라든지, 남한의 노동자

문예운동과 상호동질적 측면의 확보가 가능한 벽시가 있다. 소설분야에서도 분단과 통일문제로 한 소설과 대하역사소설간의 동질적 측면을 볼 수 있다.

무용에서도 모든 것이 이질적인 것만은 아니다. 북한무용의 대부분이 김일성과 김정일의 이상화나 혁명수행의 수단으로 만들어진 춤이지만 때로는 인민들을 즐겁게 해주는 민속무용도 있다. 또한 이념적인 춤이라고 해도 예술적인 표현체인 춤동작은 우리 춤과 유사한 점이 많다고 평가되고 있다. 따라서 동질성의 확보라는 측면에서 수용할 수 없는 부분은 이념적인 주제이고,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은 춤동작과 공연형식, 그리고 무용표기법과 같은 과학적인 연구분야라고 규정할 수 있다.

남북한의 음악은 내용적 관점에서 보면 다르지만, 민족적 형식의 관점에서 본다면 많은 동질성을 찾을 수 있다. 남한은 전통음악을 현대화시킨 민속음악 기반이 약하고, 북한은 민족전통음악의 기반이 약하다. 이 사실은 남북한이 서로 만남을 기획하여 함께 수용, 보완, 발전시킴으로써 세계음악의 신질서에서 경쟁력을 키울 수 있음을 의미한다.

영화부문에서는 북한의 영화들이 이데올로기와 정치 사회체제가 상이한 풍토에서 만들어짐으로써 이념적인 색채의 영향이 이질화를 증대시켜 왔다. 그러나 큰 안목에서 보면 우리의 영상언어와 공통점이 많이 발견되고 영화의 저변에 흐르는 정서나 심성이 맥을 같이 하고 있다고 평가될 수 있다.

미술의 경우 분단 이후 내용상에서 이질적 측면이 명백히 나타나지만, 생애적인 민족의 동질성이 예술적 감성으로부터 공통분모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극심한 내용상의 이질화에도 불구하고 정신적 및 의식적 차원에서 공통적인 감성이 유지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연극의 경우에도 북한의 혁명가극과 혁명연극을 제외하면, 「춘향전」, 「박씨부인전」, 「장화홍련전」, 「흥부전」, 「심청전」과 같은 민족가극은 남북한이 큰 이견없이 공유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3) 규범문화

문화적 측면에서 볼 때, 남북한은 문화목표를 달리하였고, 정책을 달리하여 왔다. 이에 따라 의식이나 가치관도 다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의식이나 가치관 중에는 심층적으로 달라졌다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유사한 부분들도 많이 있다. 예컨대 북한에서도 직장배치라는 타율성에 의해 핵가족화 경향이 있고, 충성보다는 우선시키지 않더라도 효도를 강조하고 있고, 웃사람들에 대한 예절을 중시하고 있다. 그리고 당성에 의해 사람이 평가받는 반면 권위주의가 여전히 남아있으며, 이웃간에 상부상조 습관을 미덕으로 평가하고 있다.

가치체계의 내용을 집단 우선이나 개인 우선이나 하는 문제로 국한하는 시각으로 남북한 주민들간의 가치체계의 내용을 특징지우는 것도 의문의 여지가 있다. 왜냐하면 남한이 개인우선이고 북한이 집단우선이라고 할 수 있으나, 남한에서도 여전히 혈연, 지연, 그리고 가족이기주의로 대표되는 집단주의적 성향이 강하게 잔존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북한에서도 산업화가 진행됨에 따라 점차 실용과 실리로 대변될 수 있는 개인주의적 가치가 비록 미약하지만 증가하고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장구한 역사를 지닌 민족문화의 측면에서 볼 때 우리 민족은 민족문화적 배경의 동질성과 민족구성원으로서 일체감을 갖고 있다.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민족문화적 배경의 동질성은 민족문화의 하위체계 속에 잔류되어 여전히 비공식적인 생활 속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 민족은 공통의 문화적 배경 속에서 비슷한 사회화 과정을 거쳐왔기 때문에 공통의 심리적 특성 및 동질적인 의식구조를 지니고 있다. 이와 더불어 우리 민족은 민족의 생활감정을 지속시킬 수 있는 공통의 언어구조와 축적된 역사적 전통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민족의 이질화된 생활공간을 재통합시킬 수 있는 상징적인 메카니즘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오늘날 남북한 체제는 공식적으로 우리 민족의 정서와 배치될 수도 있는 상징적 차원의 인지적 경험문화에 의하여 채색되어 있다. 그러나 우리 민족의 삶을 지배하였던 공동생활의 원리(주로 전통적인 규범문화)는 아직도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하겠다.

한국문화의 특성을 규명함에 있어서도 북한의 경우에는 외형적으로 공산주의와 주체사상의 이데올로기가 모든 북한문화를 특징지우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이른바 表層文化에 불과하다. 그 밑에는 남북한의 동질적인 문화지층이 있다는 것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지표의 바로 밑에는 수백년간 형성된 유교문화, 그 밑에는 천여년의 역사를 지닌 불교문화, 그리고 가장 밑에는 외래문화의 영향을 받기전 수천년간 축적된 巫敎문화가 地核을 구성하고 있다.

외형적으로 보면, 남북한의 모든 사람들이 지니고 있는 가치체계, 세계관, 그리고 행동양식은 남북한이 표방하는 현행 이데올로기에 따라 결정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실제로 적지 않은 부분은 그 기초를 이루고 있는 전통문화와 전통의식, 그리고 규범문화와 인지적 경험문화의 외현적 차원에 의하여 좌우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는 남북한간에 의외의 동질성이 보존된 측면이 있고, 이것이 앞으로의 문화통합에 주요한 기여를 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그것은 주로 전통적인 배경이 동일하다는 점에서 유래한다. 가령 위에서

제시된 실례 이외에도 우리사회의 전통적인 의식 가운데서 두드러진 것을 몇 가지 들어보면, 인간관계나 사회적 유대에서 발견할 수 있는 '인정주의'와 '연고주의'를 들 수 있다. 또한 가족주의적 집단주의가 강하고, 가부장적 권위주의가 사회질서를 지배한다.

가치지향에서도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개인주의와 집단주의, 물질주의와 금욕주의 같은 차이가 표면상 있음에는 틀림없지만, 역시 일상의 현장에서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치에는 자녀에 대한 부모, 특히 어머니의 지나친 관심과 과보호, 자식의 부모에 대한 사랑, 자녀교육에 대한 열망, 강렬한 권력과 지위지향성, 관존민비, 남존여비 같은 공통적인 것들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요소들은 남북한을 막론하고 상당한 이질화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남아 작용하면서, 두 사회 모두에서 좋은 뜻의 가족유대강화, 인정스러운 관계유지 등의 면에서 순기능 하기도 한다. 그러나 정실주의, 파벌주의, 남녀차별과 권위주의 등의 역기능도 하고 있다.

IV. 문화통합을 지향하는 통일교육내용의 개선방향

1. 통일교육내용에 있어 갈등적 요소 극복

(1) 안보와 통일

통일교육은 이념과 체제를 달리하고 서로 대결하고 있는 남북관계와 그 모순관계를 해결하는 방안의 일환으로 실시되어왔기 때문에 이념전제적이고 사상지향적인 성격을 띠 수밖에 없다.²⁵⁾ 그리고 남북관계와 통일문제는 북한체제라는 존재를 전제하고 북한이 어떻게 반응해오느냐에 따라 통일교육의 내용과 방법은 달라질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점에서 통일교육은 상대성이라는 특징을 갖게 되는 것이며 이것으로 인한 이중성을 면할 수 없게 된다.) 그 말은 북한이 6.25와 같은 무력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으며, 대남전략을 포기하지 않는 한 우리는 그들을 언제나 경계해야 하고 때로는 '적'으로까지 간주해야 하면서 일면 그들을 우리와 같이 더불어 살아가야 할 동족으로 대해야 하는 어려움을 의미하는 것이다.

25)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통일교육은 다른 영역의 교육과는 달리 특수한 내재적 특성을 갖고 있다. 그 내재적 특성이란 이념성 내지 사상성, 상대성, 시사성, 종합성 등이다; 박용현, "『통일대비교육지원법』의 입법방향과 주요내용", 통일대비교육지원법 제정 공청회, "통일대비교육지원법의 입법방향과 실천과제 (1997. 9. 1), pp.7-8.

종래의 통일교육은 미·소를 중심으로 대립된 냉전구조라는 상황을 전제로 이루어졌었다. 이러한 통일환경에서의 통일교육은 단순한 구도하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다. 남북한이 서로 자신들의 이념에 근거하여 상대방의 이념을 비판하고, 각자 자신들의 이념의 우월성을 강조하는 흑백논리적 시각이 주류를 이루어왔다.

그러나 냉전구조가 붕괴되고 국익에 따라 외교정책이 결정되는 현재의 한반도 상황에서는 고도의 논리와 합리성에 근거한 통일교육이 요구된다. 더욱이 한반도의 국제환경 뿐만 아니라 남북한의 관계도 시기나 대상에 따라 협력과 갈등이 공존하는 이중적인 구조를 띠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야만 하는 통일교육은 이중적인 특성을 띠지 않을 수 없다.²⁶⁾

다시 말해 통일교육은 한반도의 분단과 통일에 대한 이중적인 관점과 입장이 공존하는 복잡한 관계를 고려해야 한다. 현실적으로 남북한이 분단되어 대결적인 관계 속에서 서로의 체제유지를 우선 목표로 하고 있는 현실은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남북한은 통일이 되어야 하는 형제라는 입장의 이상주의도 부정할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이상과 현실, 안보와 통일의 이중적 구조 때문에 통일교육은 관련자들의 관점과 입장에 따라 다양하게 주장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통일을 지향하고 대비한다는 차원에서 볼 경우, 이러한 안보와 통일이라는 두 가지 중요한 주제가 서로 대립적으로 또는 모순적으로 구성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안보는 통일이 된 후에도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통일이 이룩되지 못한 현 상태에서 통일을 지향하는 통일교육이라는 시각을 견지하려한다면, 당연히 통일이라는 큰 범주 속에 안보의 주제가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2) 당사와 인민사

기존의 통일 내지 통합에 대한 연구는 정치학이나 경제학적 접근이 주로 이루어짐으로써 의식이나 가치관을 포함하는 문화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적게 이루어져 왔다. 이것은 무엇보다도 문화를 포함한 비정치적 영역이 정치, 군사에 대해 부수적 역할만 하는 것으로 여겨왔기 때문이다.

북한사회를 이해하는 두 가지 방식이 있을 수 있다. 즉 그것은 '인민사'에 중점을 두는 접근과 '당사'에 중점을 두는 접근이다. 이를 사회학적 개념을 빌어 설명하면, 체계에 중점을 두는 접근과 생활세계에 중점을 두는 접근이라고 할 수 있다. 종래에는 북한 이해의 주요측면으로서 당사를 검토하

26) 윤건영, "통일교육의 교수 학습준거 설정에 관한 연구", '95 북한 및 통일연구 논문집 (서울: 통일원, 1995), p.305.)

는 일이 주류를 이루어왔다. 물론 사회주의국가에서 당사를 빼놓고서 설명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반면에 인민사를 빼놓고서는 당사도 올바르게 보이지 않는다.

당사에만 치중하여 접근할 경우 남북한의 모습은 상당한 부분에서 이질화의 양상을 보여준다. 그러나 다면적인 하위문화와 문화의 이중성이 존재하듯이, 인간의 의식이나 가치관 또한 이중적인 성격을 지닌다. 또한 당사에 직접적 영향을 받는 하위문화와 기존의 문화의 관성이 지속됨으로써 당사의 영향력이 약한 부분이 엄존한다. 이러한 측면은 북한의 문화현상에 있어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 이것은 주로 인민사에서 찾아질 수 있다. 나아가 이것은 남북한 문화의 동질적 측면의 중요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물질 총량을 계산할 때, 현재 북한이 생산력에서 낙후하여 남한사회와는 비교할 수가 없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람 사이의 따뜻한 정, 도덕성과 정신상태는 남한사회와 차이가 있다. 양자는 어떤 이유로든지 하나가 되어 통일국가를 꾸릴 수밖에 없는 난형난제임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북쪽에서의 의식주문화, 명절맞이, 놀이를 즐기고 예술생활을 향유하기, 결혼하고 장례를 치르고 조상 모시기, 여가 생활 같은 풍습들은 바로 남쪽에서 이루어지는 풍습들인 바, 훗날 통일국가의 삶속에서 이루어질 단일한 민족생활의 내용물로, 자랑스런 민족적 보고로 합쳐질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의 통일교육은 이러한 당사와 인민사의 속성을 고려하여 구성되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인민사의 내용에 주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진다. 동시에 그러한 접근은 통일교육 대상자들의 관심에도 근접하고 있으므로, 그들의 학습동기를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닌다.

(3) 전통적 규범문화와 민주적 시민문화

앞에서 본 연구는 다른 부분보다도 상대적으로 강하게 전통적 규범문화에 있어 남북한이 동질성이 있음을 밝힌 바 있다. 문제는 이러한 전통적 규범문화의 동질성, 예컨대 남과 북에 존재하는 가족주의나 권위주의가 민주주의의 기본원리인 개인의 자율성의 원칙과 양립하기 어려운 것이라는 데 있다.

예컨대 조혜정교수는 비슷한 문화를 공유함으로써 문화적 통합이 쉽게 이루어질 수도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문화통합은 문화적 내용의 공유라기 보다는 다양성을 조직화하는 방식을 통해서 이루어질 성격의 것임을 주장하고 있다.²⁷⁾ 그런 면에서 동질성은 획일성을 조직해 낼 매우 기본적인 수준에서 필요한 뿐이며 오히려 다양성을 조직화해 낼 의사소통의

27) 조혜정, "통일공간과 문화", 연세대 통일연구원 통일연구, 창간호 (1997), pp.78-79.

의지와 능력이 중요하다. 따라서 문화적 동질성에 대한 신뢰와 낙관은 통일에 대한 문화적 논의가 깊이 있게 진행되는 것을 막는다고 보고 있다.

반면 이러한 민족적 동질성의 부정적 측면의 지적과는 상이한 견해도 제시되고 있다. 예컨대 이상면은 서구의 자유주의 사회사상의 입장에서는 볼 때, '낙후된 비민주적 발상'이라고 비판할지 모르겠지만, 동양은 유럽과는 다른 사회발전, 즉 시민국가의 토대가 되는 시민의 권리와 의식이 점진적으로 성장해 오는 역사를 경험하지 않았고, 서구에서 발전된 민주주의 형식도 문화적 차이에 따라 동양에서는 다르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²⁸⁾

특히 동양에서는 유럽처럼 정치를 넘어서는 경제공동체가 구성된 사례가 한번도 없고, 이런 조직과 협동은 금세기 말까지도 회박하다고 본다. 그 때문에 최근 자본주의적 시장경제의 관점에서는 "국가는 없고 시장만 존재한다"는 말도 적용되지 않는다. 근본적으로 서구와는 다른 역사발전이 진행되어 왔고, 다른 문화를 가진 동양사회를 서구사상에 종속된 지식인들이 서구사회와 동일한 관점으로 파악하는 것은 합당치 않다는 것이다.

이상의 두 가지 입장은 각기 타당한 측면을 보여준다. 과거 경험에서 볼 수 있듯이 전통적인 가치 및 신념체계들은 외부로부터 도입된 개인주의, 자유민주주의, 경쟁주의와 갈등관계에 놓여 왔으며, 결과적으로 민주화를 지체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왔다. 반면 가족주의적, 연고주의적 인간관계가 합리성, 계산성, 효율성으로 특징지어지는 시민사회의 비인간화를 제어하는데 어느 정도 기여하였고, 권위주의 하에서 관찰되는 상위자의 권위는 하위자에 대한 보호라는 측면 또한 갖고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50여년간 상이한 체제속에서 '서로 다름'을 인정하기보다는 '상대방만의 다름'에 대해 부정적 평가를 내려왔고, 심지어 적대감의 누적속에서 이룩되어온 대결감정은 작은 것이 아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혈연주의나 연고주의, 가족주의와 같은 규범문화적 내용들은 서로가 '다름'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음'도 존재한다는 동질감을 느끼게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인식과 감정은 서로에 대한 적대감 해소 뿐만 아니라 문화통합의 출발점에서 중대한 요소가 됨을 경시할 수 없다.²⁹⁾

28) 이상면, "통합과정에서의 문화적 충격과 사회·문화적 문제들", 문화방송사빈, 남북한의 사회·문화·경제·정치적 통합과 방송 (서울: 문화방송, 1997), p.204.

29) 중국의 봉인분제와 한국의 봉인분제를 연구한 나단 또한 이러한 입장과 연관성상에 있다. 그는 남북 봉인에 있어 민족적 정체성이나 문화의 유산성은 자산이지만, 그것들의 긍정적 측면을 개방하고 부정적 특성들을 민감하게 다루면서 조심스럽게 조정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 Andrew J. Nathan, "Promoting Politico-Cultural Integration : Lessons for Korea from the Chinese Experience", Paper for the International Seminar of "Korean Unification and the Role of the Media" sponsored by the Hankuk Foundation and Nuhwa Broadcasting Company (Nov. 26, 1997), 문화방송사빈, 정보화시대의 남북한 문화통합, 서울 : 문화방송, 1998. Andrew J. Nathan, *op.cit.*, pp.201-202.

이러한 견해는 서구인의 역사와 심리적 특성과는 다른 한국인 심리적 특성과도 연관을 맺고 있다. 예컨대 김기석은 서구인들과 대비되는 한국인의 심리적 특성 개념으로서 人의 개념, 법 위의 인간(man above law), 비언어적인 以心傳心, 內向性, 조상숭배, 情 지향의 전통, 심리적 대결(encounter)보다 회유(conciliation), 분석보다는 통합적 특성을 열거하고 있다.³⁰⁾ 이들 한국인의 심리적 특성으로 지적된 것들의 일부는 한국뿐만 아니라 중국, 일본 등 동북아시아인들의 특성과도 상통되는 것들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가운데에서도 超法的인 인간관이나 人乃天의 사상과, 현재의 '나'의 존재와 과거의 '아버지들'간의 유대감을 나타내는 조상숭배, 그리고 情 지향적 전통적 심리는, 특히 남북한 주민의 심리적 동질성의 공통기반일 것이다. 따라서 이 특성들은 남북간의 심리적 동질성의 회복 또는 활성화의 주요 매개 변인으로 작용될 수 있음이 분명하다.

따라서 통일교육에서 이러한 동질성의 여러 측면에 대한 소개는 그 역기능에 대한 지적에도 불구하고, 통일에 대한 의식이 점차 희석화되고 있는 청소년 층에게, 그리고 이념적 및 체제적 차원의 이질화에 대한 교육을 중점적으로 받아온 세대들에게 북한사회와 주민들에 대한 인식과 심리적 동질성 회복에 중요한 부분이 될 것이다. 교육학적 관점에서 보면, 민주적 시민문화가 주로 인지적 측면에 초점을 두고 있다면, 전통적 규범문화는 대체로 정의적 측면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동시에 연고주의적 사회조직이 배타적인 이익추구성을 억제하고 감정 및 의사소통체계로서 작용하는 방향으로 인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노력은 연고주의로 하여금 앞으로 사회의 비인격화 내지는 소외화를 제어할 수 있는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이 집단들이 친목단체의 성격을 벗어나서 공익을 위한 봉사기능까지 담당할 수 있게 된다면, 그때 연고주의는 사회적 분열과 파쟁의 원천이라는 역기능 대신에 시민적 연대와 통합이라는 순기능을 행사할 것이다.³¹⁾ 따라서 연고주의와 가족주의가 갖는 긍정적 잠재력을 개발한다면 새로운 공동체문화의 창조가 불가능하지 않은 않을 것이며, 민주적 시민문화와의 갈등적 측면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30) Kim Ki Suk, "Some Key Concept for Understanding People in Korea", *Key Concepts of Social Psychology*, Japanese Society of Social Psychology 20th Anniversary Symposium, 1979 ; 이장호, "남북간 심리적 동질성 회복", 서울대 사회과학과 정책연구, 제15권 제3호 (1993. 9), p.119에서 재인용.

31) 이러한 입장은 유덕희, "통일문화의 개념정립과 형성방안에 관한 연구", 통일문화연구(상)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4, 12), pp.85-86 ; 김성국, "한국자본주의의 발전과 시민사회의 성격: 1960년대 이후를 중심으로", 한국사회학회, 한국정치학회, 한국의 국가와 시민사회 (서울: 한울, 1992), pp.160-161 참조.

2. 공동체문화 지향의 통일교육

최근 청소년을 포함한 국민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남북한 관계와 통일 문제에 관한 의식조사 결과들은 그 동안의 통일교육이 지닌 문제점들을 시사해 주고 있다. 예컨대 전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통일에 대한 의식조사³²⁾는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견해가 세대별로 차이를 보였다고 한다. 즉 당위적인 차원에서는 통일이 필요하다고 대상자 대부분이 동의하였다. 그러나 반드시 필요한가 하는 추가 질문에 대해서는 젊은 세대들은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유희적으로 통일이 되면 어떠한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인가 하는 질문에 대해 젊은 세대들은 북한지역을 구경할 수 있다는 점을 드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통일의 당위성에 대한 질문에서 '반드시 해야 한다'고 응답한 40대 이상은 68%이나 30대는 50%, 20대는 48.8%로 과반수에 못 미치고 있다. 또한 19-29세의 사람들 중에서 '통일은 어떤 희생을 치루더라도 이루어야 한다'는 의견이 44.7%이나 '개인의 희생이 요구된다면 꼭 할 필요는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38.7%, '잘 모르겠다'는 응답자가 16.2%에 달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오늘날의 일반적인 교육 개념이 해방, 자유, 평등, 자아실현 등 자유롭고 독립적이며, 합리적인 존재로서의 인간형성을 목적으로 삼는 개인주의적 교육 이념을 반영하고 있다는 사실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³³⁾

현대의 주요 교육이론이 개인주의 이념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음은 다음의 사실에서 나타난다. 무엇보다도 현대교육 이론은 궁극적으로 학습자의 권리와 관심사항을 반영하는 교육정책을 옹호하고 있으며, 또 그러한 주장만이 정당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개인주의적 관점은 교육을 집단적인 활동으로 간주하여 사회적 문화유산 전달을 담당하는 활동으로서 인식하는 전통적인 교육관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이러한 개인주의에 기초를 두는 자유주의적 교육의 성격³⁴⁾을 보면, 첫째, 교육은 전통적 삶의 양식의 전달이나 사회적 요구를 충족시키는 수단적 활동이 아니라, 그 자체의 내재적인 가치를 갖고 있다고 본다. 둘째, 교육이 갖는 내재적인 가치란 교육의 목적이 개인적 인격성장이거나 진인적 능력의 발달을 지향하는 본질적 활동임을 의미하고, 이런 점에서

32) 청년정책연구소 실시 여론조사, 1993. 7 ; 중앙일보, 1993. 8. 7 ; 중앙일보 실시 신세대 의식조사, (1994. 2. 4)

33) 예컨대 6차교육과정에서 추구하는 이상적 인간상 또한 이러한 측면을 반영하고 있다. 즉 건강한 인간, 창의적인 인간, 도덕적인 인간은 개인주의적 이념에 기초하고 있으며, 학교교육의 목표분류학의 측면에서 볼 때 사회적 목표보다는 개인적 목표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보여진다.

34) 이범용, "공동체주의 도덕교육에 관한 연구", 국민윤리연구(한국국민윤리학회), 제36호 (1997. 6), p.238.

교육이란 인회적이고 개별적이며 자유지향적인 행위라고 본다. 셋째, 교육 받은 사람의 모습은 사회적 전통이나 관습, 권위, 가치 등에 대한 무비판적인 수용이 아니라 이에 대해서 스스로의 합리적 이성을 통한 비판의 과정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합리성과 자율성을 내면화한 사람이라고 본다.)

그러나 이러한 자유주의적 도덕교육 이론은 인지적 접근에 기초한 자율성, 합리성 등과 같은 개인의 존엄적 측면에만 지나치게 집착한 나머지, 그 반대의 측이라 할 수 있는 인간존재의 사회적 본질 및 공동체의 중요성을 간과하는 잘못을 범했던 것이 사실이다. 개인의 권리와 자유, 합리성에 대한 자유주의적 강조는 결과적으로 도덕적 불일치, 공동체와 전통의 파괴를 초래했다.

이러한 교육풍토 하에서 통일주도세력, 특히 청소년 세대들이 표면상 통일이 되어야 한다는 이론적 당위성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인지적 측면), 민족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자신의 이익을 희생하면서까지 통일을 원하는 공동체 의식의 형성하고 있는지(정의적 측면)는 많은 의문의 여지가 있다.

또한 조혜정 교수는 북한사회와 북한사람들에 대한 대학생들의 응답에서 나타난 왜곡된 인식의 형태를 지적하고 있다. 그 하나는 일반적으로 학생들이 글이나 대중매체에 가장 자주 등장하는 표현인 북조선 사람들이 '불쌍하다'는 것과 '촌스럽다'는 것에서 찾아 볼 수 있다.³⁵⁾ 조교수에 의하면, '불쌍하다'는 것은 가난하기 때문이며, '촌스럽다'는 것은 이미 남한 안에서 거처온 특정한 역사적 시기를 이제야 거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즉 근대성을 성취했다는 자의식에서 출발하여 서구 중심적인 자본주의 발전의 척도로 자신들이 거처온 시대, 60년대를 연상시키는 '낙후된' 북한을 '촌스럽다'든지 '불쌍하다'라면서 우월감과 동정으로, 지배의 대상으로 바라보기 시작한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아니면 이들은 더 이상 근대화가 유토피아의 땅에 도달하는 것이 아님을 알게 된 지점에서, 근대화 이전의 '목가적 분위기'와 문화적, 고유성에 대한 향수를 북한을 통해 달래고 싶어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무엇보다도 통일교육은 '나 때문에 통일이 안 온다'고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지 않은 채 외향적으로 통일을 부르짖으면서도 구태의연하게 남북한 우열문화관에 갇혀있는 구체적인 '나의 삶이 자꾸 통일을 밀어내어 왔다'는 점을 반성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해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그 동안의 우리는 평가는 자기중심적으로, 반성은 타인중심적으로 주로 해왔다. 통일이 빨리 오지 않는 이유를 자기 중심적으로 반성해 보는 시각이 남북한 사회를 아우르는 한반도의 지각변화를 가져다 줄 것이

35) 조혜정, '남한'과 '북조선'의 문화적 동질성과 이질성 -민족주의와 진보주의의 단편을 중심으로-, 통일 사회로 가는 길,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개원 기념 심포지움 (1995. 11. 28), pp.25-26.

다. 36) 대립된 남북한 집단문화는 우열이 아닌 다름의 차원에서 이해하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다름을 이해하는 데는 다름에 관한 부단한 연구와 함께 정서적 감정 극복 연습을 해야 할 것이다.

인간이 살아간다는 것은 곧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감을 의미한다. 개인들은 보이지 않는 끈으로 연결된 사회적 인간관계의 망 속에서 서로 의존하며 살아간다. 사회의 분업이 가속화되고, 사회가 개방화될수록 구성원들간의 의존도는 더 커진다. 이 때에 절실히 요구되는 것이 공동체의식을 갖춘 인간이다.

그러므로 우선 남한의 교육이 먼저 삶의 목적 및 이상으로서 더불어사는 공동체를 지향하는 가운데 공동체에 기반을 두는 목표지향성을 지닐 때에만 통일교육 또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즉 교육이 개인의 자율성, 합리성, 권리 등에만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공동체의식과 균형을 이룸으로써 퇴색되어가는 공동체의식의 회복을 위한 노력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진재하에서 공동체문화 지향의 통일교육은 동질적 측면이 잔존하는 한민족의 역사와 문화적 전통을 소중히 여기는 통일교육, 구체적 실천을 중시하는 통일교육, 공동체의 다른 구성원들에 대한 책임감 및 배려와 같은 정서의 계발을 소중히 여기는 통일교육, 공동체의식 계발에 초점을 둔 통일교육 등의 모습을 띠 수 있을 것이다.

3. 미래지향의 적극적 통일교육

과거의 통일교육은 주로 남한사회와 북한사회를 견주는 상호비교방식으로 추진되어왔다. 예컨대 남북한 인간교육 비교, 이념교육 비교, 정치사상교육 비교 등의 사례에서 나타나듯이 대다수의 연구가 남북한 비교를 통해 남한체제의 우월성을 강조하고 북한체제의 약점을 들추어내는 것이었다. 예컨대 반공교육은 북한의 진체적인 부정과 남한의 진체적인 긍정이라는 이분법적이고 흑백논리적인 사고를 특징으로 하고 파괴적 적대의식을 고취시켰다. 여기에 이해와 화해, 협력과 포용, 공존과 통합이라는 내용이 있을 자리가 없었다. 이러한 교육은 분단을 고착화하고 남한과 북한이 분단국가로서의 정치체제와 사회구조를 공고히 다지는 역할을 하였다. 따라서 반공교육은 통일을 준비하고 통일의 가능조건을 만들어주며, 통일을 앞당기는 교육은 아니었다. 37) 또한 통일안보교육은 여진히 적극적으로 북한을 이해

36) 김영세, "우열과 다름의 남북문화", 연세대 통일연구원 제3차 정기학술회의, 통일을 위해 남한도 변해야 한다. (1997. 11. 21), pp.24-25)

37) 오인타, "통일교육의 방향", 이영선편, 통일준비 (서울 : 오류, 1997), pp.141-142.

하고 포용하며 유화적 접근을 가능하게 하는 정신과 의식을 배양하는 교육과는 거리가 먼 것이었다. 이런 교육은 일종의 소극적 교육이었다.³⁸⁾

동시에 종래의 통일교육의 수업방식은 '이질화의 사례집'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경향을 보여왔다. 앞에서 남북한 문화구조의 동질적 측면에서 보았듯이, 이제 이러한 수준은 극복되어야 한다. 남북민족간의 이질화 사례를 모아 놓고 그 문제점을 부각시킨 후 그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읽고, 외우고 평가받는 일이 이질화 극복을 위한 교육방안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³⁹⁾ 아울러 통일교육의 기본 방향 역시 양극적 분열상을 노정시킨 이데올로기와 체제비판에서 민족의 평화통일 실현을 위해 남북이 공유할 수 있는 인지적 경험문화의 외현적 차원, 심미적 문화의 부분적 동질성, 전통적 규범문화에 대한 인식을 통해, 과거의 '전통적 측면의 동질성과 이념과 체제적 측면에서의 이질성'이라는 단선적인 관점을 극복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나아가 북한의 대남공세와 관련된 '민중적 통일론'과 '주체적 통일론'의 대두와 환상적, 감상적, 회의적, 비판적 통일관을 극복하고 조정, 수용할 수 있는 내용과 방법이 개발되어야 한다.

분단 이후 북한주민들은 남한과 다른 체제와 성격의 지도자 밑에서 살면서 다른 생활세계(Lebenswelt)를 경험하여 왔다. 따라서 북한주민들에 의한 도출되는 사회·문화적 현상을 정확히 분석하려면 그들이 겪은 생활세계의 이해를 바탕으로 하여야 함이 명백하다. 따라서 기존의 모든 것에 팔호를 치고(époché) 북한연구에 있어 북한주민들의 신발을 신고 그들의 안경을 쓰고 북한의 사회·문화를 보아야 한다는 현상학적 접근이 요구된다.⁴⁰⁾ 이는 곧 인류학의 내관적 접근법과 연장선상에 있는 입장이라고 볼 수 있다.⁴¹⁾

나아가 북한의 문화현상을 접근하는데 있어 체제가 지향하는 이념에 크게 제약되는 측면과 동시에 체제가 지향하는 이념과는 어느 정도 간격을 지니는 생활세계를 함께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진다. 이러한 접근은 기존의 내재적(internal) 및 외재적(external) 접근법의 한계를 나름대로 벗어날 수 있다고 보여진다. 이러한 입장은 다음과 같이 편의상 3단계

38) 물론 이러한 유형의 교육들은 남한주민들에게 대북우위의 자신감을 고취시켜 남한체제의 안정화에 긍정적인 도움을 주기도 하였다.

39) 이경희, "민족공동체 형성을 위한 사회통일 교육방안의 모색-교수학습방법을 중심으로", '96 북한 및 통일연구 논문집(Ⅱ), 통일교육 및 통일대비 분야 (1996), p.72.

40) 이은숙, 북한사회연구-사회학적 접근- (서울 : 서울대출판부, 1985).

41) 문화인류학에 있어 外觀的 接近(etic approach)과 內觀的 接近(emic approach)에 대한 논의는 ; Julia G. Crane, Michael V. Angrosino, *Field Project in Anthropology : A Student Handbook* (Prospect Heights, Illinois : Waveland Press, 1992), p.121 ; James P. Spradley, *Culture and Cognition : Rules, Maps, and Plans* (Prospect Heights, Illinois : Waveland Press, 1987), pp.133-135 참조 ; James P. Spradley, *Participant observation* (N. Y. : Holt, 1980), p.3 ; Bronislaw Malinowski, *Argonauts of the Western Pacific* (London : Routledge, 1922), p.25 참조.

의 과정을 지향하는 것으로 제시될 수 있다. 우선 북한의 문화 실태를 고찰하는 단계로 먼저 북한의 현상을 객관적으로, 또 사실적으로 파악하는 자세(價値中立 指向), 그런 뒤 북한의 현상을 북한사람들의 입장과 관점에서 이해하는 현상학적 접근, 마지막으로 보편적 가치기준에 의한 윤리적 판단⁴²⁾을 취하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유의해야 할 것은 두 번째 단계이다. 이것은 소위 맹목적인 친북입장이 아니다. 그것은 북한사회에서 나타나는 제반현상을 북한사람들의 입장과 관점에서 이해하자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태도는 북한주민들이 김일성의 은덕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 김일성에 대한 존경심과 충효일심, 그리고 지난 1994년 7월 김일성 사후 오열하는 북한주민들의 모습 등이 초래된 시대적 상황과 심리꼴 이해하자는 것이지 동조하거나 찬동하자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또한 마지막으로 보편적 가치기준에 의한 윤리적 판단을 행하는 것은 남북한 주민들이 더불어 살아가야 할 공동체라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이루어진다. 즉 이러한 과정은 남북한의 문화현상을 객관적으로 분석한 후 제도적 통일 이후 개선해야 할 측면이나 수용, 발전시켜야 할 측면을 선정해 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통일을 예비하고 통일을 끌어당기며, 예기치 않은 통일에 대비하는 교육, 생명을 살리고 땅을 살리며 평화롭게 통일을 이룰 수 있는 능력으로서의 교육, 엄청난 통일비용의 부담을 참아낼 수 있는 마음으로서의 교육, 북한의 사회와 사람을 그들의 상이성에 있어서 인정하고 포용할 수 있는 능력으로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러한 교육이 적극적인 통일교육이다. 이 안에서 안보의식을 심어주어야 할 것이다.

최근 일부 통일교육에 대한 논의를 보면 안보교육을 등한시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또한 안보교육과 반공교육을 동일시하기도 한다. 그러나 전술한 바와 같이 안보는 현재에도 필요하지만 통일 이후에도 필요한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통일교육의 큰 테두리 안에서 안보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⁴³⁾ 결국 이렇게 함으로써 남북한 주민이 함께 살아가야 할 공동운명체임을 강조해야 한다.

42) 이러한 과정은 우선 현지인의 입장에서 북한을 연구함으로써 그 객관적 실체쯤 과학적으로 규명하고, 그런 연후에 인간의 본질적 가치를 실현시킬 수 있는지의 여부를 비판적으로 검토한다는 것이다. 대체로 보편적 가치기준은 민주적 가치, 평화적 가치, 풍요와 복지의 균형, 다양성의 인정으로 분수 있다.

43) 오인택, "통일교육의 방향," 이영선편, 통일준비 (서울 : 오산, 1997), p.158.

VI. 결 론

과거의 경험에서 비추어 보아도 알 수 있듯이 통일은 결코 한두번의 남북대화나 상호방문, 또는 정상회담으로서 간단히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동시에 통일은 흡수식의 동서독통일의 후유증과 타협식의 예멘의 통일 후 내전이 중요한 교훈으로 제시해주듯이 정치적 또는 경제적 통합만으로 간단히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에 주의해야 한다. 우리가 통일문제에 접근하는데 있어 무엇보다도 중요시해야 할 것은 통일은 정신적 또는 가치관의 통일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통일은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인 노력이 가시적으로 진행되는 동시에, 어떤 면에서 비가시적인 성격을 지니는 의식적인 통일을 이루기 위한 준비와 실행을 통해서 접근될 수 있는 하나의 장기적인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다.

남한이 북한에게 적대적이고 부정적인 대상으로 인식되어 왔듯이 북한 역시 오랜 세월동안 남한의 적대적인 집단으로 인식해 온 것은 역사적 현실이다. 그것이 체제내적 정당화를 위해서 이루어져왔든지 아니면 정권차원에서 정통성확보를 위한 정치적 메카니즘에 의해 표출되었든지 간에 이제 그러한 차원의 논의는 중단되어야 한다. 동시에 북한에 대한 시각과 인식의 변화가 전제되지 않고서는 올바른 진단과 대책이 나올 수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무엇이 허상인지 무엇이 실상인지 북한에 대한 개관적 평가와 판단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다. 그러므로써 50여년간의 분단된 사회체제에서 살아온 사람들의 문화생활에 있어 이질적 측면과 동질적 측면이 비교적 명확히 파악된 것이며 공동체라는 관념이 새롭게 인식된 것이다. 이것이 통일을 위한 준비의 첫걸음이 될 것이며, 또한 이러한 결과물들이 통일교육의 내용에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이 이루어질 때 점차 퇴색되어가는 통일에 대한 의식이나, 맹목적인 적대감, 감상적 통일론에 대한 무비판적 수용 등이 극복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의 통일교육은 미군정기로부터 제4차 교육과정에 이르기까지 '반공교육'으로, 제5차 교육과정개정으로 방향전환을 이룬 '통일·안보교육'으로, 그리고 제6차 교육과정에서 '통일교육'으로의 변화를 거쳐왔다. 이러한 변천과정을 거치면서 북한에 대한 은유와 북한에 대한 인식은 많은 변화를 보여주었다. 우선 반공교육하에서는 북한을 '빨갱이 집단, 적, 침략자'라고 표현했으며, 북한체제를 부정하고 수북통일의 대상으로 인식했다. 이러한 측면은 통일안보교육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났다고 볼 수 있는 바, 그것은 북한을 '살인마, 전쟁광, 테러집단'으로 표현한 것에서 잘 나타난다. 반면

이 시기에는 북한체제에 대해 진과 달리 북한이라는 실체를 인정하고 대화협상의 대상으로 인식하는 양면성을 나타내기도 하였다. 이러한 북한에 대한 인식과 은유는 통일안보교육의 말기에 들어서면서 북한을 동족, 한민족, 민족공동체로 표현하였고, 공동번영해야 할 민족공동체로 인식하게 된다. 그리고 통일교육기에 들어오면서 과거의 통일교육의 부정적 측면을 반성함에 따라 북한에 대한 시각은 '경쟁해야 될' 또는 '싸워서 이겨야 할' 상대가 아니라 '더불어 살아야 할' 한 민족공동체의 일원이라는 인식상의 변화가 나타났다.

이러한 표현상 그리고 인식상의 변화를 볼 때 우리의 통일교육에 있어 무엇보다도 북한에 대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인식형성을 위한 교육뿐만 아니라 남한의 문제점 또한 정확하게 인식시키고 이를 통해 발전의 방향을 탐색케 하며, 나아가 남과 북의 장단점을 정반합적인 관점에서 통일시킬 수 있는 교육의 내용체계의 확립이 필요함을 절실하게 감지할 수 있다. 동시에 남북한 문화의 동질적 측면에 대한 과거의 잘못된 인식에서 벗어나 의외로 동질적 측면이 많음을 인식하고, 이를 통해 정의적 측면에서 더불어 살아야 할 공동체라는 의식을 고양시키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다.

동서독 통일을 보면서 그 후유증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우리는 얻지만, 동시에 우리는 그네들의 통일을 위한 정치, 경제 및 사회적 차원에서의 지속적인 교류 협력과 교육적인 노력을 해왔음을 중요한 교훈으로서 삼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 앞으로의 통일교육은 과거와 같은 흑백논리나 남북한 서로에 대한 적대감만을 고조시켜왔던 시치프스의 신화를 되풀이 해서는 안된다. 통일을 위한 준비로서의 문화통합을 지향하는 통일교육은 앞으로의 통일을 위한 교육에 있어 중심적 주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1. 국내문헌

(1) 단행본

- 김성국, “한국자본주의의 발전과 시민사회의 성격 : 1960년대 이후를 중심으로”, 한국사회학회, 한국정치학회편, 한국의 국가와 시민사회, 서울 : 한울, 1992.
- 김학성, “통일문화 연구의 방향 - 독일사례를 중심으로 -”, 민족통일연구원편, 통일문화연구(상), 서울 : 민족통일연구원, 1994.
- 서울대학교교육연구소편, 통일교육지침서 개발연구(사회교육분야), 서울; 서울대학교교육연구소, 1989.
-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1종도서 도덕·윤리 연구개발위원회편, 윤리지도서, 서울; 교육부, 1996.
- 서재진, 북한 사회의 계급갈등 연구, 서울 : 민족통일연구원, 1996.
- 오인탁, “통일교육의 방향,” 이영선편, 통일준비, 서울 : 오름, 1997.
- 윤덕희, “통일문화의 개념정립과 형성방안에 관한 연구”, 통일문화연구(상), 서울 : 민족통일연구원, 1994, 12.
- 이광규, 새로운 민족관의 수립을 위하여, 서울 : 서울대출판부, 1995.
- 이상면, “통합과정에서의 문화적 충격과 사회·문화적 문제들”, 문화방송편, 남북한의 사회·문화·정치·경제적 통합과 방송, 서울 : 문화방송, 1997.
- 이영선편, 통일사회로 가는 길, 서울 :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1996.
- 이온죽, 북한사회연구, 서울 : 서울대출판부, 1985.
- _____, 통일시대 민족통합의 정신적 구심점 및 사회통합의 하부구조 모색을 위한 기초 연구, 서울 : 세종연구소, 1996.
- 이우영, 통일문제에 대한 세대간 갈등 해소방안, 서울 : 민족통일연구원, 1995, 12.
- 이장호, “남북통일의 문화심리적 장애요인”, 한국심리학회 통일문제 학술심포지움, 남북의 장벽을 넘어서-통일과 심리적 화합, 1993, 6.
- 이정춘, “통일이후 남북한 방송통합-새로운 남북통합 방송제도의 모색”, 문화방송편, 분단국통합과 방송, 서울 : 문화방송, 1997.
- 전경수, 서병철, 통일사회의 재편과정, 서울 : 서울대출판부, 1995.

- 정세구, “한국의 민주시민에게 요청되는 윤리·도덕의 정립”, 한국국민윤리학회회편, 민주시민을 위한 윤리·도덕, 서울 : 형성출판사, 1992.
- 최정호외, 분단국의 통일과 문화예술 및 문화예술인의 통합에 관한 연구-독일을 중심으로-, 서울 : 한국문화예술진흥원 문화발전연구소, 1991.
- 황병덕, 통일교육 개선방안 연구, 서울 : 민족통일연구원, 1997.

(2) 논문집

- 강민석, “민족공동체윤리체계의 정립을 위한 통일교육의 접근방향”, 공주대 교육연구, 제9집, 1993.
- 김도태, 이경화, “통일교육 개선방향 : 사회문화적 측면을 중심으로”, 민족통일연구원 통일연구논총, 제6권 1호, 1997.
- 김명세, “우열과 다름의 남북문화”, 연세대 통일연구원 제3차 정기학술회의, 통일을 위해 남한도 변해야 한다, 1997. 11. 21.
- 김명한, 중앙대학교 민족발전연구원 주최 통일정책대토론회, 민족동질화를 위한 통일교육의 기본방향, 토론자료, 1997. 1. 28.
- 박용현, “『통일대비교육지원법』의 입법방향과 주요내용”, 통일대비교육지원법 제정 공청회, “통일대비교육지원법의 입법방향과 실천과제”, 1997. 9. 1.
- 손기웅, “통일이후 민족통합을 위한 교육방안”, 창원대 사회과학연구소 제22회 통일문제학술발표회 논문집, 민족통합의 문제점과 대응방안, 1997. 11. 21.
- 오기성, “고등학교 윤리과 통일교육의 새로운 정향 연구”, 한국도덕윤리과교육학회 도덕윤리과 교육, 제9호, 1998. 7.
- _____, “동질성회복을 위한 청소년 통일교육의 방향에 관한 연구”, 한국청소년개발원 한국청소년연구, 제25호, 1996, 겨울.
- _____, 문화의 구조분석에 의한 남북한 문화통합 연구, 서울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8. 8.
- 윤건영, “통일교육의 교수학습 준거설정에 관한 연구”, 통일원, '95 북한 및 통일연구논문집(IV), 1995.
- 이경희, “민족공동체 형성을 위한 사회통일 교육방안의 모색-교수학습방법을 중심으로”, '96 북한 및 통일연구 논문집(II), 통일교육 및 통일대비 분야, 1996.
- 이범웅, “공동체주의 도덕교육에 관한 연구”, 국민윤리연구(한국국민윤리학회), 제36호, 1997. 6.

- 이수원, 신건호, “남북한의 이데올로기 갈등과 사회발전”, 남북의 장벽을 넘어서-통일과 심리적 화합, 한국심리학회 주최 1993년도 통일문제 학술 심포지움 발표논문, 1993. 6. 11-12.
- 이우영, “대학 통일교육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민족통일연구원 통일연구논총, 제6권 1호, 1997.
- 이영희, “남북한 정치사회상의 이질감과 극복”, 남북한 이질감과 그 극복전망, 효성여대 현대사상연구소 주최 1993년 통일문제 교수 학술세미나, 1993. 9. 23.
- 이장호, “남북간 심리적 동질성 회복”, 서울대 사회과학과 정책연구, 제15권 제3호, 1993. 9.
- 정세구, “남북한 화해시대에 부응하는 민주시민교육”, 도덕윤리과교육, 제3호, 1992.
- _____, “통일교육의 실태와 문제점”, 한국사회과교육연구회 사회과교육, 제26집, 1993. 8.
- _____,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과 중·고등학교 통일교육의 방향”, 경기교육, 110호, 1991. 4.
- 조혜정, ‘남한’과 ‘북조선’의 문화적 동질성과 이질성 -민족주의와 진보주의의 담론을 중심으로-, 통일사회로 가는 길,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개원 기념 심포지움, 1995. 11. 28.
- _____, “통일공간과 문화”, 연세대 통일연구원 통일연구, 창간호, 1997.
- 최 협, “남북한 사회통합의 과제와 전망,” 21세기 논단, 1992, 겨울호.
- 한만길, “대학생의 통일관과 통일교육의 방향”, 숙명여대 통일문제연구소 제32회 통일문제세미나, 통일교육의 과제와 정책, 1997. 5. 29.
- _____, “민족문제와 통일교육의 방향”, 민족혼, 제6집, 1992,

2. 국외문헌

(1) books

- Alexander, Jeffrey C., "Analytic Debates : Understanding relative Autonomy of Culture", Alexander, Jeffrey C. & Seidman, Steven (eds.), *Culture and Society*, Cambridge : Cambridge Univ. Press, 1990.
- Angel, Robert C., "Social Integration", David L. Sills, ed., *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the Social Science*, N. Y. : The Free Press, 1977

- Archer, Margaret S., *Culture and Agency* (Rev. ed.), Cambridge : Cambridge Univ., Press, 1996.
- Bahmueller, Charles & N. Charles F. Quigley, *CIVITAS ; A Framework for Civic Education*, N. Y : Center for Civic Education, 1991
- Calhoun, Craig, "Indirect Relationships and Imagined Communities : Large-Scale Integration and the transformation of Everyday Life", Pierre Bourdieu and James S. Coleman, *Social Theory for a Changing Society*, N.Y. : Westview Press, 1987.
- Charon, Joel M., (ed.), *Symbolic Interactionism : an Introduction, an Interpretation, and Integration*, 4th, Englewood Cliffs : Prentice-Hall, 1992.
- Craib, Ian, *Modern Social Theory ; From Parsons to Habermas*, N. Y. : St. Martin Press, 1992.
- Crane, Julia G., Michael V. Angrosino, *Field Project in Anthropology : A Student Handbook*, Prospect Heights, Illinois : Waveland Press, 1992.
- Habermas, Jurgen, *The Theory of Communicative Action*, Vol. II ; *Life World and System*, trans. by McCarthy, Boston : Beacon Press, 1987.
- Lockwood, David, "Some Remarks on *The Social System*", N. J. Demereth and R. A. Peterson, (eds.), *System, Change and Conflict : A reader on contemporary sociological theory and the debate over functionalism*, The Free Press, 1967.
- Malinowski, Bronislaw, *Argonauts of the Western Pacific*, London : Routledge, 1922.
- Nathan, Andrew J., "Promoting Politico-Cultural Integration : Lessons for Korea from the Chinese Experience", Paper for the International Seminar of "*Korean Unification and the Role of the Media*" sponsored by the Hankuk Foundation and Nuhwa Broadcasting Company (Nov. 26, 1997), 문화방송편, 정보화시대의 남북한 문화통합, 서울 : 문화방송, 1998.
- Sandole, Dennis J. D. & Hugo van der Merwe, ed, *Conflict Resolution Theory and Practice : Integration and Application*, Manchester : Manchester Univ. Pr., 1993.

- Spradely, James P., *Culture and Cognition : Rules, Maps, and Plans*, Prospect Heights, Illinois : Waveland Press, 1987.
- _____, *Participant observation*, N. Y. : Holt, 1980.
- Turner, J. H., "Analytical Theorizing", in *Social Theory Today*, edited by Anthony Giddens and J. H. Turner, Stanford, CA : Stanford Univ. Press, 1987.

(2) Articles

- Betancourt, H., & S. R. Lopez, "The Study of Culture, Ethnicity, and Race in American Psychology," *American Psychologist*, June, 1993.
- Eberstadt, N., "Perilous Road to Reunification", *Foreign Affairs*, Vol.72, No.2.
- Fulbrook, Mary, "Aspect of Society and Identity in the New Germany," *Daedalus*, Vol. 123, No. 1, Winter, 1994.
- Karl Otto Hondrich, "Das Recht des Erfolgreichen", *Tagesspiegel*, 1991. Vol.9. No.22.
- Kim Ki Suk, "Some Key Concept for Understanding People in Korea", *Key Concepts of Social Psychology*, Japanese Society of Social Psychology 20th Anniversary Symposium, 1979.
- Optiz, Peter J. and Herz Dietmar, "The Integration of East and West Germany in the Post-Unification Period," *Sino-Soviet Affairs*, 64, Win. 1994.

남북한 사회통합의 실현을 위한 주민교육의 기본 방향

조 치 현 (남북회담사무국 상근위원)

〈 목 차 〉

- I. 서 문
- II. 통일 이후 사회에 예상되는 갈등과 혼란
- III. 남북한 사회통합의 기본 과제와 통합정책의 추진 방향
- IV. 통일 이후 사회통합을 위한 북한 주민 대상 「체제전환교육」의 기본 방향
- V. 결 문

I. 서 문

갈라져 있는 나라와 민족의 통일문제는 지난 반세기가 넘은 세월을 걸쳐 우리 민족 모두에게 지상의 명제가 되어 왔다. 우리 민족에게 통일이란 “제 2의 해방”, “제 2의 건국”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것은 단순히 분단된 국토와 민족의 재결합이나 정치 경제적 합병만을 의미하는 것이 될 수는 없다.

우리에게 통일이란 갈라져 적대해 왔던 민족간에 대 화합을 이룩하는 역사적 전기를 마련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민족 전체의 번영과 발전을 기약하는 새로운 미래의 건설작업인 것이다.

따라서 궁극적인 통일은 외형적인 통일만이 아닌 내면적으로 두 사회가 하나로 통합될 수 있을 때 비로소 실현되는 것이다. 다시 말해 남북한 주민간에 “인간의 통일”, “마음의 통일”을 이룩할 수 있는 사회 문화적 통합 즉, 사회 문화적 공동체가 형성되어야 이 땅에 비로소 완전한 통일이 달성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통일의 궁극적 형태로서 실현되어야 하는 남북한의 사회 문화적 통합이란 둘로 나뉘어 이질화된 사회·문화체계의 통합과 함께 새로운 통일 사회에서 더불어 살아가게 될 남북한 주민의 이질화된 가치관, 의식구조, 행동양식의 동질성 회복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실제로 이 땅에 어떤 형태로든 통일이 실현되는 경우, 체제의 통합과 합

게 생활환경 면에서 큰 변화가 초래됨으로써 통일 사회에서 삶을 영위해 나갈 모든 사람들에게 엄청난 심리적 충격과 함께 여러 가지 갈등과 혼란을 안겨 줄 것이 분명하다.

통일 국가의 건설과정과 통일 이후의 사회에 예상되는 이러한 갈등과 혼란들을 원만히 해소하지 않고는 우리가 지향해 나가야 하는 통일의 최종 목표로서 사회통합을 달성하기 어렵게 될 뿐만 아니라, 통일된 국가 사회의 안정과 발전을 도모해 나갈 수도 없게 되는 것이다.

독일과 예멘의 통일 선례에서 볼 수 있듯이 남북한에 정치적 제도적 통일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양자가 하나의 생활공동체로서 갈등을 조화롭게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내적 통합의 상태가 저절로 실현되는 것은 아니다.

정치적 제도적 통일은 정치체제의 구조적 통합에 불과한 것이며, 궁극적인 통일이 성취되려면 상이한 두 체제 아래 갈라져 살아 온 남북한 주민들간에 이질적인 가치관과 사고방식, 상이한 행위양태로 말미암은 갈등이 해소되고 다양한 사회적 균열이 치유되어지는 사회통합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여기서 사회통합은 남북간의 사회적 갈등과 균열의 외형적인 해소라는 소극적 상황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통일로 남과 북 두 사회에 내재해 왔던 이질화와 분리, 차별, 불평등과 같은 요소들이 실질적으로 제거되거나 감소되어 그 안의 모든 주민들이 통일 공동체에 대한 정체감과 귀속감을 가질 수 있게 될 때 비로소 실현되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다.¹⁾

이렇게 볼 때 남북한 사회통합의 달성 여부는 또한 통일 국가 건설과정을 원만하게 수행해 나가기 위한 일차적 기반조건이 된다는 단기적 관점에서 뿐만 아니라 장기적 차원에서 통일된 국가 사회가 안정을 이룩하고 항구적 발전을 도모해 나가기 위한 기반이 된다는 점에서 대단히 큰 의미를 가지는 것이다.

통일 후 국가 사회의 안정과 발전의 기본 조건이 되는 사회통합을 효과적으로 달성해 나가기 위해서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종합적인 대책이 수립 추진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중에서도 가장 시급하고 원천적인 과제로 등장하는 것은 새로운 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남북한의 주민들을 어떻게 하면 하나로 묶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인간의 통일' 문제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통일이란 충격적인 변화를 맞아 '인간의 통일'을 이룩해 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기존의 사회화체계를 재 구조화하고 그 목표와 추진방향을 다시 조정해 나가는 재사회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 통일 후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격변된 생활환경에 적용해 나

1) 전상인, <“통일과 남북한의 사회통합” ,통일문제연구> 1996, 평화통일연구소

갈 수 있는 개인적 적응능력을 배양해 줌과 아울러 가치의식과 문화양식의 차이에 기인하는 사회 문화적 갈등을 근원적으로 해소해 나가도록 지원하는 제사회화교육의 체계적인 실시 문제는 무엇보다 시급한 통합과제로 등장하는 것이다

통일 후 사회에서 제사회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은 남북한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되어야 하지만 이중에서도 우선되어야 하는 것은 북한 지역에 잔류하는 주민을 주 대상으로 하는 이른바 「체제전환교육」이 될 것이다.

통일이 남한 주도하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상정하는 경우*2), 지난 반세기 동안 분단체제 아래 남한과는 전혀 다른 가치관과 생활양식, 생활환경 아래 삶을 영위해 온 북한 주민이 당면케 될 사회 심리적 갈등과 충격은 남한 주민에 비해 훨씬 심각한 것이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통일을 주도해 나갈 우리가 “준비 있는 통일”을 맞이하려면 무엇보다도 북한 주민을 대상으로 시행될 「체제전환 교육」의 기본 방향과 내용, 방법 등을 포함하는 구체적인 대책을 사전에 강구하고 그 시행을 준비해 나가야 한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입각하여 본 연구는 통일 후 북한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 재교육방안을 통일 후 사회통합이란 종합정책의 차원에서 검토하고, 이것이 지향되어야 할 기본 방향과 핵심적인 내용요소를 총론적 차원에서 정립 제시해 보려 한다.

이러한 목적에서 본 연구는 우선 한반도에 통일이 실현될 경우에 예상되는 사회 문화적 차원의 혼란과 갈등의 양상이 어떤 것이 될 것이며, 이러한 갈등을 야기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가를 분석해 보는 것으로부터 출발할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제 2장에서는 독일의 사회통합 경험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과 북한이탈주민들이 우리 사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적응상의 문제점이나 사회 심리적 갈등의 내용을 그 동안 수행된 관련 학자와 전문가들의 조사 연구결과를 종합 분석하는 방법으로 고찰해 보고자 한다.

2) 여기서 남북 통일은 남한 측이 주도하는 가운데 체제 면에서 시장경제원리에 기초한 민주주의 이념으로의 통일과 실현과정 면에서 비교적 급격하게 이룩되는 통일을 전제하고 있다.

신체 남북한의 통일이 이루어지는 형태와 과정은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겠으나, 첫째로 통일에 대비한 계획이나 대비책 등은 이것을 수립하는 측이 주도하는 통일을 가정할 수밖에 없다는 현실적 제약을 안고 있는 것이고,

둘째로 90년대 이후 남북한이 처하고 있는 상황 여건과 세계사적 반전 추이로 비추어볼 때 한반도에 있어서 가장 실현 가능한 통일 모델은 자유민주주의에 기초한 자본주의 체제의 통일일 수밖에 없으며,

셋째로 만일 남북한의 통일이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민족적 동진화과정을 거쳐 하나의 민족공동체를 형성한 다음에 장기간에 걸쳐 점진적 단계적으로 이룩되는 경우에는 사회적 통합을 위한 정신 문화적 과정이 대부분 소멸된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선협 사례의 성찰을 통하여 앞으로 남북한 주민이 하나의 사회를 이룩하여 살게 될 때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회 문화적 갈등과 혼란, 통합상의 문제점들이 무엇인가를 다각적으로 추단해 볼 수 있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는 것이다.

이어 제 3장에서는 제 2장의 분석을 토대로 통일 국가 건설과정과 그 이후에 제기될 사회통합의 과제들과 이를 해결해 나갈 통합정책의 기본 방향을 정립 제시한 다음, 제 4장에서는 통일 후 사회통합을 달성해 나가기 위한 가장 효과적이며 필수적인 정책수단의 하나로 선택되는 북한주민대상 체제전환교육계획의 수립에 기본 지침이 된 교육의 기본 목표와 방향, 교육 영역별 중심 주제와 주안점, 기타 교육과정 운영상에 특히 유념되어야 할 사항들을 구안 제시할 것이다.

II. 통일 이후 사회에 예상되는 갈등과 혼란

1. 통일 후 독일의 현실에서 얻어지는 시사점

(1) 통일 후 독일 사회에서 제기된 사회 문화적 갈등과 후유증

통일의 추진과정과 이후에 제기될 제반 문제점과 부작용, 후유증 등을 사전에 예측해 보고 이에 대한 대책을 사전 강구해 마련해 보려는 우리의 논구는 우리보다 앞서 통일을 이룩한 다른 분단국들이 통일 국가의 건설 과정과 그 이후에 걸쳐 사회통합이란 차원에서 어떤 갈등과 혼란을 겪어왔으며 현재 어떤 현실에 처해 있는가를 살피보는 것에서 유용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여기서 특히 독일의 통일 사례에 특별한 관심을 돌리게 되는 것은 전쟁 방식에 의한 공산화 통일을 이룩했던 70년대의 베트남의 통일이나 정치적 지도층간의 합의에 의해 서둘러 체제를 통합한 후 구 정치세력간의 갈등으로 내전이 발발되어 결국 북 예멘군이 남 예멘군을 무력으로 진압하는 방식으로 통일을 이루었던 90년대 예멘의 통일방식과는 달리 독일의 통일모델이 우리가 지향하는 바와 거의 동일한 자유 민주주의가 구현된 점진적 평화통일이었으며, 비교적 급진적 과정을 거쳐 제도적 통일을 이루었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더 많은 시사점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독일은 지난 72년 동서독간에 기본조약을 체결한 이래 18년이 지난 90년 10월 3일을 기하여 사회주의 체제이었던 구 동독을 자유민주주의 이념과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토대로 하는 서독 체제에 흡수 통합하는 방식으로 역사적인 통일을 이룩하였고 이제 8년이란 세월이 경과되었다.

그러나 통일 이후의 독일이 당면하고 있는 국내적 현실은 애초의 기대나 희망과는 달리 그리 긍정적인 것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이다.

오늘에 와 통일비용과 관련한 독일 중앙정부의 재정압박, 구 동독지역의 사회·경제적 및 사회 심리적 혼란과 갈등, 서독지역 주민들의 과도한 통일비용 부담에 대한 불만, 동·서독 주민간의 심리적 반목 및 동질성 회복의 어려움, 독일 민족이 당면케 된 정체성위기 등으로 요약되는 통일후유증이 전반에 부각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독일에서 통일에 수반 되었거나 이것이 걸과한 사회적 문제들과 혼란, 갈등의 상당 부분은 사회·경제적 차원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는 것들로서 독일 사회의 총체적인 역량에 비추어 볼 때 그 치유책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것들이며, 오늘에 와 외형적 제도적 차원에서 통합작업은 상당히 성공적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궁극적인 통일의 달성이란 관점에서 볼 때 이러한 사회 경제적 문제들의 이면에 근본적인 원인으로 작동하고 있는 사회 심리적 갈등요소들의 영향력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심각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이다.

통일 후 8년이 지난 오늘에 와서도 많은 사람들의 입에 회자되고 있는 “마음의 벽” 이나 “한 국가 내의 두 사회”라는 표현, 동서독 주민 사이에서 서로를 비하하여 부르는 “서쪽 것들”(Wessis)과 “동쪽 것들”(Ossis)이라는 호칭들은 통일된 독일 사회가 오늘날 당면하고 있는 사회 심리적 갈등과 통일 후유증을 상징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표징들이라 할 수 있다.

통일 후 내적 통합대책을 좀더 현실적으로 세워나가기 위해서는 통일 후 독일 사회에서 실제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과 후유증들의 내용을 좀더 구체적으로 분석해 봄으로 타산지석의 교훈으로 삼을 수 있다는 관점에서 그동안 독일의 사례를 집중적으로 분석해 온 많은 국내 학자와 전문가들의 조사 연구 결과들을 여기서 고찰해 볼 필요가 있다.³⁾

3) 여기서 참고자료로 활용한 관련 연구논문들의 목록은 다음과 같다.

- ① 신 윤, “독일 통일에 나타난 동독 주민의 문화적 갈등과 그 해소방안 연구”, 통일문화시리즈 96-2, 민족통일연구원
- ② 김학성, “‘통일문화’연구방향”-독일 사례를 중심으로-, 『통일문화연구 (상)』, 1994. 12, 민족통일연구원.
- ③ 김학성, “독일 사례를 통해 본 문화적 이질성 극복방안”, 민족통일연구원 주최 국내학술회의 발표논문, 1994.

그 동안에 국내 학계에서 발표된 이에 관련된 논문들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통일 독일이 당면하고 있는 사회적 혼란과 갈등 양상은 대략 다음 몇 가지인 것으로 나타난다.

첫째, 통일이 결과한 후유증 중에서 가장 심각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것은 통일 전 동독 지역에 살았던 주민들이 겪게된 심리적 혼란과 사회 문화적 부적응에서 오는 갈등현상이다.

무엇보다도 동독지역 주민들은 획일화된 사회 속에서 오랫동안 살아온 탓으로 새로운 통일 사회에서 주어지는 다양성과 복잡성에 적응해 나가는 데에 적지 않은 혼란과 애로를 겪고 있다는 것이다.

다원화 개방화된 새 사회체제 하에서 실제로 경험하게 되는 지향 가치의 다양성, 견해의 다양성, 주어지는 물건이나 기회, 선택의 다양성 등은 동독 출신 주민들 대부분에게는 이전에 전혀 경험해 보지 못한 세계에 해당하는 것이다.

구 동독인들은 통일 후 급격한 체제 전환에 따른 소위 '문화적 충격' 속에서 헤어나지 못한 채 불안한 마음으로 변화된 생활환경에 적응하려 노력하여 왔으나 갑자기 현실로 닦아온 새로운 사회환경에 적응하는 일은 그들의 입장에서 볼 때 결코 쉽지 않는 일이다.

새로운 사회의 다양성과 복잡성에 관련하여 통일 후 독일 사회에서 특히 대부분의 동독인들이 당면케 된 또 하나의 문제는 달혀 있던 정보가 개방되고 있으나 그 많은 정보 중에서 어떤 정보를 선택하고 믿으며 이용해야 좋을 것인가를 분별하지 못해 당황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한마디로 말해 통일 후 동부 독일인들은 '정신적인 대립들 속에서의 개방성 안에 사는 것'을 배워야 하는 어려움에 갑자기 당면케 된 것에 몹시 당황해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뿐만 아니라 적지 않은 동독인들이 통일 후 심리적 방황과 무기력감에 빠지게 되었는데, 이러한 방향감각의 상실과 무력감은 단기적 처방으로 쉽게 치유된 성질의 것이 아니다.

둘째, 통일 이후 독일 사회가 직면하게 된 또 하나의 문제는 동서독 지역 주민들간에 개재하는 불화와 반목, 상호 불신현상이 통일 이후에도 감소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하나의 독일로 통일된 이후 상당한 시간이 지났음

11. 29

- ④ 전성우, "통일 독일의 사회통합-사회통합의 관점을 중심으로-", 민족통일원 북한사회연구회 공동 주최 국내학술회의 발표논문, 1997. 10. 20
- ⑤ 황병덕, 「독일의 정치교육 연구-한반도 통일대비 정치교육에의 시사점 분석-」, 연구보고서 95-12, 민족통일연구원, 1995. 12
- ⑥ 한상우, "한반도 통일에 대비한 통독 사회의 문제점에 관한 연구-사회적 정신적 및 윤리적 갈등을 중심으로-", 통일원 '92연구논문, 1992

에도 불구하고 상호 이해의 폭이 넓어지기는커녕 오히려 '마음의 벽'이 높아 가는 기현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1993년도에 Frankfurter Allgemeine Zeitung이 실시한 설문조사결과(1993. 5. 19자 보도)를 보면, 서독지역주민의 22%, 동독지역주민의 11%만이 상대방을 서로 유대관계를 가지는 동족으로 인정하고 있는 데 반하여, 각각 71%와 85%는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가진 별개의 독일인으로 보고 있으며, 통일 후 5주년을 맞아 실시한 슈피겔지(1995. 9.25 보도)의 여론조사결과에 의하면 동독지역 주민의 72%가 2등 국민 대접을 받고있다고 생각하고, 67%가 마음의 벽이 더욱 높아져 가고 있는 것으로 느끼고 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양 독 주민간에 개재하는 심리적 간격이 생각하는 것보다 심각한 것임을 입증해 주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양 지역 주민간에 이같이 상호 불신의 벽이 쌓이는 이유는 무엇인가? 지난 45년간의 이질적 체제하에 생활해 온 결과 서로 다른 생활양식에 익숙해지고 이로 말미암아 양 지역에 상이한 人性이 형성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이 학자들의 공통된 견해이다.

보편적으로 통일 당시 서독 주민들은 정치적으로는 자유주의,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와 복지체제하의 개인주의, 비공식적 자기중심의 행위양식, 패락주의 등의 현대적 생활양식에 익숙한 반면, 동독지역 주민들은 사회주의 체제하에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서독지역보다 전통적인 가치의식과 생활양식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동서독 주민간의 현저한 생활양식과 가치 준거면의 차이가 상대방에 대한 이해를 부족하게 하고, 상대방에 대한 이해의 부족은 상호간에 불신과 오해를 낳게 한 것으로 분석된다.⁴⁾

셋째, 통일 이후 나타난 정체성의 위기는 독일인의 내적 통합을 저해하고 있는 큰 문제점의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이 점에 관련하여 주목해야 할 점은 동독 주민뿐만 아니라 서독지역 주민까지도 통일 후 정체성의 위기를 겪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을 빚게된 원인은 통일이란 대 변혁을 맞아 과거 사회에서 정체성을 부여하였던 기본 바탕이 크게 흔들리게 된 때문이라 풀이된다. 이 중에서도 특히 서독의 주민이 오늘에 와 당면케 된 민족적 정체성의 위기는 서독의 분단 질서 관리과정에서 강조된 탈 민족주의적 시민 정치교육의 결과라는 견해도 제기 되고 있다.

독일의 경우 그들이 가진 독특한 역사적 경험으로 말미암아 통일 이전 단계에서 민족주의적 가치의식을 가르치거나 강조할 수 없었던 탓으로 통

4) 김학성, 앞의 논문 8쪽

일이 실현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통합된 민족의식을 바탕으로 하는 공동체적 응집력의 필요성에 대하여 국민적 공감대를 찾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그 골자이다.

이밖에 통일 후 특히 동독지역 주민들이 심각한 정체성의 위기에 당면케 된 원인이 무엇인가를 분석한 또 다른 측면의 연구⁵⁾에서는 근본적인 원인을 다음 몇 가지 관점에서 찾고 있다.

1) 과거 동독 사회에서 정치교육을 통해 길들여진 집단주의적이고 수동적인 행동양식이 통일 이후 가능한 한 하루빨리 시장경제의 기본원리와 성과주의에 입각한 개인주의로 대체되어야 하나 이와 같은 전환은 단시일 내에 이루어질 성질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재사회화가 이루어지는 과도기간 동안에 정체성을 잃게 될 수 있는 위협에 빠지게 된다.

2) 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과거 동독에서는 직장이 보장되었던 반면, 통일 후에는 노동시장에서 경쟁관계를 통하여 생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사실 자체가 동독 주민들에게 커다란 심리적 부담을 안겨 주고 있다.

더욱이 통일 후 체제 전환과정에서 실업문제는 동독 주민의 물질적 생활 기반과 자아 실현의 토대를 박탈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이들에게 과거의 노동이 무가치한 곳에 투입되었다는 자기비하감을 느끼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3) 동독지역 주민들은 동독지역에 대한 서독지역의 제반 지원을 단순히 시혜적인 것으로 받아들인 나머지 스스로를 2등 국민으로 여기게 된다. 더욱이 서독지역 주민들이 동독지역 주민들에게 자기 체제에 빨리 적응하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는 사실에 더 큰 열등감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다.

4) 동독지역 주민들에게는 구체제하 지난 40여년의 역사가 아직도 생생하게 살아 있는 역사로 남아 있는 데, 이러한 과거에 대한 부정과 단죄는 이들로 하여금 공범자로서의 감정을 가지게 하고, 통일 사회에서 동독 정권하의 과거청산문제가 제기된 때마다 내심에 적지 않은 고통을 느끼지 않을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넷째, 통일 독일에서 내적 통합을 지해하는 사회 문화적 측면의 근본적 요인의 하나로 지적되고 있는 것은 분단시기에 형성되었던 상대방에 대한 편견과 삶의 양식의 근본적인 차이, 통일 이후 정치·경제적 통합과정에서 노정된 사회·경제적 갈등과 심리적 불안 등이다.

통일 이후 동서독인들 간에 야기된 가장 직접적인 갈등의 표현은 경제적 것에서 주로 찾아진다. 서독인들은 동독인들을 동정하고는 있지만 그들

5) 민족통일연구원, 「독일의 정치교육 연구」-한반도 통일대비 정치교육에의 시사점 분석-, 연구보고서 95-12, 1995. 12, 민족통일연구원, 34~37쪽

이 자기들처럼 그것도 당장 '충분히 가질 수는 없는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 반면, 대부분의 동독인들은 서독인들이 인색하고 냉정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통일 후 상당한 세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동서독 주민들 대부분이 이같이 상대방에 대한 편견을 버리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아직까지도 과반수가 넘는 동독지역 사람들이 상대방을 자기와 같은 독일인으로 인식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94. 7. Fankfurter Allemeine Zeitung의 조사에 의하면 동독 주민 61%가 "우리는 하나의 독일인인가"라는 물음에 부정적 반응)은 통일 이전 시기에 상이한 사상과 체제 아래 서로 달리 형성되어진 가치관과 의식구조에 기인하는 것이라 해석되는 것이다.

또 이러한 결과는 인간에게 일단 형성된 가치의식을 변개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우며 시간을 요하는 과제인가를 우리에게 강력하게 시사해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다섯째, 과반수가 넘는 서독지역 주민들이 아직도 가지고 있는 사회적 불만은 일반적으로 경제적인 문제에 기인하는 것이다. 서독지역 주민에게는 통일은 이에 따른 고통과 희생에 대한 사전 예고나 마음의 준비 없이 막대한 통일비용의 분담이란 부담을 안겨준 것이었다. 즉, 이들은 통일 비용과 관련하여 통일 이전 시기에 누리왔던 각종 사회보장적 혜택의 감소라는 직접적인 불이익뿐만 아니라 통일세를 오랫동안 부담해야 한다는 사실을 마음으로 흔쾌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반면에 동독 주민들은 통일이 가져다 줄 희생이나 많은 사회 경제적 문제들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통일을 주도한 서독 정부의 약속과 통일 독일의 밝은 장래만을 과신하였다. 따라서 통일의 현실적 결과에 대해 대부분의 구 동독 주민들은 결국 실망과 환멸을 안게 되었으며 심리적으로 분개하게 되었던 것이다.

여섯째, 독일 통일 후 일반 주민들은 아직도 경제·문화적 위기감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다.⁶⁾

통일 후 경제와 문화적 위기감에서 기인하는 동서독 주민들의 심리적 격차는 8년이나 지난 오늘에도 극복되어 있지 못하다는 점은 여러 곳에서 발견된다. 예컨대 많은 동독 출신 주민들은 자신들의 자결권이 외부적 상황에 종속되어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또 자기들은 새로운 체제에 대해 적용할 수 있는 적응력과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외부적 영향력에 종속되거나, 외부의 판단에 의해 규정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데에 불만과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6) 신 윤, 앞의 책 통일문화 시리즈 96-2, 149 쪽

피해의식은 통일 후에 당면케 된 정치 경제체제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는 데, 이 같은 불신은 시간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각종 여론조사에서 나타나고 있다.

특히 동독주민중 약 반수에 달하는 사람들(91년 8월 조사에서 32%이던 것이 93년 2월 조사에서 50%로 부정적 반응 증대)이 독일의 현 체제(특히 사회 보장체제)를 고수할 만한 값어치가 없다고 여기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학자들은 지적한다.⁷⁾

이밖에 독일이 통일을 이룩한 이후에 당면케 된 사회적 혼란과 동요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은 독일식 '흡수 통일' 방식이 가져다준 결과라는 것이다.

반세기에 가까운 세월동안 동서독에서 각기 영위되어온 이질적인 삶의 양식을 감안할 때 급속한 체제 흡수적 통일은 동서독 주민들에게 통일에 대한 마음의 각오를 갖출 여유를 주지 않고 통일이란 대 변혁을 강요한 것이었다.

이밖에도 통일 후 동독 지역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심리적 현상으로서 주민들의 노이로제적 증상을 들 수 있다. 이들이 느끼는 충격과 심리적 불안은 생활 전반에 나타난다.

대표적인 예로서 실업, 사회보장, 시장경제체제에 요구되는 경쟁능력 및 직업전환교육, 가치관의 급격한 변화 및 방향성 상실, 집중하는 범퇴율, 사회적 적대감의 증대, 과거에 알려지지 않았던 엄청난 환경파괴, 공산당 내지 비밀경찰에 대한 믿었던 지도층 인사의 협력의혹, 보이지 않은 강요 등이 동독지역 주민들에게 불안을 유발하는 요인으로 열거되고 있다.⁸⁾

이상과 같은 동독 주민들이 느끼는 심리적 불안의 원인은 상당히 복합적이나 근본적으로는 급작스러운 생활환경과 사회체제의 변화로 말미암아 과거의 극복도 새로운 체제에의 적응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 결과의 산물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통일된 독일에서 내적 통합문제가 심각한 문제로 제기될 수 밖에 없게된 근본적인 배경은 분단시기에 형성되었던 상호 편견, 이질적 체제 속에서 정착된 삶의 양식의 차이, 민족공동체적 정체성의 부재, 통일 이후 통합과정에서 오히려 심화된 사회 경제적 및 사회 심리적 격차와 정서적 불안 때문인 것으로 이해된다

(2) 통일 독일의 선례에서 얻어지는 시사점

독일의 경우와 한반도는 분단상황의 측면뿐만 아니라 역사적 사회적 국

7) 신 윤, 앞의 책 152쪽

8) 김학성, "독일 사례를 통해 본 이점성 극복 방안" 민족통일연구원 주최 제 14회 국내학술회의 발표논문 (94. 11. 29, 타워호텔), 6쪽

제적 맥락에서 상당한 상이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독일 통일의 사례를 한반도의 통일문제 여과 없이 적용시키는 데에는 적지 않은 문제가 있다는 것은 많은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해 오는 바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독일이 통일 이후에 실제 겪어 왔고 현재도 직면하고 있는 내적 통합문제에 관한 많은 경험과 여기에서 직·간접으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최소한 사회통합의 문제점과 그 극복방안을 도출해 보려는 우리에게 훌륭한 교사로서의 역할을 제공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적어도 우리에게 추론의 근거를 제공할 수 있는 실증적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대단히 유용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까지 국내에서 이루어진 독일통일 사례에 관한 국내 전문가들의 대표적 연구논문⁹⁾에서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남북한 통합문제에 대한 시사점들을 찾아보면 대략 다음 몇 가지로 요약된다.

통일된 독일 사회에서 제기되고 있는 사회 문화적 갈등문제들이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일차적인 교훈은 남북한 통일이 단순한 정치·경제적 체제 통합만으로 완료되는 것이 아니며, 민족의 내적 통합문제는 열정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역시 아니라는 점이다.

둘째로 통일 후에도 남북한 지역 주민들간에 잔존하는 상호 불신과 갈등이 국민적 통합을 근원적으로 가로막는 심리적 기제의 하나로 작용할 것이라는 점이다.

분단 이래 20년이 넘는 동안 비교적 다각적인 교류와 접촉이 활발히 지속되어 왔던 독일에서도 통일과 더불어 양 지역 주민간의 불신과 갈등이 빚어내는 적지 않은 문제가 노정되고 있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그보다 더욱 단절되어온 남북한의 경우는 그 정도가 더욱 심각한 것이 될 것이라는 추론이 가능하다.

셋째, 통일 이후 야기될 사회적 통합문제들은 서로 연관되고 복합되어 있다는 점이다. 예컨대, 통일 후 오히려 심화된 독일의 동·서 지역 주민간의 심리적 간격과 이질감은 동·서 양 지역간의 경제적 격차와 연관되어 발생하는 것이고, 사회·경제적 문제들은 문화적 이질성이나 격차를 벗어나지 못한 결과로 오히려 촉발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에 대응한 사회통합의 촉진책 역시 종합적이고 복합적인 차원에서 강구되어야 한다 것이다.

넷째, 체제 통합 이후의 통일 국가 건설과정에서는 정치·경제적 문제보다는 사회 문화적 차원의 문제 해결, 특히 사회통합의 달성이 가장 어렵고 시간을 요하는 과제로 등장한 것이라는 점이다.

독일의 경우, 제도적 측면에서의 정치·경제적 통합은 정치적 통일 후 8

9) 여기서 참고한 논문들: 강태영, "정책연구 128호, 김학성, "사회통합: 독일 사회통합의 문제점해결방안과 남북한 사회통합에의 적용가능성", 조한래 외 공저, 「남북한통합론」, (대왕사:1998)

년이 지난 오늘의 시점에서 볼 때 그간의 우여곡절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성공적으로 성취되었다는 것이 내외의 일반적인 평가이다. 그러나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독일인으로서 내적 통합의 문제 즉, 사회통합의 성과에 대해서는 아직도 부정적 견해가 지배적인 것이 사실이다.

다섯째, 통일 후 사회에서 심각한 공동체적 정체성의 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독일이 겪고 있는 정체성 위기를 단순히 독일의 특이한 역사적 유산에 기인하는 특별한 현상으로만 치부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이다.

남한이 주도하는 통일이 이루어지는 경우 동독지역 주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북한 주민들이 겪게될 정체성의 혼란은 충분히 예측하고 남음이 있다.

뿐만 아니라 오늘에 와 사회적 분화의 가속화와 개인주의적 가치관의 확산으로 고유한 민족공동체적 구심력이 현저히 약화되어 있는 남한 사회의 경우에도 역시 통일로 인한 정체성의 혼란을 피하기 힘들 것이라는 예측이다.

결론적으로 지금 통일 독일이 겪고 있는 내적 통합의 위기를 타산지석으로 하여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생생한 교훈의 하나는 제도의 이식은 그 제도 뒤에 숨은 '인간'에 대한 고려 없이는 성공할 수 없다는 점이다.

2. 북한 이탈 주민의 남한사회 내 적응과정에 나타난 갈등 양상

다음으로 북한 이탈 주민들의 남한 사회 적응과정을 관찰하는 일은 우선 통일 후 북한 주민이 사회적응과정에 발생할 여러 가지 문제점을 사전에 예측하고 이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귀중한 선행학습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물론 북한 주민이 우리 사회 내에서 겪게될 사회적 상황과 여건은 통일 국가에서 북한 주민이 겪게될 그것과는 크게 다른 것이 될 것이므로 이들의 적응과정을 관찰한 연구결과를 통일 후 상황에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없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조사연구 결과를 통하여 통일 후 사회통합대책의 수립에 대체적인 시사점과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데에서 큰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여기서는 90년대 이후 북한 이탈 주민을 대상으로 그들의 우리 사회 내 적응과정을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관찰 연구해 온 국내 전문가와 학자들의 최근 연구결과들을 토대로 통일 후 사회통합에 제기된 제반 문제점들을 문헌 분석적인 방법으로 추단해 보고, 이를 통해 통일 이후 북한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재교육의 방향을 탐색해 나가는 데 유용한 시사점을 도출해 보려한다.

무릇 사람은 지금까지 살아온 사회를 이탈하여 다른 사회에 유입되는 경우 새로운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요령과 지혜를 배우고, 바람직한 태도를 습득하는 재사회화과정을 거쳐 새로운 사회에 적응해 나가기 마련이다.

분단 이후 북한을 이탈하여 남한에 유입한 북한 주민¹⁰⁾ 역시 변화된 기본적 이념과 가치 규범을 수용하면서 새로운 일상생활에 적응해 나가는 가운데 심리적으로 자아정체성을 확립하고 안정을 되찾아가게 된다.

이러한 사회적응과정은 대체로 「체제적응」, 「생활적응」, 「심리적 적응」이란 세가지 차원으로 나누어 관찰해 볼 수 있다.¹¹⁾

이중 「체제적응」은 새로운 남한 사회에 편입된 북한 주민이 남한의 정치경제 사회제도의 기본 규범과 원칙 등에 대해서 동질감을 느끼고 이를 내면화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그 과정은 이론적으로는 이전의 북한 체제에 대한 동질감이 소멸되는 탈 사회화과정과 새로운 사회에 동질감이 형성되어지는 재 사회화과정으로 구분된다.

지금까지 북한이탈주민들의 우리 사회 적응과정을 관찰한 바 있는 많은 학자들의 견해에 의하면, 개별적인 수준에서는 예외가 없지 않으나 대부분의 경우 남한 체제에 비교적 잘 적응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정치·경제체제에 대한 인지도는 비교적 높은 편이고, 비록 남한 사회의 빈부격차를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경향은 있으나 대부분이 개인적인 노력 여하에 따라 앞으로 성공이 좌우된다고 보고 있으며, 이념적인 면에서의 적응에도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음으로 「생활적응」은 직장생활, 여가생활, 종교생활 등 일상생활에서 남한 사회에 보편적인 행위규범과 절차에 대해서 습득하고, 이를 내면화하는 과정을 말하는 것으로 이에 대해서는 개별적인 경우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적지 않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지금까지의 탈북자들의 경우, 남한의 정치나 경제와 같은 체제 관련 분야보다 실제 생활분야에 대한 기초 지식이 상대적으로 낮는데, 특히 언어생활과 가정생활에서 더욱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조사 대상자들의 대부분이 영어 등 외국어 활용이 상대적으로 높은 남한의 일상적인 언어습관에 적응하기 어려웠으며, 한자 역시 해득력 부족으로 신문과 같은 중요 정보전달 매체에 접근이 어렵다고 실토하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북한에서의 직장생활에 비하여 남한의 직장생활에서 더 많은 애로를 느끼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10) 통일부의 공식 집계에 의하면 1949년 이후 1998년 9월 현재까지 북한 주민 총 923명이 남한에 들어와 이중 724명이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있음

11) 이금순, 송정호, "북한 이탈 주민의 사회적응 교육방안" '97 통일연구논총, 제6권 1 호, 74쪽

북한 이탈자들이 이처럼 생활적응에서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장기간의 분단으로 인한 남북한 사회의 이질화현상에서 그 근원을 찾아볼 수 있는 것이나, 그밖에도 남북한 학교에서의 배움의 차이, 사회생활에 필요한 기초적인 지식의 부족, 생활경험상의 차이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마지막으로 「심리적 적응」은 새로운 사회 속에 개개인이 느끼게 되는 내면적 안정감과 심리적 만족감의 형성과정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것은 일종의 자기 정체성과 자존심의 확립과정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북한 사회에서는 집단의 일원으로서의 자아가 우선시 되고 집단적 가치를 최우선하는 가치로 신봉해 왔기 때문에 다원주의 사회인 남한에서 개인적 가치관과 삶의 목표를 스스로 정립하고 이를 무엇보다 우선하는 가치로 추구해 나간다는 사실에 선뜻 동의가 쉽지 않게 된다.

그런 이유로 남한 사회에서의 심리적 적응문제는 체제적응이나 생활적응에 비해 더욱 어려운 내면적 문제로 등장하게 된다.

실제 탈북자를 대상으로 한 그간의 조사에서 북한이탈주민들이 자아 정체성 및 신분 정체성 면에서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남북한간 문화적 차이, 생활정보 획득의 어려움, 남한 사람들과 접촉의 제한, 직장생활에서의 소외감, 본인의 열등감 등으로 인해 거의 폐쇄적인 생활을 영위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일상적으로 대인관계에서 외로움을 많이 느끼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능력과 역할, 장래문제 등에 관해 자신감과 주체성을 갖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다는 사실이 여러 경우에서 입증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자기들에 대한 남한 주민들의 비판적 시각 때문에 심리적으로 소외감을 느끼고 있다는 사람이 많으며, 일부이긴 하나 남한 국민은 “귀순자들을 2등 국민이나 열등 국민으로 취급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충격적 반응조차 없지 않은 실정이다.¹²⁾

이밖에도 90년대 이후 수행되어온 관계 전문가들의 북한 주민의 사회적응과정에 대한 실험적 관찰과 이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결과에서 북한이탈 주민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주요 애로사항과 문제가 되는 의식성향은 대략 다음과 같은 것들로 요약된다.¹³⁾

① 일상생활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다. 이로 인해 귀순자들은 일상생활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향이 있다.

12) 민족통일연구원 연구보고서 96-18, '북한 이탈 주민의 사회적응에 관한 연구: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86쪽

13) 민성길, 전우태, "사회의 통일-정신의학적 접근," 송 자, 이영선(편), 「북한 사회로 가는 길」, (서울 : 도서출판 오류, 1996), 100-103쪽

② 남한의 거대한 정보량에 압도되어 자신의 지적 부족함에 대해 심한 열등감을 가진다.

③ 당에서 직장을 배치해 주는 북한과 달리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능력에 따라 직업을 선택해야 한다는 사실에 당혹해 하며, 이로 인해 자신의 사회적 지위가 격하되는 것에 대해 예민하게 반응하고 불만스러워 한다.

④ 북한 출신이라고 차별 대우 받을 가능성에 대해 늘 매우 민감한 상태에 있다.

⑤ 입국 초기단계에서 자신들은 남한 사람들의 말을 비교적 잘 알아듣지만 남한사람들은 자신의 말을 잘 알아듣지 못하는 것에 위축감을 가진다.

⑥ 돈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돈을 버는 방법을 알고 싶어하지만 개인 중심적이고 자본주의적인 이기주의를 극도로 매도해 왔던 북한에서 받은 교육의 잔재의식 때문에 선뜻 돈에 집착하기도 어려워하는 돈에 대한 이중적 가치관을 가진다.

⑦ 집단주의 의식이 강하여 자신의 문제를 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 자신이 속한 집단의 문제로 인식하는 성향이 짙고,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도 정부나 소속 집단에 지나치게 의지하려는 태도를 보인다.

⑧ 적이 아니면 동지요, 백이 아니면 흑이라는 이분법적 사고방식 때문에 사물에 대한 판단과 태도가 명확하며, 때로는 그러한 특징이 사고의 경직성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⑨ 북한에서는 가난하지만 상부상조하며 매우 강한 유대의식을 가지고 대인 관계를 맺어 왔던 것에 비해 남한은 부유하긴 하나 인정이 없고 이기주의가 심하다고 생각하며, 비정한 동료나 이웃과의 관계에 대해 비판적이다.

⑩ 남한 젊은이들의 자유분방한 행태들이 비도덕적으로 보여 이에 대해 매우 비판적이다

3. 통일 국가 건설과정과 이후에 예상되는 사회통합의 문제

(1) 남북한의 근본적인 차이에서 오는 사회 문화적 갈등

통일 후 남북의 주민이 심각한 사회 심리적인 불안과 갈등, 혼란에 빠지게 되는 근본적인 원인은 통일로 인한 체제통합이 생활환경을 비롯한 사회 문화체계에 미칠 영향이 대단히 충격적이고 혁신적인 것이라는 점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다.

만일 남북한의 사회문화체계가 동질적인 것이어서 통일 이후에도 큰 변화가 없는 것이라면, 체제통합으로 인한 사회·문화적 충격은 그다지 심각한 것이 되지 못할 것이고 따라서 이로 인한 갈등과 혼란은 별다른 문제가

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분단 반세기가 넘는 동안 서로 다른 체제와 이념 아래 상이한 발전 과정을 거쳐온 남북한의 사회는 오늘에 와서는 각분야에 걸친 제도적 차원뿐만 아니라 생활양식과 가치관, 의식구조라는 내면적 차원에서도 이질화가 심화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남북한 사회 각 분야에 개재하는 기본적인 이질성과 차이점은 통일 후 사회통합을 가로막는 갈등의 근원적 요인으로 작용한 것이 너무나 분명한 것이기 때문에 통일 후의 사회통합대책을 수립함에 있어서는 현존하는 상호간의 이질성과 근원적 차이점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것이 통일 이후에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를 전망해 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통일 후 사회 문화적 갈등과 혼란의 원인으로 작용한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큰 남북한 사회의 근본적인 차이점을 고찰해 보면 대략 다음과 같은 것들로 요약될 수 있을 것이다.

첫째로 남북한은 기본적인 체제와 이념을 달리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 구성의 원리와 작동원리에서 차이가 클 뿐만 아니라 시민사회의 성격과 기본 질서 면에서 매우 대조적이라는 점이다.

분단 이후 남한에는 다원적 민주주의를 정치이념으로 하는 민주주의 정치제도가 유입되고 북한에는 소비에트 사회주의를 정치이념으로 하는 공산당 일당 독재체제가 이식 정착된 결과 남북한은 각기 이질적이고 대립적인 체제로 발전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남북한 체제의 상이성은 사회구성 원리나 작동원리 면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는데 국가와 시민사회의 성격이나 이 양자 관계에 대한 규정이 판이하게 다르다는 점이 대표적인 경우이다.

남한은 자본주의를 도입하고 민주주의를 선택함으로써 「국가 대 시민사회」라는 역학관계의 존재를 가능하게 만들고 있는 반면에 북한의 경우는 국가와 시민사회는 종속적이며, 이 양자 관계에 있어서 근대적인 의미의 시민사회가 아닌 「신민사회」¹⁴⁾만이 존재할 뿐이다.

둘째로 남북한은 분단 이후 서로 다른 근대화 과정을 걸어온 결과 남북한의 사회적 성격과 문화구조 면에서 커다란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 자유주의적 근대화를 거친 남한과 사회주의적 산업화계획에 따라 사회의 전반적 변화과정이 국가동원체제에 의해 의도적으로 통제되어 온 북한 사회는

14) 서재진은 그의 저서 「또 하나의 북한사회」(49~50쪽)에서 신민사회를 근대적 의미의 시민사회가 발달하지 않은 사회라 정의하면서 이 신민사회는 자본주의가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유재산제, 시장메커니즘, 다원주의적 제도가 존재하지 않으며, 인민대중을 신민으로 구축하기 위하여 지배 이데올로기가 고도로 발달해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기술하고 있다.

서로 다른 양상으로 발전되어 왔다.

한마디로 민주주의 가치를 중시하며 문화적 다원주의를 지향하고 있는 남한 사회와 사회주의 문화를 지향하면서 집단주의적 가치를 강조하는 북한 사회는 근본적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런 사회성격의 차이 외에 남북한간에는 문화적 특성의 차이도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다.

북한의 문화는 정치적 종속성이 높아 문화의 자율성과 다양성이 매우 위축되고 획일성, 집체성, 인민성과 같은 북한 특유의 문화적 기준이 문화의 특성을 재단하고 있다. 반면에 남한 사회는 개방성과 문화적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음으로써 새로운 문화에 높은 적응력과 흡수력을 지니고 있다.¹⁵⁾ 셋째로 사상한 바와 같이 남한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정치·경제체제와 사회 문화체제 속에서 공산정권에 의해 '계획적'으로 형성된 북한 주민들의 가치 체계와 의식구조는 남한 주민의 그것과는 크게 다른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이고 있다.

① 북한 주민은 일반적으로 주체사상에 의한 사상교양의 결과로 전체주의, 집단주의, 반 이기주의, 반 개인주의적 성향이 강하게 나타난다. 북한에서는 "하나를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집단주의적 가치가 개인적 이익에 우선하는 기본적 가치로 강조되며, 집단에 대한 소속감과 일체감 및 그로부터 나오는 집단(수령)에 대한 충성심과 헌신이 끊임없이 요구되어 왔다. 이러한 집단 중심의 가치관은 남한 사회의 개인주의적 가치관과 충돌될 소지가 대단히 많은 것이다.

② 북한 주민은 또한 타율적이고 수동적인 성향이 강한 행동양식을 지니고 있다. 북한 사회는 개인적 인센티브에 의하여 행위를 선택할 수 있는 다원주의 개방 사회가 아니라 중앙(노동당)의 계획과 강요, 동원에 의해 획일적으로 행동하는 통제사회이기 때문에 타율적이고 수동적인 복종형의 인간으로 양육되기 마련이다.

북한 주민은 위로부터 주어지는 과업에 습관 되어 온 탓으로 매일의 과업에 대한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지시나 명령이 없으면 오히려 심리적 불안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 귀순자들의 증언을 통해 확인된 바이다.

이러한 성향을 가진 북한 주민이 다원주의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자율적인 사고와 행동으로 전환하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③ 북한 주민은 자기 중심적이고 배타적이며, 적대감이 강하고 폐쇄적인 성향이 상대적으로 강한 품성을 가지게 된다. 어릴 때부터 정해진 규율과 절차에 무조건 따르도록 가르쳐 지고, 조직적인 사회화에 길들여져 왔기

15) 김영수, "북한 이념 주민 남한 사회 적응실태 연구", '97 통일대비 기초, 제 14장, 400-491쪽, 통일 교육원.

때문에 행위의 폭이 제한적이고 외적 자극에 대한 적응력이 취약하며 자기 중심적 성향이 강하다.

이러한 행위 특성을 가진 자가 개방된 민주 사회에서 타인과 어우러져 살아가는 데는 심리적으로 많은 갈등을 느끼게 될 것이다.

④ 북한 주민은 전통적인 가부장적 권위주의 성격이 강하다는 특성을 띤다. 북한은 수령이란 유일적 권위만이 지배하는 권위주의 체제이다. 북한 주민은 당과 수령이란 절대적 권위에 순종하도록 강요되어온 결과 상위 자에게는 맹종하고 하위 자에게는 군림하는 것을 당연시하는 권위주의적 성격이 형성되어 있다.

이러한 권위주의적 성격은 공동생활에서 민주적 의사 결정과정에서의 참여를 저해함으로써 타인과의 관계에서 갈등을 빚게 될 가능성이 높다.

⑤ 개개인의 자유보다 평등을 중시하는 성향을 지닌다. 북한 주민은 학교 교육이나 사회학습과정을 통하여 개인의 자유로운 활동이나 구성원간의 경쟁보다는 상호 평등과 협동을 중시하도록 배워 왔다.

이것은 북한 체제의 특징을 뒷받침해 주는 일반적인 집단주의 성향으로서 북한 주민에게 개인적 인권이나 개성 등과 같은 개인주의적 가치보다 평등적 가치나 조직적 규율을 행위의 척도로 삼도록 하는 심리적 기제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⑥ 북한 주민에게는 일반적으로 공적 세계와 비공식적 세계가 서로 다른 이중적 인성이 형성되어져 있다.

북한의 전체주의적 사회구조 하에서 북한 주민의 공적 세계에서의 인성은 가신주의, 집단주의 등으로 대표되는 臣民型 人性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신민형 인성이 북한 주민에게 완전히 내면화되어 있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¹⁶⁾

공식적 지배이데올로기의 이면의 사적 영역에서는 개인주의적, 자유주의적 선호가 잠재하고 있어 일상생활 면에서 적지 않게 표출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인성 면의 이중성은 상황의 변화에 직면하여 일반적인 태도성향의 향방을 짐치기 어렵게 하는 것의 하나이다

⑦ 북한 주민은 인간관계에서 정서적 유대를 중시하며 복잡한 것보다 단순한 것을 좋아하는 순박한 성격을 아직도 가지고 있다. 북한 사회는 오랜 동안 외부와의 교류가 허용되지 않은 폐쇄상태를 유지해 왔기 때문에 비공식적 사회영역에서는 아직까지도 산업화 이전의 전통사회의 특성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면이 적지 않다.

16) 서재진, 『또 하나의 북한 사회-사회구조와 사회의식의 이중성연구』, 나남출판, 1995, 234-5쪽

이 같은 전근대적 사회특성으로 인하여 주민들은 상호간에 짙은 소 공동체적 유대감을 가지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대인관계에서 이해를 따지기보다 인정과 의리를 중히 여기고, 당면하는 사회문제에 대해서도 쉽고 단순하게 생각하는 성향을 가지게 된다.

이러한 북한 주민의 심성과 정서는 상대적으로 보다 이기적이고 영악하며 개인 중심적인 가치관을 가진 남한 사람들과의 만남에서 심리적 괴리감을 가지게 되는 원인이 될 것이다.

(2) 통일 후 사회환경의 급격한 변화와 이에 따른 사회적 갈등과 혼란

일반적으로 사회통합의 문제를 야기하는 원인을 제공하는 것은 사회환경과 여건의 급격한 변화이다. 통일로 인한 급격한 사회 및 생활환경의 변화는 사회적 개인적 차원에서 긴장과 갈등을 야기하는 근본적인 원인으로 작용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통일 이후의 사회가 어떻게 변화되어 갈 것인가를 정확히 예측하는 일은 이것이 결과할 사회적 갈등과 혼란의 양상을 예측할 수 있는 첫걸음이 된다는 점에서 남북한 사회통합문제의 연구에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가) 통일 후 사회환경의 변화상

① 정치적 측면의 변화 : 본 논문의 서두에서 전제하고 있는 것처럼 남북이 자유 민주주의 체제하에 비교적 급진적인 통일이 성취된다고 가정할 경우, 우선 정치적 측면에서 북한 지역에는 전면적인 제도의 개혁과 함께 새로운 민주적 정치과정의 도입이란 충격적 변화에 당면케 될 것이다.

노동당이나 소속 단체가 사전에 인선하여 추천하는 단일 후보에게 찬반의 의사만 표시하는 방식의 선거만을 경험해 왔던 북한지역 주민들에게는 자유 경선방식에 의한 공직 선출방식과 복수 입후보자들의 자유로운 사전 선거운동의 전개와 같은 민주적 선거제도는 전혀 낯선 것의 하나이다.

뿐만 아니라 위로부터의 일방적인 지시나 명령에 따라 행동하는 데 익숙해 왔던 북한 주민에게는 집단의 목표와 의사를 다수결에 의하여 결정하는 등의 민주적 의사결정과정은 몹시 이해하기 어렵거나 쓸데없이 복잡하기만한 절차로만 인식될 것이다.

② 경제적 측면의 변화 : 경제 분야에서의 변화와 개혁은 다른 어느 분야보다도 큰 혼란과 갈등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는 것이다. 우선 생활필수품에 대한 배급체제에 대체하여 시장경제에 기초한 자본주의 경제체제가 도입됨에 따라 북한주민의 일상적인 경제생활방식에 근본적 변화가 초래될 것이다.

또한 남북간 또는 도시와 농촌간의 일시적이고 대규모적인 인구이동이 발생하고, 특히 북한지역에는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전환과 산업구조의 대규모 개편이 불가피하게 됨에 따라 생산활동의 일시적인 침체나 부진 등으로 인한 대규모 실업사태의 발생도 예상된다. 이로 인해 일부 계층이나 산업분야 종사자들은 기득권과 각종 복지혜택의 상실 등으로 말미암은 물질적 생활수준의 급격한 변화에 당면케 될 것이다.

우리가 독일 통일의 선례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북한의 대다수 주민들에게는 경제의 통합이 생계 유지의 기본 조건인 일자리를 잃게 할 가능성이 대단히 큰 것이다. 개인에게 기본 생계수단인 직장을 잃게 되는 변화가 가져다주는 심리적 충격은 무엇보다 심각한 것이 된다.

③ 사회 문화측면의 변화 : 북한 주민들에게 통일은 반세기가 넘는 세월 동안 서로 다르게 유지 되어온 사회화체제의 재 구조화와 조정을 필요로 하는 '문화적 충격'을 안겨주는 일대 사건으로 다가 올 것이다.

우선 통일된 사회에서는 서로 다른 가치관과 사고방식, 생활관습을 가진 남북한 주민이 하나로 어울려 살아가야 한다는 생활환경과 여건의 근본적인 변화가 초래된다. 그 중에서도 종전의 사회주의 사회와는 전혀 다른 민주 시민사회와 개방된 다원주의 문화체제 하에 살게된 북한 주민들에게는 통일 사회에서의 삶은 단순한 변화의 체험이 아닌 '제 2의 삶'을 의미하는 것이 된다.

뿐만 아니라 통일 후 사회에서 북한지역 주민들은 그 동안 전체 주민에 강요되어 왔던 강력한 정치교화체제가 일시에 와해됨에 따른 심리적 혼란에 빠지게 될 것이다.

강력한 사상통제의 수단으로 주민들에게 강요되어 왔던 정치학습과 조직생활이 일시에 철폐됨으로써 일상생활이 훨씬 자유로워질 것이나 종래 믿어 왔던 권위와 신념체제가 한꺼번에 무너지는 데 따른 가치혼란 상태에 빠지게 될 것이다.

절대적 충성의 대상으로 추앙되었던 김정일을 비롯한 당, 군, 정 의 지도자 등 종전까지 「모범 따라 배우기 운동」의 사표가 되어 왔던 교화대상이 갑자기 바뀌거나 격하되고 그들의 허상이 드러나 절대적 위상이 실추되는 것을 묵도하게 되어 심리적으로 방향감각을 잃게되고, 갑작스럽게 주어지는 정치·사회적 자유 속에 사회적 일탈 욕구가 일시에 분출하게 될 것이다.

특히, 폐쇄되었던 사회가 개방됨에 따라 남한의 다양한 신문 방송 및 전자 매체 등 대중언론매체들의 영향력이 한꺼번에 유입되고, 이와 함께 흘러들어 오는 각가지 정보와 상업주의적 대중문화의 홍수 속에서 이것을 어떻게 받아드릴지 몰라 당혹감에 빠질 것이 분명하다.

이밖에도 통일이 되면 비교적 비등했던 북한 지역 주민간의 사회 경제적 신분상의 격차가 심화되고 도착되며, 남북한 교육의 통합에 따른 정치사회화 체계와 교육제도, 생활환경 등에 격변이 야기된 것이다.

나) 통일 후 북한 주민이 당면할 사회적·심리적 갈등과 혼란

통일이 되면 서상한 바와 같이 사회생활 환경 면의 급변이 야기될 뿐만 아니라 남북간에 개재하는 근본적인 제도 및 이념상의 차이점과 문화적 이질성 등이 복합적인 요인으로 작용하여 남북한 주민 모두가 정도의 차이는 있겠으나 각가지 사회 심리적인 갈등과 혼란, 통일에 따른 여러 가지 후유증에 시달리게 될 것이 분명하다.

그 중에서도 북한 주민의 경우는 과거와는 전혀 낮은 사회 문화체계와 생활환경 속에서 새로운 삶을 영위하게 될 것이므로 그들이 느끼고 직면케 될 갈등과 혼란의 정도는 남한 주민의 그것에 비해 훨씬 심각할 것으로 추측된다.

앞서 고찰해 본 바, 통일 독일의 선례와 북한 이탈 주민의 남한 사회 내 적응과정을 관찰한 결과를 토대로 하여 우리가 통일을 맞이하는 경우에 당면케 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 사회 심리적 갈등과 혼란, 통일 후유증의 양태를 추단해 보면 대략 다음과 같은 것으로 요약된다.

먼저 정치적 차원에서 제기될 갈등양태는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날 것이다. 그 하나는 두 개의 상이한 체제하에서 서로 다른 삶을 영위해 온 이질적 주민 집단이 하나로 통합됨에 기인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남북으로 분리되어 정치 사회 문화분야 등 제 분야에 걸쳐 전혀 바탕을 달리하여 왔던 두 개의 지역 사회의 영역이 하나로 합쳐짐에서 오는 결과라 할 것이다.

우선 전자의 갈등은 비록 통일 이전 단계에서 남북한간에 동화과정이 진전되어 체제간의 상용성이 어느 정도 중대하였다 하더라도 두 체제의 근본적인 구조적 차이와 기능 수행상의 차이는 해소될 수는 없다는 데에서 유래하는 것이다.

통일 전 존재했던 체제상의 근본적인 차이에 기인하는 주민간의 생활양식의 차이나 사회 심리적인 간격은 통일 이후에도 쉽게 해소되지 않고 정치적 갈등의 요인으로 남아 있게 된다.

다음 후자의 경우에 해당하는 대표적 현상의 하나는 남북간 지역 주민간의 감정적 불화와 심리적 간격에 기인하는 것이 될 것이다. 남북한의 주민은 오랜 분단기간 동안 정치이념을 비롯하여 이질적인 사회 문화체제 하에 살아온 탓으로 사고방식과 가치관이 다르게 형성되어 있다.

따라서 같은 사물을 보고 느끼고 생각하는 바가 각기 다르다. 이러한 지역간의 사고유형의 차이와 가치인식 면에서의 괴리현상은 통일 이후 새로

은 질서 개편과정에서 남북한 지역 출신간에 집단적 대립감정을 표출케 하거나 지역 정서의 충돌이라는 정치적 갈등을 빚어내기 쉽다.

통일된 독일 사회에서 볼 수 있듯이 통일 후 북한 주민은 남한의 주민이 자기들을 차별하던가 경멸한다고 불만스러워 하고, 통일 이후의 사회 발전 상황이 그들의 기대에 어긋난다고 불평하기 쉽다.

이에 반하여 남한의 주민들은 통일 후 북한 경제의 재건이나 북한 주민의 생활 지원에 투입되는 막대한 비용이 전부 자신들의 복지를 희생한 대가라 하여 그 부담에 불만을 표시할 것이다.

이러한 남북한 지역 주민간의 이기적 입장의 상충은 자연 지역간의 열등감이나 차별의식, 배타의식으로 진화됨으로서 지역간 집단적 갈등을 초래하게 될 것이 거의 틀림없다. 특히, 이러한 남북 지역간의 갈등은 남북간의 현격한 경제적 복지수준의 차이를 고려할 때 통일 후 국민통합에 결정적인 장애요인으로 등장할 가능성이 높다.

더욱이나 일단 남북간의 지역갈등이 제기되면, 이것이 통일 이전 시기에 양 사회에서 잠재적 갈등요인으로 내제해 왔던 지역감정이 지역주의와 결합되어 더욱 심각한 갈등양태로 번져나갈 가능성도 없지 않다

남한에서 영호남간의 지역감정이 현실로 존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북한 사회에도 역사적으로 내려오던 평안도와 함경도의 지역감정을 비롯하여 평양과 지방간의 감정상의 앙금이 잠복된 상태로나마 엄연히 존재하여 왔으며, 이러한 지역간의 감정은 통일 후 새 사회상황 하에서 재연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일반적으로 지적되어 왔다.

이러한 남북간 또는 동서간의 지역감정은 통일 이후 자유선거문화의 도입으로 자극될 경우 더욱 증폭되거나 새로운 지역감정을 배태하여 국민통합에 큰 장애를 조성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우려이다.

다음으로 경제적 차원에서 예상되는 갈등은 주로 북한 경제구조의 자본주의 체제로의 전면적인 개편과정에서 제기되는 이해관계의 충돌 문제가 될 것이다. 통일 독일의 경험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북한 지역의 재산소유권 및 그 처리방식 등을 위요하고 체제의 전환과 법 제도의 통합과정에서 여러 가지 갈등이 발생할 소지가 많다.

우선 경제적 기득권층과 이에 도전하는 계층간의 갈등이 예상되며, 구 체제 하에서 상대적으로 혜택을 누리고 있던 계층이 기존의 혜택을 일시에 박탈당할 때 새로운 체제 불만 세력으로 쉽게 변모할 것이란 점은 능히 짐작할 수 있는 일이다.

특히, 통일 한국의 새로운 정치체제 아래서는 상대적으로 더 많은 사회적 가치를 향유할 수 있었던 북한의 이른바 '핵심계층'으로 분류되었던 대부분의 정치적 지배계층이 불이익을 감수하게 되거나 소외될 것인 바, 이들 구

시대 수혜계층들의 새 체제에 대한 저항이 하나의 계층간 갈등을 일으키는 심각한 요인으로 등장할 수도 있을 것이다.

끝으로 사회 문화적 차원에서 등장할 수 있는 문제는 문화적 충격에서 오는 심리적 불안과 부적응현상이다. 통일 전 서로 다른 사회 문화체제 하에서 형성된 이질적 가치관과 의식구조 때문에 남북한 두 지역의 주민들이 통일의 과도기적 상황과 그 이후 국가 건설 과정에서 겪게 될 문화적 충격과 심리적 반응은 각기 다른 것이 될 것이다.

남한의 자율적이고 개인주의적인 문화에 익숙해져 있는 사람은 북한의 획일화되고 이념성이 짙은 문화를 접함으로써 거부반응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 반면 폐쇄적 사회에서 외부문화에 접할 기회가 적었던 북한 사람들은 남한의 자본주의적 경쟁문화나 자극적이고 상업적인 소비문화를 새로이 접함으로써 일종의 문화적 충격과 동요를 겪게 될 것이 예상된다.¹⁷⁾

사회심리적 차원에서 고찰해 보면, 서로 다른 생활관습과 사고방식을 가진 남북한 주민들이 함께 어울려 살게 되면 개인 및 집단간에 상당한 정도의 간격이 나타날 것이 틀림없다.

생활의 각분야에서 간격의 존재를 실감케 하는 심리적인 이질감과 괴리감은 오랜 기간 천저하게 상이한 사회화 과정에 따라 고착된 생활문화(의식구조, 행동양식, 습관 등 생활양식과 가치체계)의 차이에서 일차적으로 유발되는 것이다.

또 남북한 두 사회가 하나로 통합되거나 교류 협력을 통해 빈번하게 마주치게 되면, 북한 주민의 경우는 특히 기존의 신념체계가 일시에 붕괴되는 충격을 맞게 된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가치체계의 혼란 또는 아노미 현상이 사회통합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또 다른 측면의 가능성은 남북한 주민간 문화적 심리적 불평등에서 오는 갈등이 심화될 수도 있다는 점이다. 통일과정을 우세한 경제력을 가진 남한측이 지배적 위치에서 주도할 경우, 새로운 사회 문화체제 내에서 북한 주민들이 지녀왔거나 향유해 왔던 지식, 능력, 문화적 가치 등은 평가 절하되고, 그들 특유의 신념체계와 생활기반이 한꺼번에 무너지게 됨으로써 새로운 사회에서 집합적 정체성은 물론 개인적인 정체성까지도 동요 받게 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 주민들의 자의식은 생소한 민주적 법체계와 제도 아래서 이른바 '기능적 문맹' 또는 '2등 시민'으로 전락할 수도 있는 것이다. 더욱이 일상적인 사회관계에서 남한 주민이 일방적인 우월 의식을 가지고 북한 주민을 대하는 경우, 북한지역 주민은 심리적 상처를 입게 될 뿐만 아

17) 유덕희, "통일문화의 개념 정립과 형성 방향", 민족통일연구원 주최(94.11.4) 제 14회 국내학술회의의 발표 논문, P.34

나라 문화통합노력에 역행하는 저항문화를 양산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통일 후 사회 문화적 차원에서 제기될 또 다른 갈등양태의 하나로서 세대간의 갈등을 예상할 수 있다. 통일 사회의 변화된 환경에 남한의 젊은 세대들은 상당한 융통성이나 적응력을 발휘하여 비교적 빨리 적응해 나갈 수 있을 것이나, 북한의 경우 민족의 공동생활을 경험하지 못하고 사회주의 교육만 받아온 젊은 세대들은 더 경직된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통일 후 동독지역 청소년층의 경우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남북한 공히 이들 젊은 세대들은 새로운 교육제도 하에서 '개혁된 재사회화 교육'을 체계적으로 받게 되면 상대적으로 쉽게 새로운 자본주의문화를 수용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에 50대 이상의 장년 이상의 세대들은 기존 체제에 이미 익숙해 있고 재사회화의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을 것이므로 기존의 이념체제와 문화성향을 고수하려는 경향을 보일 것이다.¹⁸⁾

이와 같은 변화된 환경과 새로운 문화에 대한 세대간의 인식과 입장의 차이는 결국 세대간의 갈등 요인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높다.

이밖에도 자유민주주의 이념과 자본주의 체제를 바탕으로 남북이 통일되면, 특히 북한 주민들에게 심리적 혼란과 갈등을 야기할 가능성이 짙은 생활정서상의 素因으로 학자들은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열거하고 있다.¹⁹⁾

① 90년대 이후 북한 이탈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가장 빈번히 지적되어 온 사항 중 하나는 북한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맹목적인 대남 적개심이다. "미 제국주의와 남조선괴뢰도당" 타도를 목표로 한 오랜 동안의 사상교육의 결과로 북한 주민의 의식 속에는 남한 주민에 대한 경계심과 적대감이 부지불식간에 내면화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기존 의식과 대 남한관은 통일 후 상당 기간 지속됨으로써 민족적 대 화합의 달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② 또 다른 갈등의 소인은 교육제도와 의료보장 부문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다. 북한 주민은 비록 허울뿐이긴 하지만 「11년제의무교육제도」와 무상치료제 하에서 살아 왔다.

이러한 생활경험을 가진 북한 주민이 통일 이후 엄청난 교육비와 의료비를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사실에 당혹감과 함께 어느 정도 저항감을 가지게 될 것은 분명하다.

③ 이뿐만 아니라, 처음 대하는 조세제도에 대한 북한 주민의 저항감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통일의 열광이 일단 가신 후가 되면 이른바 '세금 없는 나라'에서 살아온 북한 주민들의 시각에서 각종 세금과 공과금의 존재

18) 윤덕희, 위 논문 35쪽

19) 고영환(달북 전 외교관), 백천 통일시대 연구소 주최 세미나 (97. 12.11) 발표논문 "통일 이후 북한 주민들 속에서 무슨 문제가 있을 것인가?"

가 가장 큰 거부감과 적대감을 불러일으키는 요소의 하나가 될 것이다.

④ 통일 후 전개될 과거 청산문제와 걸부된 북한지역 주민들의 정서상의 갈등 역시 심리적인 통합을 저해하는 새 요인으로 등장할 수 있을 것이다.

동독인들이 통일 정부의 과거청산작업에 보인 반응에서 예증되는 것처럼 반세기 이상 지속되어 온 분단시대를 지배해 온 북한의 사회주의(‘우리 식 사회주의’)는 북한 주민들에게는 엄연히 살아 있는 역사이다.

마음속에 엄연히 살아 있는 역사와의 단절과 부정을 의미하는 과거청산 문제는 그 시절 북한 지역에서 살아 왔던 주민들에게는 심리적 고통을 안겨주게 되는 것이다.

⑤ 일상 생활에서 직접 체험하게 되는 문화적 이질감과 언어관습의 차이에서 오는 의사소통의 장애 또한 심리적인 괴리감을 절감케 하는 요소로서 작용할 것이다.

획일적 사회주의 문화와 다양한 자본주의 문화의 조우로 인한 문화감정의 불일치와 언어상의 차이는 남북한 주민 사이에 심리적 거리감과 이질감을 높여 주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예상은 그 동안 관찰해 온 북한 이탈 주민의 남한 사회 적응양상을 통해 충분히 시사되는 바이다.²⁰⁾

⑥ 통일과정을 통해 쌍방간의 접촉이 활성화되면, 상대방에 대한 기존의 고정관념 및 편견을 해소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반대로 서로의 편견이 확인되고, 분단시대에 느껴왔던 막연한 이질감이 공동생활의 어려움을 통해 구체적인 갈등과 적대감으로 발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 통일 이후 발생할 새로운 사회갈등과 통일 후유증

통일 이후의 사회에서는 그 동안 분단상태 하에 별개의 공동체에서 각기 다른 생활을 영위해온 남북한 주민들이 맞부딪치며 더불어 살게됨에 따라 촉발되는 과거와는 다른 성격의 사회 심리적 혼란과 갈등이 발생한다. 뿐만 아니라 통일의 방법과 추진과정에 따라서는 적지 않은 통일 후유증이 나타나게 된다.

이같이 남북한 주민이 함께 살게됨에 따라 발생하는 사회적 갈등의 대표적 유형의 하나는 주로 북한 주민이 당면케 되는 새로운 사회제도와 사회 환경에 개인적으로 적응해 나가는 문제가 가장 긴박한 갈등의 요인으로 등장할 것이다.

대부분의 북한 주민은 새로운 통일국가 체제에서 구체제에서 누렸던 기득권의 상실과 실적 가능성, 기존의 역사관과 가치관의 붕괴 등에서 오는 혼란, 통일 국가에 대한 정당성 평가 문제 등으로 갈등을 느끼게 될 것이

20) 박형중, “남북한의 사회격차와 사회통합”, 민족통일연구원 북한사회연구회 공동 주최 국내학술회의 발표 논문(1997. 10. 20. 다위호텔), 156쪽

며, 새 사회에서 당면케 되는 각가지 판이한 제도와 규범에 적응하는 문제로 많은 혼란과 어려움에 직면케 될 것이다.

또 다른 측면에서 남한 주민이 주로 당면하게 될 통일 후유증 중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통일에 따른 비용 부담문제가 제기될 것이다. 앞서 독일의 사례에서 보았듯이 통일 이후 주로 남한 지역 주민들이 부담하게 될 막대한 통일비용²¹⁾문제는 통일에 따른 불가피한 갈등 요인으로 대두될 것이 분명하다.

통일 국가 건설과정에서 막대한 통일비용의 부담문제는 이를 주로 부담해야 하는 남한 주민의 조세지향 형태로 표출되거나, 누가 얼마만큼을 부담하고 또 이것을 어느 분야에 쓸것인가의 문제로 빈부 계층간이나 남북 지역 주민간의 집단갈등으로 비화될 소지조차 있다.

이밖에 남한 주민들의 북한지역 재산에 대한 소유권 주장이나 반환 요구에 따른 법률적 분쟁, 사회기강의 해이와 도덕률의 파괴에 따른 각종 사회인탈행위 및 범죄행위의 격증 현상, 통합의 방법과 속도 등을 둘러싼 남북간 또는 남한 내 보수주의 집단과 진보주의 집단간의 논란 등이 통일에 따른 후유증으로서 사회적 통합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등장할 것이다.

그러나 통일 후에 나타날 새로운 갈등이나 통일후유증은 통일 실현의 구체적 방법과 과정, 통일 국가의 건설과정에 시행되는 사회 경제정책의 효율성 여하에 따라 상당히 조정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다. 따라서 통일이 가져올 후유증에 대한 부담감과 이에 따른 갈등이 통합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사회정책적 수단에 의해 사전에 적절히 통제되어야 한다.

Ⅲ. 남북한 사회통합의 기본 과제와 통합정책의 추진 방향

1. 사회통합문제의 기본 성격

우리가 통일의 궁극적인 목표로서 지향해 나가야 하는 남북한 사회통합은 “각종 사회갈등과 균열의 외형적 길여라는 소극적인 상황만이 아니라, 통일 사회 내의 이질화와 분리, 차별, 그리고 불평등과 같은 갈등요소들이 현실적으로 제거 내지 감소됨으로써 사회구성원들이 공동체의식을 내면화

21) 독일의 경우 통일 후 지금까지 매년 GDP의 4~5%를 통일비용으로 투입한 바 그 합계액은 91-97년 말까지 7개년 동안 총 1조 3천 660억 마르크 <우리 돈으로 약 1092조 8,0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독일 공보치가 밝힌 바 있음 (98.10.3 동아일보 보도)

함과 동시에 사회체제가 사회구성원들에 의해 정당성을 획득하는 적극적인 상태”²²⁾의 달성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무엇이 통일 사회의 구성원 전체를 하나로 묶어줄 수 있는 것인가를 관심 주제로 하는 사회통합 문제에 관한 연구는 통일 후 체제의 안전과 발전을 도모해 나가기 위한 기본 명제의 하나로 등장하는 것이다.

모든 사회는 변화와 갈등을 겪게 마련인데 이 변화와 갈등을 구조적 조정과 문화적 적응을 통해 흡수하지 못하면 해체되거나 붕괴되고 만다.²³⁾

반세기가 넘는 동안 상이한 체제로 분단되어 각기 다른 방향으로 발전해 온 남북한 두 사회가 체제 통합이란 대 사변을 맞게 되면 사회 모든 분야에 걸쳐 급격한 변화와 변혁이 불가피하게 된다.

이러한 각변 속에서 공동체적 삶의 질서를 회복하고 발전해 나가려면 새롭게 발생하는 사회 문화적 갈등과 혼란이 국가나 사회가 주도하는 통합정책에 의해 효과적으로 극복될 수 있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한 체제 내에서 사회환경의 변화나 상이한 외부 문화의 접촉으로 발생하는 사회 문화적 갈등의 해소 문제는 개인적 차원에서의 적응능력의 문제로 치부될 수 있다.

그러나 상이한 체제의 통합과 같이 급격한 외래적 충격이나 요인에 의한 사회환경의 변화로 갈등이 유발되는 경우 이에 대한 대응책은 개인적 차원만으로 국한될 수 없는 성질의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통일 후의 사회통합은 개인적 차원에서 사회적응력을 배양하는 노력과 함께 체제적 안정과 통합을 촉진키 위한 사회 문화적 대책들이 함께 강구되어야 하는 복합적 성격을 가진 과제이다.

남북한 사회통합의 문제는 또한 남북 주민 사이의 가치관과 의식구조의 이질성의 극복의 문제로 해소되거나 사회 정책적 차원의 갈등 해소 대책만으로 해결될 수도 없는 성질의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궁극적으로 지향해 나가는 ‘마음의 통일’, ‘인간의 통일’을 성취해 나가기 위한 수단적 과제임과 동시에 통일 사회가 궁극적으로 달성해야 할 목표를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것은 단순히 지난 시기 민족의 분단이 남겨놓은 유산을 극복하는 과제로 국한될 수 없는 것이며, 통일과정에서 발생하는 새로운 갈등과 사회적 문제들을 함께 해결해 나감으로써 통일 국가에서 국민적 통합의 기반을 공고히 구축해 나가야 하는 종합 정책적 과제라는 특성을 띤다.

22) 전상인, “통일과 남북한의 사회통합”, <통일문제연구>, 1996, 243쪽

23) 김병로, “북한의 식량난이 사회통합에 미치는 영향”, <통일연구논총>, 제7권 1호, 1998, 민족통일연구원, 135쪽

2. 통일 후 제반 갈등의 해소를 위한 사회통합의 기본 방향

이 땅에 어떤 형태로든 통일이 실현되면 정치적 대립과 행정적 격리가 소멸하면서 남북한 양 지역간의 사회통합의 문제가 일차적인 국내문제로 변화한다.

단일 체제 내에서의 사회통합문제로 나타날 사회갈등의 핵심문제는 대략 남북한의 경제·사회적 격차의 차원, 제도적 통합문제의 차원, 문화·정서적 차원이란 세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고찰할 수 있을 것이다.²⁴⁾

이상의 세 가지 차원의 갈등요인 중에서 정치·경제적 차원의 격차와 제도적 통합문제에 기인하는 대부분의 문제들은 성공적인 사회·복지정책의 추진과 제도적 통합의 진행으로 조만 간에 소멸되거나 경감될 수 있는 것들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문화 정서적 차원의 원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대응은 앞서 독일의 사례에서 보았듯이 사회구성원의 신념과 가치관의 변개, 생활양식의 동질화와 문화체계의 통일까지 결부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단기간 내에 이루어질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는 관점에서 출발해야 한다.

요컨대, 남북한의 사회 문화적 통합은 단기적으로 또는 획일적인 차원의 대책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며, 중장기적 안목에서 점진적으로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는 과제로 인식되어야 하는 것이다.

또한 사회 문화적 통합정책은 원칙적으로 민주적 방식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통합을 위한 정책들이 강제적이고 일방적인 경우 북한주민의 거부감과 심리적 좌절감은 더욱 커질 수 있다.

그러므로 불가피하게 강제적인 방식의 추진이 필요할 수도 있지만 정책의 수립과 추진은 기본적으로 민주적인 절차와 방법으로 수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²⁵⁾

여기서 특히 유념되어야 할 것은 사회통합의 모델로서 통일 한국에서 어떤 가치를 지향해 나갈 것인가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는 점이다. 결론적으로 말해 통일 이후 사회통합은 반드시 인류의 보편적 가치와 시대정신의 구현을 통일 한국이 지향하는 사회통합의 기본 이념과 목표로 삼아 나가는 것이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통합의 궁극적 목표와 가치지향은 평화, 복지, 자유와 평등을 보장하는 민주주의적 가치의 실현과 결코 분리하여 생각할 수 없다.

통일 이후 사회통합정책은 또한 '하나의 민족'을 구현해 나가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갈라져 있는 한민족의 재

24) 박형중, 앞의 논문 145쪽

25) 김상관, "남북한 사회문화공동체 형성방안",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96통일정책포럼 자료집 <정책연구>, 99쪽

결합을 의미하는 것이어서는 아니 된다. 하나의 민족 형성은 과거의 유산을 실질적으로 떨쳐버릴 수 있는 새로운 차원의 국민 형성 작업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통일 한국의 사회통합은 통일 국가의 정체성 구축과 함께 새로운 정치문화의 창조를 기본 목표로 추진되어야 하는 것이다²⁶⁾

3. 남북한 사회통합을 촉진할 제도적 전제조건들

사회 문화적 통합을 위한 구체적 정책방안의 모색은 현재적 갈등대상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미시적 차원에서의 재사회화방안과 잠재적 갈등 대상자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거시적 차원에서의 사회문화통합방안으로 구분되어진다.

이중 미시적 차원의 재사회화방안은 통일 진후 남북한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되는 사회교육적 차원의 각종 재교육프로그램으로 구체화된 것이며, 거시적 차원에서의 사회 문화통합방안은 잠재화되어 있는 사회 문화적 갈등 요인들이 정치, 경제, 사회 각 부문에서 갈등양상으로 현재화되지 않도록 통일 이전 단계는 물론 이후에 걸쳐 문제 발생의 근원을 차단한다는 맥락에서 강구되어야 할 정책방안이다.

이러한 두 가지 차원의 통합책에 의하여 체제의 급격한 전환이나 생활환경의 변화로 인한 사회심리적 혼란과 갈등을 일차적으로 해소하고, 통일 사회의 안정과 발전을 뒷받침해 줄 국민적 통합을 충분히 달성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는 것이 통일 이후를 대비한 사회통합정책의 수립 취지이다.

그러나 통일 독일을 비롯하여 실제로 이루어진 사회적 갈등의 통합사례들을 예의 관찰해 본 일단의 사회학자들이 얻어낸 결론은 새로운 사회의 구성원에 대한 재사회화 노력의 효과나 사회 문화적 이질성의 극복을 위한 문화적 측면의 통합노력에는 일정한 정도의 한계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사계 학자들이 사회통합책을 수립하고 추진함에 있어 함께 강구되거나 고려되어야 할 제도적 차원의 전제 조건으로서 일반적으로 권의하고 있는 내용은 대략 다음과 같다.²⁷⁾

① 통합 쌍방간의 현저한 경제적 격차는 소외를 야기 시키는 근원이 된다. 따라서 사회통합을 촉진해 나가려면 양측의 물질적 생활 수준이 비슷해짐으로써 어느 쪽도 상대적 박탈감을 크게 느끼지 않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②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사회 구성원 모두가 인정하는 정통성 있는 권위체계가 확립되고 효율적인 관료체제가 확보될수록 통합의 효과는 촉진된다.

26) 박영호, 「통일 이후의 국민통합방안연구」, 민족통일연구원 연구보고서 94-34(1996.12), 86쪽

27) 21세기위원회, 「21세기의 한국」, 제4장 "통일한국의 민족공체", (서울: 서울프레스센터) 1994, pp.963-965

③ 통합 쌍방의 구성원이 문화적 일체성을 회복함으로써 공통의 가치지향을 지닐 수 있어야 하며 서로 비슷한 생활양식을 공유할 수 있어야 한다.

공통의 가치 지향과 공통적 생활양식은 공간적으로 가까운 거리에서 반복적 상호 작용을 지속할 때 형성된다. 따라서 쌍방간 교류와 지역간 거주이동이 자유로울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⑤ 쌍방 각 지역의 제반 기관들이 단순한 통일의 열망이나 공통적 가치지향을 넘어 실질적인 이익을 기반으로 상호 의존적인 관계로 연결될 수 있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경제적 협력관계나 생활권의 통합이 진척되면 사회통합도 촉진된다.

⑥ 어떤 형태로든 남북한 주민간에 상호 의사소통의 폭이 확대되어야 한다. 상호 이해를 통해 가치의 합의를 가져올 수 있는 기본적인 수단은 원활한 의사소통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최소한 소통의 매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통로가 마련되어야 한다.

⑦ 체제통합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더 불리해지고 취약한 상황에 놓이게 되는 층의 사회적 경쟁력과 새 환경에의 적응력을 북돋아 주는 제도적 조치(예컨대 취업, 승진, 교육 이수기회의 평등 보장 등)가 우선되어야 한다.

학자들의 통찰을 통해 제시된 이상과 같은 사회통합의 진제조건들은 대부분 남북한 통일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것으로 보아 큰 무리가 없을 것이라 생각되는 것들이다.

IV. 통일 이후 사회통합을 위한 북한 주민 대상 「체제전환교육」의 기본 방향

1. 통일 후 「체제전환교육」의 필요성과 기본 관점

남북한 사회통합 면에서 봉착할 것으로 예상되는 난관의 핵심은 분단시기에 형성되어진 '사회주의적 인간형'을 일시에 민주주의적 시장경제체제에 적합한 "자본주의적 인간형"으로 전환하는데서 겪는 문화적 심리적 어려움이라 보여진다.

이런 관점에서 통일 후 변화된 사회에의 적응과 내적 통합을 촉진해 나가기 위한 핵심적 수단으로서 「체제전환교육」은 새롭게 구성되는 사회 모든 구성원들의 삶의 방식과 가치관을 재 구조화하기 위한 포괄적 시도라 규정할 수 있는 것으로서 이를 위한 노력은 통일 후 정부가 주도하는 국민

정치교육의 필수적인 형태로 나타난다.

통일된 공동체가 하루속히 안정되고, 향후의 발전을 기약해 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사회적 안정과 통합을 저해하는 각가지 갈등과 혼란의 요인들을 근원적으로 해소하고 경감시키는 사회 문화적 차원의 통합노력이 경주되어야 한다.

통일 국가의 건설과정이나 그 이후 단계에서 사회적 통합을 가로막는 장애요인으로 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제반 갈등과 혼란의 상당 부분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각 분야에 걸친 상충하는 정부의 정책적 수단에 의해 일차적으로 해소되거나 예방책이 강구될 수 있는 것들이다.

그러나 이중에서도 남북한간에 사회 문화 체계의 이질성, 가치의식과 행동양식의 상충에 기인하는 일부 사회 문화적 심리적 차원의 문제들은 대부분은 사전 사후에 걸친 국민 교육적 수단이나 치밀한 재사회화 작업에 의하여 해소해 나갈 수밖에 없는 성질의 것이다.

따라서 제도적 외형적 통일만이 아닌 궁극적인 내적 통일을 원만하게 달성하려면, 통일된 사회에 함께 살아갈 남북의 모든 주민들이 기존의 삶의 방식과 가치관, 의식구조를 변화된 환경에 알맞은 것으로 바꾸어 나가도록 하는 의도적인 재사회화 노력이 국가통합정책이란 차원에서 치밀하게 수행되어야 한다.

즉, 제도적인 통일이 일단 이룩되면 남북한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재교육이 필수적인 것이 된다. 그 중에서도 남한이 주도하는 자유 민주적 통일을 가장 현실적 남북 통일의 모델로 상정하는 경우, 상대적으로 더 큰 충격과 혼란에 빠질 것이 분명한 북한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 재사회화 작업으로서 「체제전환교육」의 실시문제가 최우선하는 국가과제로 등장하게 되는 것이다.

독일에서의 경험사례를 교훈 삼아 한반도에 “준비 있는 통일”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북한 주민들의 삶의 방식과 가치관, 의식구조를 체제의 전환에 따른 새 환경에 맞게 재구조화해 나갈 「체제전환교육」의 기본 방향이 적어도 사전에 정립되고, 이에 따른 구체적 실행계획들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정책적 필요에 따라 사계 전문가들의 관심 주제로 최근에 부상되기 시작한 「체제전환교육」에 대한 학계의 연구는 대체로 다음 두 가지 접근 시각에서 이루어져 왔다고 할 수 있다.²⁸⁾

그 하나는 “교수와 재사회화의 개념”으로 접근하려는 것이다. 이것은 통일 사회가 재구성되는 보편적인 정신 문화적 특성에 기초하여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새로운 지식과 행동을 주로 북한 주민들로 하여금 습득하고 훈련

28) 한만길, “북한주민의 통일사회적응을 위한 교육내용의 체계화방안”, <통일연구논총> 제6권 1호, 1997, 민족통일연구원, 105쪽

하도록 해야 한다는 관점이다.

다른 하나는 “학습, 또는 사회적응의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이다. 이는 북한의 특이한 사회구조와 북한 주민들에 형성된 가치관 및 인성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그들 스스로 통일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고양하도록 초점을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진자의 접근방식은 학자들이 말하는 「문화적 보편주의」의 관점에 기초하는 것이고, 후자는 「문화적 상대주의」의 관점에 기초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문화적 보편주의 관점은 통일 사회의 동질성을 추구하는 데 초점이 두어져 있는 반면, 문화적 상대주의는 남북한 사이의 이질성을 일단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하자는 것이다.

즉, 남북한의 정신 문화적 이질성을 전제로 하면서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자는 것이다. 특히 북한의 주민들은 지난 반세기에 걸친 분단 상황하에서 남한과 다른 가치관과 인성을 가지게 되었음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자는 것이다.²⁹⁾

이와 같은 문화적 보편주의 관점에서 보면, 북한 주민 대상 체제전환교육은 남한이 통일의 주체라는 입장에서 남한의 지식과 가치체계를 북한 주민들에게 일방적으로 전파시키는 작용으로 볼 수 있다. 반면에 문화적 상대주의는 북한 사회와 주민들의 특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그에 적합한 학습과정을 마련하고 새로운 사회에의 적응을 돕도록 해야 한다는 접근 관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북한 주민을 대상으로 한 교육은 이상의 두 가지 관점 중 어느 하나에 편중하여 접근하기보다는 양자를 보완 조화시켜 나가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만일 통일 후 북한 주민에 대한 재교육을 문화적 보편주의에 기초하여 일방적으로 접근하는 경우, 남한의 기존 가치기준과 지식에 대한 우월성을 강조하고 북한의 문화체계의 열등성을 전제로 하는 문화적 편견에 빠질 위험성이 없지 않다.

반면에 문화적 상대주의의 관점은 북한 주민의 특성을 인정하고 존중한다는 장점이 있으나, 통합과정에서 그들의 비합리적 가치와 규범, 생활 태도를 장기간 온존시키고 방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맹점을 가지게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통일 사회의 통합을 촉진해 나가기 위한 북한 주민교육은 보편성을 추구하고 나가감과 동시에 다양성을 추구하는 것이어야 할뿐만 아니라, 남북한의 동질성을 회복하면서도 이질성과 차이점을 인정하는 방

29) 한만길, 앞의 논문 105-106쪽

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이 학자들의 일반적 주장이다.

위와 같은 주장의 현실적 타당성은 독일에서 통일 후 제기되고 있는 내적 통합의 문제점들을 자체 평가하고 대안을 모색해 보기 위해 지난 1994년 10월 독일 통일 4 주년에 즈음하여 통일 독일의 정계와 학계 저명인사들이 포츠담에 모여 원탁회의를 가진 후 발표한 이른바 「통일정책의 포츠담 대 원칙」³⁰⁾이 밝히고 있는 바에 의하여 실증적으로 뒷받침되고 있다는 점에 특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

2. 북한주민 대상 「체제전환교육」의 기본 목표

일반적으로 교육의 목표는 그 교육이 지향해 나갈 기본적인 지표와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이다. 따라서 이것을 윤바로 정립하는 일은 교육의 효율적 수행을 보장하는 조건의 하나로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된다.

마찬가지로 통일 후 북한 지역에서 체제전환에 따른 주민교육의 기본 방향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를 논함에 있어서도 이것이 지향되어야 할 지표로서 교육의 목표를 정립하고 이를 명료하게 진술 제시하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북한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체제전환 교육의 기본 목표는 북한 주민들로 하여금 통일 한국 사회의 일원으로서 새로운 삶의 방식에 적응하고, 자율적이고 보람있는 삶을 개척 영위해 나가는 데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를 함양함과 함께 통일된 국가 사회의 안정과 발전에 기여케 하는 데 두어지는 것이라 할 수 있다.³¹⁾

따라서 이 교육은 장기적으로는 하나의 민족공동체 속에 함께 살아나갈 북한 주민들에게 민족공동체의 형성을 가로막는 민족간의 이질성을 극복하고 자유, 복지, 인간의 존엄성 구현과 전체 민족의 번영을 도모해 나가는 통일 국가의 실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신적 기반을 구축함과 아울러 국

30) 참고 : 「통일정책의 포츠담 대 원칙」은 ① 독일의 통일을 서독의 정치적·사회적 체제를 그대로 동독에 이식함으로써 도달하려고 했던 잘못된 시도는 매우 어렵고 모순에 찬 과정을 야기 시켰다... 지금까지의 통일 정책에는 통합문제의 복잡성에 대한 충분한 인식을 바탕으로 사회집단들간에 합의를 도출해 낼 수 있음 그런 체계적인 구상이 결여되어 있다.

② 우리는 신 연방 주류의 구 서독에 일방적으로 통합 내지 동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새로운 공화국을 건설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 이 새로운 공화국을 향한 공동의 목표는 두 나라에서 각각의 역사적 경험과 전통에 따라 상이한 방식으로 추구되어야 하지만, 이 새로운 사회에서는 모두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며, 안정되고 활발한 민주주의가 실현되어야 한다.

③ 따라서 양 지역 주민들의 상이한 역사적 경험과 전통이 이 새로운 사회 건설에 각각 투입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민봉연, 「남북한 사회통합」, 「통일 독일의 사회통합」, 1997, 37쪽에서 재인용)

31) 박용현, 통일교육원 97년도 연구교재 「체제전환교육」, 제8장; 개인과 사회, 261쪽

민통합을 위해 필수적인 지식, 능력, 태도 및 자질을 함양하려는 것이며, 단기적으로는 통일 후 북한지역에 새롭게 도입될 정치·경제체제에 대한 인식을 공고히 하고, 이러한 정치·경제과정에 동참할 수 있는 지식과 능력을 제고시키며, 통일된 사회 문화에 바탕하고 있는 기본적 가치규범 및 제도를 이해하고, 이를 개선시켜 나갈 수 있는 시민적 능력을 배양하는 교육이라 규정될 수 있을 것이다.³²⁾

3. 기본 추진 방향

통일 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재교육은 일차적으로 체제의 통합에 따르는 여러 가지 사회적 혼란과 갈등을 하루 속히 극복하여 내면적 통일을 이룩해 나가기 위해 필수적인 것일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는 통일 이후 국가 사회의 안정과 항구적 발전을 도모해 나가기 위한 필수적인 정책수단의 하나로 강구되는 것이라는 양면적 성격을 가지는 것이다.

이러한 특수한 성격 때문에 교육을 실행함에 있어서는 앞서 살펴본 바 목표를 어떻게 세우고 이것을 어떠한 방법과 내용으로 달성해 나갈 것인가 하는 집뿐만 아니라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지향점이 함께 검토되어야 한다.

첫째, 북한주민 대상 체제전환교육은 남북한 사회의 통합을 촉진해 나갈 수 있는 종합적인 통합대책의 일환이란 차원에서 강구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통일 후 남북한 사회를 어떻게 통합해 나갈 것인가 하는 종합적인 체계 속에서 교육계획이 수립되고, 다른 분야의 통합대책들과 연계 시행되어야 비로소 교육의 상승적 효과가 보장될 수 있는 것이다.

둘째, 이 교육에서는 새로운 사회에 대한 적응능력을 키워주는 교육뿐만 아니라 통일 한국의 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과 품성을 길러주는 정치교육, 특히「민주시민교육」이 병행되어야 한다.³³⁾

셋째, 북한주민들의 사회적응력을 제고하기 위한 교육은 피교육자의 능동적인 주체성을 확립하도록 하는 데 주안점이 두어져야 한다. 특히 북한 주민들이 전체주의적이고 일방적인 교육에 익숙해 있고, 상황에 피동적으로 대처를 하는 성향을 갖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피교육자의 능동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교육방법을 개발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또 사회적응력을 함양하기 위한 교육과정은 실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관심 문제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북한체제의 문제점을 비판하고 남한 체제의 우월성을 강조하는 것과 같은 이념적인 차원의 교육은 실생활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특히 유의해야 한다.

32) 민족통일연구원, 「독일의 정치교육연구」, 연구보고서 95-12, 1995.12, 106쪽

33) 이민수 외 5인, 「바람직한 통일문화」, 통일문화 시리즈 97, 민족통일연구원, 1997

넷째, 통일 후 이질적인 남북의 가치체계가 충돌됨에서 오는 갖가지 갈등을 근원적으로 줄이고 민족적 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질적인 가치관을 통합시킬 수 있는 가치통합교육이 체계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다섯째, 교육과정의 편성에 있어는 대상인 북한 주민들의 사회 인구학적 특징이 다양하기 때문에 교육대상자들을 유형별로 분류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각 집단에 대한 기본적인 교육목표는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집단 유형별로 교육내용과 교수방법, 교육의 주안점을 다양하게 구성하여 대상자의 사회적 속성에 적합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여섯째, 이 교육에서는 특히 통일 한국 사회의 긍정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측면도 알려줌으로써 새 사회의 다양한 실제 모습을 이해하도록 해야 한다. 사회의 다양한 모습을 객관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실제 생활에서 겪게 되는 고통을 스스로 인내하고 해소해 나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다.³⁴⁾

일곱째, 북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에서는 통일에 따르는 정신적인 혼란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교육내용도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통일 후 급격한 체제 변화에 따른 북한지역 주민들의 심리적 갈등과 소외감은 어떠한 갈등보다 심각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기존의 가치 판단기준과 신념체계의 붕괴에 따른 심리적 부담감과 혼란을 최소화하고 새로운 사회에서 자아정체성을 확립하는 데 기여하는 교육은 건진한 가치관과 자아관의 형성과 재정립을 위해 필수적인 것이 된다.

여덟째, 이 교육은 다양성의 이해를 통해 획일적 사고방식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자신의 견해와 다른 견해를 대화와 담화를 통하여 수렴하고 자기와 다른 견해를 수용하는 그런 연습 즉, 민주적인 타협과 관용의 정신에 대한 훈련이 이루어져야 한다.

아홉째, 통일 후 북한의 주민들은 정치교육에 대단히 회의적인 반응을 보일 것이 분명하다. 일방적으로 강요되었던 구 체제하의 '인민교육'(정치학습)의 경험 때문에 정치교육을 세뇌의 수단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높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불가피하게 실시되는 국가 주도형의 정치교육에서는 먼저 대상인 주민들의 신뢰를 획득하려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 다음으로 민주적 사고와 행동을 습득시키며, 필요한 타협과 현실에 대한 건진한 비판 및 판단능력을 배양하는 것을 기본 과제로 삼는 것이어야 한다.

열번째, 통일 후 내적 통합을 촉진해 나가기 위해 남북한 주민들이 서로 접촉하고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 제공함으로써 수 십 년간 쌓여 온

34) 민족통일연구원, 「북한 이탈 주민의 사회적응에 관한 연구」, 연구보고서 96-18, 1996, 100쪽

정보교류와 의사 소통상의 장애를 이러한 인간적 접촉을 통해 극복하려는 마음의 자세를 길러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주민들이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는 기회를 가급적 많이 만들어줌으로써 개인적 경험과 정보들의 교환이 가능해 질 것이다. 또 그러한 접촉과 대화의 기회가 과거에 쌓여온 상호간의 편견과 오해, 부정적 선입관들을 쉽게 허물게 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

4. 「체제전환교육」의 영역별 주안점 및 중심 내용 주제

이상과 같은 목표와 방향에서 전개되는 「체제전환교육」의 기본 과정은 이것이 지향해 나가는 양면적 목표에 맞추어 「사회적응교육」과 「민주정치교육」이란 두 가지 영역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는 통일 후 우리가 이룩해 나가야 할 '마음의 통일' '인간의 통일'이란 관점에서 주로 북한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될 「체제전환교육」을 위와 같이 두 가지 목표 영역으로 구분하고, 각 영역별로 교육과정상의 주안점과 중심이 될 내용 주제들을 좀더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기로 한다.

(1) 사회적응교육과정

독일의 선례와 북한 이탈 주민들의 적응과정에서 이미 살펴보았듯이 통일 사회에서 북한 주민이 가장 먼저 직면케 되는 심리적 혼란과 갈등은 지금까지의 생활과는 전혀 달라진 제도와 환경에 쉽게 적응해 나갈 수 없다는 불안감과 무력감에 기인하는 것이 될 것이다.

따라서 북한 지역 주민들에게 이러한 새로운 생활환경에 적응해 나갈 수 있도록 개인적 차원의 사회적 역량을 지원하는 교육은 통일 사회의 안정을 회복하기 위해 일차적 과제가 된다.

일반적으로 개인의 새로운 사회에서의 적응과정은 대체로 「체제적응」, 「생활적응」, 「심리적 적응」이란 세 가지 차원으로 나누어 고찰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세 가지 차원의 사회적응의 각 과정은 독자적 내지는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 이상이 상호 중첩되거나 동시에 진행되는 복합적인 사회화과정인 것이다.

때문에 여기서는 사회적응을 지원하는 교육의 주안점과 중심 주제의 편성을 실제 사회생활에서 당면케 되는 국면을 기준으로 구분하여 정치·경제 사회·문화생활 등 4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고찰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인 것이 될 것이다.

가) 정치생활 적응교육

통일 후 사회에서 사회적 적응력을 배양해 나가려면 민주시민사회에서 진히 다른 가치관과 경험을 가진 남한 주민과 더불어 살아가는 데 필요한 민주적이며 자주적인 정치적 생활방식을 신속하게 습득할 수 있도록 하는데 우선 주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새로 도입된 정치체제의 기본 원리인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를 이해하고 민주적인 생활방식을 직접 경험하게 함으로써 개방적인 사회, 다양한 가치와 행동이 허용되고있는 민주사회에서 자신의 판단과 의지에 따라서 의사를 결정하고 스스로 행동할 수 있는 의사결정능력의 함양에 주안을 두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정치적 현상을 올바르게 이해함과 아울러 민주적인 질서와 규범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고 그것을 습관화할 수 있는 생활태도의 훈련이 선행되어야 한다.³⁵⁾

새로운 정치상황에 개인적 적응력을 키워나갈 생활교육의 중심 주제는 ① 정치권력과 권력관계에 대한 이해, ② 개인의 정치적 참여능력 배양에 기초가 되는 민주적 정치과정과 기본 제도의 이해, ③ 현대 국제정치에 대한 이해 등이 될 것이다.

나) 경제생활 적응교육

독일의 통합사례나 북한 이탈 주민의 우리 사회적응과정을 관찰해 본 결과 시사하는 바는 통일 사회에서의 생활상의 부적응이나 통일 후 내적 통합의 문제를 유발하는 대부분의 원인은 경제적 측면에서 느끼는 상대적 불평등의식이나 새로운 자본주의 시장경제제도나 생활방식에 대한 이해의 부족에서 유발되고 있다는 점을 우리는 특히 유념할 필요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경제생활 분야의 적응력을 키워주는 교육은 자본주의의 원리와 시장경제의 기본 운용방식을 이해하고 그 속에 생활해 나감에 필요한 기본적인 경제지식과 생활태도를 형성하도록 하는데 주력해야 한다.

이와 함께 남한 사회의 부정적 측면인 물질만능주의, 금진만능주의 등과 같은 의식, 행태 등을 비롯하여 무한적 자유경쟁의 병폐 등 자본주의 제도가 안고 있는 구조적, 현실적 문제점과 병리현상도 함께 이해시켜 체제에 대한 갈등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따라서 경제생활에 대한 적응력을 함양해 주기 위한 교육의 중심 주제는 ① 자본주의 정신과 국민경제의 기본구조와 경제순환에 대한 이해, ② 자유시장경제체제의 기본 질서와 운영원리, ③ 각 경제주체의 역할과 사회적

35) 한만길, 앞의 논문 108~112쪽

책임, ④ 화폐·금융·재정제도와 국민생활 ⑤ 자산의 증식과 가계관리요령 등으로 구성된 것이다.

다) 사회 문화생활 적응교육

통일 후 북한 주민이 새로운 사회생활과 새로운 문화에 적응해 나가는 것은 공동체 속에 새로운 인간관계와 사회적 관계를 설정해 나가는 일이며, 총체적 삶의 양식으로서 새로운 자본주의 문화를 원만하게 수용하는 과정이다.

따라서 북한 주민이 새로운 사회생활에 원만히 적응해 나가려면 우선 자유민주주의 사회의 바탕이 되고 있는 개인주의의 장단점에 대한 이해에 기초하여 다양하고 개방적인 사회에서 상호간에 협력할 수 있는 태도를 함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뿐만 아니라, 개방화된 대중사회가 가지는 문화적 특성을 사실대로 이해하고 우리 사회의 부정적인 측면까지를 편견 없이 받아드릴 수 있는 개인적 인식능력도 함께 배양해야 한다.

또한 다원성 속에 조화를 추구해 나가는 것이 다원주의 현대 사회에서 현명하게 생존해 나갈 수 있는 삶의 기본 원리임을 인식케 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밖에도 사회문화생활분야에서 새 사회에 대한 적응력을 키워 나가는 교육에는 21세기 정보화 사회에서 자아 정체성을 잃지 않게 하기 위한 정보문화교육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편성되는 교육의 중심 주제는 ① 다원주의 개방사회의 특성, ② 현대사회의 제 문제(사회적 격차와 사회갈등문제, 청소년문제 등 포함), ③ 남한 주민의 기본적 가치관과 행동양식의 차이점과 공통점, ④ 대중매체 활용방법, ⑤ 남북한 생활언어의 차이점 ⑥ 남북한 사회가 공유하는 전통문화의 이해, ⑦ 21세기 정보화 사회와 현대생활 등이 될 것이다

라) 일상생활 적응교육

새로운 체제에서 북한 주민이 성공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해 나가려면 생존의 일차적 조건인 직업과 직장이 안정적으로 보장되어야 하고, 직장과 가정에서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공·사적인 생활과정에 긴장이나 갈등이 쌓이지 않고 항상 평안이 유지되어야 한다.

따라서 일상적인 생활상의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적응력을 길러주기 위한 교육은 이 점에 주안 하여 새로운 직업생활에 적응하는 교육과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초 지식과 정보를 진수해 주는 두 과정으로 편성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중 통일 사회에서 새 직업을 선택해야 하고, 생경한 새 직장분위기에

개인적으로 적응해 가야하는 북한 주민과 학생들을 지원하려는 직업생활적응교육은 크게 다음 세 측면에 중점이 두어져야 한다.

첫째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바람직한 직장생활을 하는 데 필요한 자세나 태도 및 건전한 직업관을 형성해 나가도록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주민 스스로가 새로운 체제하에서 변화하는 직업세계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토대로 자신의 능력과 적성에 알맞은 직업 및 진로를 선택하고, 전환할 수 있는 능력을 신장케 하는 것이다.

세 번째는 남북한의 산업구조 및 기술수준의 현격한 차이로 인하여 발생할 구조적 대량 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기초적 직업능력을 배양하고 산업기술능력을 습득할 수 있는 직업교육의 실천문제이다.³⁶⁾

다음으로 일상생활에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전수해 주려는 교육의 주제 선택은 통일 후 사회에서 북한 주민에게 가장 심각한 고통과 갈등을 안겨다 줄 주된 원인은 자본주의 체제하의 일상생활에 기초적으로 필요한 지식과 정보가 크게 부족하거나 이웃의 생활관습을 알지 못함에 기인하는 것이라는 경험적 연구결과에 기초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 교육은 통일 후 변화된 생활환경 하에서 불편과 혼란을 초래하거나, 대인관계에서 불필요한 오해를 야기할 개연성이 높은 실제 생활상의 문제에 관한 기초적인 지식과 정보를 전수함과 함께 새로운 남한 사회의 생활양식을 비롯한 일반적인 사회관습이나 관행을 사전 숙지케 하고 혼란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하는 데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

이와 관련된 직업생활적응교육에서의 중심 주제는 ① 통일 사회에서 직업선택의 기준과 요령, ② 각종 직업정보의 신속한 습득 및 활용방법, ③ 자본주의사회의 직업윤리와 직장 내 성공적 인간관계 유지요령 등이 된 것이며,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초 지식과 정보를 전수하는 교육요소로서는 ① 남한 주민의 주요 생활관습과 관행(예절교육 포함), ② 남북한 일상용어 및 주요 용언상의 차이점(남한의 상용 한자와 외래어, 주요 시사용어 등 언어생활의 차이점 중심), ③ 각종 교통 및 정보·통신수단의 이용안내, ④ 일상 생활과 직결된 법률상식, ⑤ 실업보험, 의료보험 등 각종 사회보장제도와 이것의 수혜절차 ⑥ 신앙생활과 여가생활 등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2) 「민주정치교육과정」

통일된 국가 사회의 안정과 발전을 도모해 나가기 위해서는 현존하거나 예상되는 갈등과 혼란을 정신 문화적 차원에서 예방하거나 해소하는 소극

36) 한만길, 앞의 논문 118쪽

적인 재사회화대책만으로는 충분한 것이 될 수 없다. 다시 말해, 통일 후 북한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재교육프로그램은 새로운 사회에의 적응력을 키워나가는 것만으로 국한되어서는 안 된다.

여기에는 통일 국가 건설과정과 이후의 체제적 안정과 발전을 뒷받침해 나갈 수 있는 정신 문화적 기반 요소들을 함양하려는 정치교육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통일 사회의 안정과 체제의 발전을 보장해 나가기 위한 정치교육의 주제 요소로서 무엇보다 강조되는 것은 '민족공동체의식' 이다.

통일 이전 단계에서 남북한의 주민들에 공유된 동족의식이 통일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원동력이었다면, 통일 이후의 그것은 통일 국가 사회의 발전을 위한 추동력이 되는 것이다.

남북으로 분단되어 상호 적대와 단절 속에 오랜 동안 살아온 탓으로 크게 파괴되어 있는 민족공동체의식을 회복 고양하는 것은 통일 성취의 원동력을 확보하는 일이 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통일후 한민족공동체를 유지 발전시켜 나가는 기반 조건을 구축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특히 강조되어야 한다.

둘째로 독일 통일의 선례에서 이미 살펴 본 바와 같이 통일 후 북한 주민 역시 체제통합에 따른 문화적 충격 속에 정체성의 위기에 당면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정체성의 위기에 당면할 가능성은 남한 주민보다는 북한주민들에게 더 큰 것이 될 것이 거의 분명하므로 이에 대비하여 북한 주민들에게 개인적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민족적 차원에서 정체성을 확립시켜주는 교육적 노력이 또한 강화되어야 한다.

셋째로 통일된 민족공동체의 일원으로서 통일 한국의 미래상을 실현해 나감과 동시에 통일 체제의 항구적 안정과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민주적 시민성의 함양과 민주적 정치문화의 정착에 주력해 나가야 한다.

통일 독일의 선례에서 볼 수 있듯이 통일 이후 국가 체제의 정당성에 대한 확신이 심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북한 지역 주민이 당면한 현실에 대한 불만과 상대적 차별의식, 소외감 등의 축적은 통일 이전 시대에 대한 향수에 빠지게 하거나 구 체제에 대한 막연한 동경심을 유발함으로써 정치적 문화적 차원의 갈등을 야기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북한 주민들에게 새 체제에 대한 정당성을 심어주기 위해서는 통일 한국의 기본 이념과 체제에 대한 바른 인식과 함께 북한 체제에 대해 스스로 비판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해 주는 새 차원의 「정치사상교육」이 병행되어야 한다.

이밖에도 북한 주민들에게 앞으로 건설해 나갈 통일 국가의 미래상에 대한 확신을 심어줌과 동시에 통일 국가가 당면하게 될 내외의 도전요소와

경제 사회적 문제점에 대비하고, 이를 극복하려는 의지를 고취하는 것은 통일 사회의 안정과 발전을 뒷받침하는 정신 문화적 기반을 공고히 하는 일이 된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통일 정부가 주도해 나갈 「민주정치교육」의 기본 주제로서 특히 강조되어야 할 내용은 ① 통일 한국의 기본 이념과 체제(헌법 질서) 이해, ② 북한 체제의 모순과 공산정권의 역사적 과오에 대한 바른 인식, ③ 통일 한국의 국제환경과 도전 요소 인식, ④ 민족공동체의식, ⑤ 올바른 역사관의 정립과 역사적 현실의 이해, ⑥ 민주시민의 자질과 바람직한 태도(민주시민교육요소), ⑦ 통일 한국의 미래상(통일 조국의 청사진, 새 국가건설의 목표와 이념, 기본 체제 등)과 대 내외의 도전과제 등이 될 것이다.

이상에 열거된 체제전환교육의 영역별 주안점들은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일반적이며 보편적인 교육(비공식교육과 공식교육을 모두 포함하는)을 전제하고 있는 것들이다.

따라서 이를 구체적인 교육과정이나 특수 프로그램에 투입할 경우에는 교육대상의 특성과 지적 수준에 따른 학습수요에 맞게 그 범위와 중점, 우선 순위를 개별적으로 선택하고, 세부 학습요소를 재구성하여 운용하여야 할 것이다.

5. 기본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상에 특히 유의할 점들

통일 이후 북한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체제전환교육의 기본 교육과정은 당시에 제기되고 있는 기본적인 사회적 문제와 갈등의 내용, 내외 환경적 여건의 변화상, 북한 주민에 형성되어진 가치의식과 행위규범의 특성, 특이한 정서적 요인 등을 감안하여 적절하게 편성되어야 할 것이나, 시행상에 효과성을 제고해 나가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기본적 관점들을 특히 유의하여 편성해야 한다.

첫째, 통일 이후 북한주민이 당면케 될 사회적 상황은 체제통합을 이룬 직후와 제도적 통합이 완결되고 사회적 안정을 어느 정도 회복해 나가는 그 이후 단계는 같은 성질의 것이 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북한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정치교육의 기본 교과과정은 그 적용 시점에 따라 통일 초기단계(직후부터 2~3년 내)와 통일 후기단계(통일 후 3~5년)로 구분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와 함께 과도 통합단계에서 시행되는 북한지역의 정치교육은 체제통합을 지원하고 촉진해 나가는 데 일차적인 목표를 두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교육의 일차적 대상으로는 정당을 비롯한 제반 사회단체나 공공단체, 기타 교육적 영향력을 가진 교사 교수 등 사회 및 학교교육의 매개자들이 선정되어야 하며, 연후에 일반 주민을 대상으로 확대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둘째로 통일 후 상황하에서 북한 주민은 크게 보아 북한 내에 계속하여 잔류하는 대부분의 주민과 새로운 직장이나 기회를 찾아 남한지역으로 이주하는 사람들로 나뉘어 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 양 집단은 서로 다른 성격의 사회 문화적 갈등에 당면케 될 것이므로 이에 대응하는 재사회화대책으로서의 교육과정은 원칙적으로 대상의 성격에 따라 남한 사회 유입 북한 주민과 북한지역 내 잔류 주민을 구분하여 편성하여야 한다.

이중에서 북한 잔류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기본 교육과정은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각급 학교교육과정과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한 사회교육과정으로 다시 구분하고, 이 양자가 상호 내용상의 일관성이 유지되도록 편성하여야 한다.

또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교육에서는 일선에서 체제전환교육을 직접 담당할 자를 대상으로 하는 「전문가교육과정」을 별도로 편성 운영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셋째로 북한 주민은 과거의 출신 성분에 따라 아래와 같은 3개 집단으로 분류하여 집단별 특성에 맞는 특별 재교육프로그램을 별도로 편성 운영하는 것이 일층 효과적일 것이다.

- 제1집단 ; 노동당 간부집단 20여 만 명과 노동당원 300만 명
- 제2집단 ; 비 당원인 일반 주민 1,700여 만 명
- 제3집단 ; 여러 가지 이유로 북한의 구체제하에서 정치범수용소에 수용되어 극한적인 어려움을 겪으며 살아온 약 20만 명에서 40만 명으로 추산되는 피해 집단

넷째로 일반 주민의 사회적응을 돕기 위한 교육은 사회 각 분야에 걸친 다양한 내용을 체계적으로 지속적으로 실시되어야 상승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를 위한 교육기회는 학습자의 여건과 교육 수요, 지식 수준 등에 따라 기본교육, 심화교육, 전문교육 등으로 구분하여 반복적으로 부여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로 교육 대상자의 특성과 일반적인 정서에 알맞은 내용체계와 다양한 교육방법을 개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교육대상자의 다양한 사회적 특성과 인성의 차이에 따라 적절한 교육내용과 방법이 선택되도록 특히 유의해야 한다. 교육의 내면화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통제적 주입식 방식이 아닌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판단

에 기초한 조장적 교육방법을 원용한 대상별 목적별 특수 프로그램을 개발 적용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관련된 정치교육프로그램의 기획과 운영에 있어서는 북한 주민 대부분이 과거와 같은 일방적인 정치학습에 심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특히 유의해야 할 것이다.

북한지역의 일반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재 사회화교육은 각종 교육연수 기관이 주관하는 정규 교육과정뿐만 아니라 매스미디어(신문 잡지 등 인쇄 매체, TV 라디오 등 전파매체, PC 통신 등 전자영상매체), 영화, 연극, 대중예술공연 등 다양한 교육기관과 매체수단들을 직·간접적으로 활용하여 다각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상승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밖에도 교육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남북한 민간단체나 지방자치단체 간의 자매결연을 통한 접촉기회를 확대하고, 남북한 주민간의 「만남의 장」이나 공동 문화행사 등을 개최하도록 정부가 권장하는 방안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여섯째로 교육 주관기관간에 교육내용상의 일관성이 확보되어야 함은 물론 관련 특수 교육·홍보프로그램간에 연계성, 체계성이 유지되도록 운영되어야 한다.

특히, 학교교육과 사회교육의 내용과 방향이 서로 상충되거나 단절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보조수단으로 활용되는 각종 비정규 교육매체들(매스 미디어, 영화 연극 등 대중공연 예술 프로그램)이 전달하는 단편적 메시지가 정규교육의 취약점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조직화되고 그 방향이 수렴되어야 한다.

일곱째로 각종 재교육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실행함에 있어서는 주관자들이 상대적으로 우월한 자기들만의 입장 표현이나 과시적 행위가 피교육자의 자의식을 자극하거나 열등감을 유발하는 일이 없도록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남북한 주민간에 개재하는 마음의 간격을 좁혀주려는 노력이 선행되지 않고는 어떠한 교육적 노력도 큰 성과를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V. 결 론

우리가 앞으로 추구해 나가야 하는 통일은 단순한 정치적·경제적 합병 형태로 이루어지는 제도적 통일만을 의미하는 것이어서는 아니 된다. 외형적인 통일만이 아닌 내면적으로 두 사회가 하나로 통일되는 것이어야 한다.

다시 말해 남북한 주민간에 “인간의 통일”, “마음의 통일”을 이룩할 수 있는 사회 문화적 통합 즉, 사회 문화적 공동체가 형성되어야 이 땅에 비로소 완전한 통일이 달성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여기서 궁극적 통일 형태로서 남북한의 사회 문화적 통합이란 둘로 나뉘어 이질화된 사회·문화체계의 통합과 함께 새로운 통일 사회에서 더불어 살아가게 될 남북한 주민의 이질화된 가치관, 의식구조, 행동양식의 동질화를 전제로 하는 것이다.

그런데 남북한 사회의 내적 통합은 정치 제도적인 통일만으로 지질로 달성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다. 이를 효과적으로 달성하려면 이것을 촉진해 나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적 전제조건들을 구축하는 일과 함께 사회 문화적 차원에서 갈등과 혼란을 야기하는 요인들을 근원적으로 불식해 나가는 교육적 대책들이 함께 경주되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최근 통일 후를 대비하는 주요 정책과제의 하나로 부각되고 있는 통일 후 북한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재교육대책은 민족공동체적 통합을 위한 종합대책의 일환이란 차원에서 강구되고 추진되어야 한다는 근본적인 성격을 가지는 것이다.

우리보다 한 걸음 앞서 통일을 이룩한 독일이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통합의 위기로부터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의 하나는 제도의 통합보다 사회의 통합 즉, 마음의 통합이 훨씬 어렵고 복잡한 과제라는 점이며, 새로운 제도의 이식은 그 제도 뒤에 숨은 인간의 고려 없이는 쉽게 성공할 수 없다는 점이었다.

통일 후 남북한 지역의 주민들을 하나로 통합하는 것은 결국 새 국가의 국민적 정체성을 확립하는 일이 된다. 통일 후 국민적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는 근간은 통일 한국의 사회 구성원 모두가 새 국가의 일원으로서 “우리”라는 민족공동체적의식을 갖도록 하는 것이다.

결국 성공적인 통일은 남북한 주민에 대한 성공적인 재사회화가 바탕이 되는 사회통합을 통해서 비로소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새 사회에서의 체제전환과정이 새 국가의 모든 시민들에게 새롭고 좋은 경

힘들로서, 그리고 정당한 것으로 자연스럽게 수용될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본고에서는 통일 이후의 사회에 제기될 사회 문화적 차원의 갈등이 통일 국가 건설 과정과 그 이후의 국가 사회의 안정과 발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주목하여, 이에 대응할 사회통합대책의 일환으로서 특히, 북한주민에 대한 재교육의 방향을 정립하고 이러한 방향에 맞는 재사회화 교육의 중심주제를 도출 제시해 보려 시도한 것이었다.

이러한 논구의 결과가 우리에게 주는 중국적인 시사점은 대체로 다음 세 가지로 집약된다.

첫째로 통일은 양 사회의 정치 경제적 통합, 제도적 통일을 통해서 일차적으로 이루어지지만 궁극적으로는 남북한 주민들간의 시민적 통합을 통해서 완수된다. 그런데 정치적 경제적 통합은 독일이 경우와 같이 내외환경에 따라서는 급격하게 발생할 수도 있지만 시민들간의 인간적 내적 통합과정은 그렇지 못한 성질의 것이다.

따라서 남북한의 실질적인 통일을 앞당기는 길은 제도적 통일이 이루어지기 이전부터라도 남북한 시민간의 '마음의 통합'을 위한 노력들이 기울려져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로 주제와 관련하여 특별히 강조되어야 할 것은 남북한 사회의 정확한 현실에 대한 보다 집중적이고 체계적인 학문적 연구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여기서 연구란 남북한 양 체제에 대한 조사연구에 시야를 국한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 이를 넘어 양 사회의 지배적인 문화와 주민들에게 실제로 내면화되어 있는 주관적 현실에 대한 실증적 연구도 포함되어야 한다.

셋째로 북한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재사회화교육방안을 강구하는 일과 관련하여 앞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후속 과제 중의 하나는 대상의 특성과 수준에 따라 가르칠 교재를 사전에 개발하고, 이것을 실제 가르칠 전문요원들을 훈련 확보하며, 교육을 구체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을 미리 강구해 두는 일이다.

이 같은 후속 과제들을 효과적으로 수행해 나갈 수 있는 실용적인 접근 방법의 하나는 90년 후반에 접어들어 그 규모가 날로 확대되어 가고 있는 북한 이탈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 프로그램의 운영 과정을 본 연구에 필요한 실증 정보 자료의 수집원으로서, 연구결과의 검증 수단으로서 폭넓게 활용하는 것이라 생각된다.

참 고 문 헌

- 김광린, “탈북 귀순자 체제적응교육의 기본 방향”, 통일연수원 주최 통일 대비교육 워크숍 주제 발표문, 1995. 10.27,
- 김상균, “남북한 사회·문화공동체 형성 방안 - 남북한 주민 재사회화 실시 방안을 중심으로”, '96 통일정책자료집 <정책연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1996
- 김 옥 외 6인, 「통일이후의 사회와 생활」, 미래인력연구센터, 1996
- 김용호·홍용표, “통일 전후 사회환경 변화에 따른 통일교육방향 설정 연구”, 「통일과 북한 사회문화(상)」, 통일문화시리즈 96-02
- 김학성, “독일 사례를 통해 본 문화적 이질성 극복방안”, 민족통일연구원 주최 제14 회 국내학술회의 발표논문(1994. 11. 29)
- 손기웅 외 2인, “통일 한국의 사회통합과 동화교육-독일 및 베트남 사례 분석을 토대로-”, 「한반도 준비통제」, 준비통제자료집 19, 국방부, 1996.
- 민성길, 진우택, “사람의 통일” : 정신의학적 접근,” 송 자, 이영선(편), 「통일 사회로 가는 길」 (서울 : 도서출판 오름, 1966)
- 박병석, “한국의 민주화와 정치사회의 변화”, 한국정치학회 워크숍(94. 11. 9. 고대 인촌기념관) 발표논문 3쪽
- 박영호, “통일한국의 정치사회적 갈등양태와 해소방안: 신정치문화의 구축을 위하여”, 「세계질서의 변화와 한반도통일」, 한국정치학회, 1994
- 박용현, 통일교육원 연수교재 「체제전환교육」 제8장; “개인과 사회”
- 박형중, “남북한의 사회격차와 사회통합”, 민족통일연구원 북한사회연구회 공동 주최 국내학술회의 발표논문, 1997. 10. 20.
- 서재진, 「또 하나의 북한 사회-사회구조와 사회의식의 이중성연구」, (서울; 나남출판, 1995)
- 신 윤, “독일통일에서 나타난 동독주민의 문화적 갈등과 그 해소방안”, 「통일과 북한 사회문화(하)」, 통일문화시리즈 96-2, 민족통일연구원, 1996.
- 이금순·송정호, “북한 이탈주민의 사회적응교육방안”, <통일연구논총> 제6권 1호, 1997, 민족통일연구원
- 이민수 외 5인, 「바람직한 통일문화」, 통일문화시리즈 97, 민족통일연구원, 1997

- 전경옥, “통일 한국의 민주시민교육”, 「바람직한 통일문화」, 통일문화시리즈 97, 민족통일연구원
- 전상인, “통일과 남북한의 사회통합”, <통일문제연구> 1996, 평화통일연구소
- 조찬래 외, 「남북한통합론」 (서울; 대왕사, 1998)
- 한상우, “한반도 통일에 대비한 통독 사회의 문제점에 관한 연구 -사회적 정신적 및 심리적 갈등을 중심으로-”, 통일원 '92 연구논문 1992
- 한만길, “북한 주민의 통일 사회 적응을 위한 교육내용의 체계화 방안” <통일연구논총> 제 6권 1호, 1997, 민족통일연구원
- 한만길, 「통일시대 북한교육론」 (서울; 교육과학사, 1997)
- 민족통일연구원, 「통일 이후 국민통합방안 연구」, 민족통일연구원, 1994. 12. 연구보고서 94-34
- 민족통일연구원, 「독일의 정치교육 연구」-한반도 통일대비 정치교육에의 시사점 분석-, 연구보고서 95-12, 1995. 12, 민족통일연구원
- 민족통일연구원, 「북한 이탈 주민의 사회적응에 관한 연구」, 연구보고서 96-18. 민족통일연구원, 1996. 12
- 민족통일연구원, 「남북한 사회통합 -비교 사회론적 접근」, 민족통일연구원 학술회의 총서 97-04, 1997
- 21세기위원회, 「21세기의 한국」 (서울; 서울프레스센터, 1996)
-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통일연구」, 제1권 제2호, 1997년